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100245-13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 김용렬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성주인 | 선임연구위원 | 주거·교통·안전·환경 부문
김광선 | 연구위원 | 경제·일자리 부문
마상진 | 선임연구위원 | 교육·문화 부문
이순미 | 부연구위원 | 보건·복지·돌봄 부문
한이철 | 연구위원 | 총괄 지원
권인혜 | 부연구위원 | 정책추진체계 개편
민경찬 | 초빙연구원 |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제도 개편
정민주 | 정책전문연구원 | 조사설계, 조사수행, 정책조사

연구보고 E2024-01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발간등록번호 | 11-1543000-100245-13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4.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용 렬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성 주 인 선임연구위원

김 광 선 연구위원

마 산 진 선임연구위원

이 순 미 부연구위원

한 이 철 연구위원

권 인 혜 부연구위원

민 경 찬 초청연구원

정 민 주 정책전문연구원

연구 목적

-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도농 간 인구 규모,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서비스 이용에서 불균형이 심화하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 및 농촌소멸의 위험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 시설 노후화, 이상 기후와 난개발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활에 직결된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어촌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약화되는 농어촌 공동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이러한 농촌소멸 위험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촌(New Ruralism)’으로의 전환, 생활인구 확대, 범부처 통합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삶의 질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부처 사업의 통합 추진과 농촌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삶의 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인구 감소, 농촌소멸 위기, 지방분권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농촌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5차 기본계획 기간(2025~2029)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삶의 질 정책 추진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 지난 20년간(2004~2023) 추진된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과 제4차 기본계획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감소와 농촌소멸 이슈에 대응하는 계획과 정책을 분석해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개선점을 도출한다. 또한, 2024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제도와 삶의 질 정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 및 정책 추진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제5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비전, 목표, 전략을 도출한다. 농어촌 주민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 및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새로운 역할을 검토해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 정책 추진 여건 변화, 유관 계획·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한다. 전략별 세부추진과제는 원내 연구진과 부문별 외부 전문가로 ① 경제·일자리, ② 주거·교통·안전·환경, ③ 보건·복지, ④ 교육·문화의 4개 정책 부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부문별 과제 발굴, 핵심과제 선정, 각 부문별 정책 목표, 방향, 전략 등에 대한 계획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 제5차 기본계획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넘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적 삶의 질 우위를 통한 전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으로 설정하고, 농어민 및 생활인구, 관계인구에게 열린 농어촌을 조성해 삶의 질 취약 지역 해소와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을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와 기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으로 4개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각 세부 전략을 도출하였다.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전후방 산업 및 농어촌형 비즈니스(Agribiz+) 활성화’를 통해 기회의 농어촌 조성’을 목표로 한다. Agribiz+의 확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네트워크 기반 농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특

화 농촌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전환기 농촌관광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이크로 투어리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네트워크형 관광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상품을 다변화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지역 특화 발전 거점을 조성한다.

- 주거·교통·안전·환경 부문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인구, 관계인구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정비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거점 및 배후마을을 연계한 서비스를 확대하며, 농촌 경관 및 환경을 보전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 공간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의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 보호구역 및 구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통 안전성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돌봄 부문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한 농어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역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고,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사회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고, 농어촌 돌봄 자원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 및 인력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한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농어촌 특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농촌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고유의 정체성과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도시 및 외국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산을 증시하여 청년 세대가 농촌 교육·문화 재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여성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농촌 문화 공동체를 조성하며, 농촌 학교 및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요 문화·여가 시설에 무장애 시설을 구축하고, 융복합 콘텐츠를 제공해 풍부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해 나간다.

정책 제언

- 지자체가 삶의 질 향상 내용을 반영한 농업발전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통합·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계획 실행력을 높인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삶의 질 취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타 부처의 주요 사업(핵심사업)도 포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 소멸 위험이 크고 농어촌 서비스 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읍·면을 농어촌 삶의 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취약 지역을 포함한 시·군 단위의 공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중앙정부는 포괄적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삶의 질 정책의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농어촌 서비스 목표 달성 정도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한, 삶의 질 시행 계획 과제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해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핵심 과제는 시의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핵심 과제에 대한 심층 평가 결과는 사전 협의 방식의 정책 환류에 활용하여,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 부처 정책과의 조율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장 서론

| | |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 2. 연구 목적 | 3 |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 |
| 4. 삶의 질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6 |
| 5. 계획의 성격 | 7 |
| 6.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경과 | 8 |

제2장 삶의 질 기본계획 개요

| | |
|-------------------------------|----|
| 1. 농어촌 정주 여건 변화 | 11 |
| 2.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계획·정책 동향 | 22 |
| 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평가 | 42 |

제3장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본 방향

| | |
|-----------------|----|
| 1. 기본 방향 | 55 |
| 2. 목표와 전략 | 58 |

제4장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부문별 추진 과제

| | |
|-------------------------|-----|
| 1. 경제·일자리 부문 | 65 |
| 2. 주거·교통·안전·환경 부문 | 83 |
| 3. 보건·복지·돌봄 부문 | 115 |
| 4. 교육·문화 부문 | 152 |

제5장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 확충

1.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185

2.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및 제도적 지원 강화 188

3.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내실화 189

4. 삶의 질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지원 강화 197

참고문헌 199

제1장

〈표 1-1〉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교 9

제2장

〈표 2-1〉 산부인과 수 변화 16
 〈표 2-2〉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개소 수(누적, 2011-2023) 18
 〈표 2-3〉 주관적 삶의 질 인식 21
 〈표 2-4〉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과제 23
 〈표 2-5〉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34
 〈표 2-6〉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과제 36
 〈표 2-7〉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연도별 투융자 실적 43
 〈표 2-8〉 4대 전략부문에 대한 만족도(2020-2023) 45
 〈표 2-9〉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46

제4장

〈표 4-1〉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 66
 〈표 4-2〉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귀농·귀촌 창조계층의 농어촌활동 68
 〈표 4-3〉 농어촌 소재 기업 현황 70
 〈표 4-4〉 농촌 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주요 결과 72
 〈표 4-5〉 지역구분(읍·면·동)별-연령대(5세 구간)별 인구수 및 증감 73
 〈표 4-6〉 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75
 〈표 4-7〉 농촌기업의 경영 부문별,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76
 〈표 4-8〉 읍·면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개소 수(누적) 77
 〈표 4-9〉 농공단지 주요 현황 통계(2023년 4분기 기준) 79
 〈표 4-10〉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주요 유형과 내용(안) 81

| | |
|---|-----|
| 〈표 4-11〉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도시·농촌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023년) | 118 |
| 〈표 4-12〉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 118 |
| 〈표 4-13〉 농업인과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국민연금보험료와 연금수령액 | 121 |
| 〈표 4-1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비교 | 121 |
| 〈표 4-15〉 연도별 전국 대비 농어촌 영유아 인구 비중 | 122 |
| 〈표 4-16〉 농어촌 영유아 부모의 농촌에서의 생활 만족도 | 122 |
| 〈표 4-17〉 도시 규모별 가족 구성 현황 | 122 |
| 〈표 4-18〉 농촌 영유아 부모에 대한 양육 환경 관련 의견 조사 결과 | 123 |
| 〈표 4-19〉 전국 의료기관·시설 중 농촌 소재 기관·시설의 비율 | 124 |
| 〈표 4-20〉 도농 간 병원 및 의원 수 | 125 |
| 〈표 4-21〉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 125 |
| 〈표 4-22〉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126 |
| 〈표 4-23〉 진료 항목의 행정구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 126 |
| 〈표 4-24〉 진료 항목의 행정구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127 |
| 〈표 4-25〉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146 |
| 〈표 4-26〉 전국 및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현황(2020년말 기준) | 146 |
| 〈표 4-27〉 농촌지역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 | 147 |
| 〈표 4-28〉 세대별 농촌의 인구변화 | 152 |
| 〈표 4-29〉 농촌 인구 순유입 요인 | 153 |
| 〈표 4-30〉 외국인 비율 변화 | 153 |
| 〈표 4-31〉 지역사회단체 모임 참여율 | 155 |
| 〈표 4-32〉 자원봉사 경험 및 활동 의향 | 156 |
| 〈표 4-33〉 도시와 농촌의 한계적 소통 실태 | 156 |
| 〈표 4-34〉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과소화 현황 | 161 |

| | |
|--|-----|
| 〈표 4-35〉 농촌 면 전체와 학교 없는 면의 인구 구성(2023) | 163 |
| 〈표 4-36〉 학교 없는 면 지역 농촌의 폐교 전후 전입자 수 변화 | 164 |
| 〈표 4-37〉 문화공동체, 향토문화 접근성 관련 도·농간 비교 | 164 |
| 〈표 4-38〉 농촌 청년의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 169 |
| 〈표 4-39〉 농촌과 도시의 여가생활 만족도 | 175 |
| 〈표 4-40〉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폐교 발생 현황 | 175 |
| 〈표 4-41〉 폐교 활용 현황 | 176 |

제5장

| | |
|--------------------------------------|-----|
| 〈표 5-1〉 농촌협약 대상사업 목록 | 187 |
| 〈표 5-2〉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 191 |
| 〈표 5-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개정(안) | 192 |
| 〈표 5-4〉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방식 개편 내용 | 193 |
| 〈표 5-5〉 농어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예시) | 194 |
| 〈표 5-6〉 농어촌 영향평가 추진 일정 변경(안) | 195 |

제2장

<그림 2-1> 농어촌 인구 변화(2000-2023) 12

<그림 2-2> 농어촌 고령화율 추이(2000-2023) 12

<그림 2-3>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2005년 및 2022년) 13

<그림 2-4> 도시-농어촌 인구이동 변화(2005-2023) 13

<그림 2-5> 읍면동 외국인 수 및 비중 변화(2005-2022) 14

<그림 2-6> 연도별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현황 및 공간 분포 15

<그림 2-7> 읍·면별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의 임계인구 16

<그림 2-8> 도시·농촌 경제활동 변화 비교(2010-2022) 18

<그림 2-9> 농가소득 및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비교(2005-2023) 19

<그림 2-10> 4대 정책전략 부문별 만족도 변화(2014-2023) 20

<그림 2-1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5

<그림 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7

<그림 2-13>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9

<그림 2-14>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초: 비전, 목표, 전략 30

<그림 2-15>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32

<그림 2-16>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33

<그림 2-1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35

<그림 2-18>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38

<그림 2-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40

<그림 2-20>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 점수 변화 44

<그림 2-2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의 정주 만족도 44

제3장

<그림 3-1> 삶의 질 정책 패러다임 변화 57

<그림 3-2>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추진기반 63

제4장

| | |
|--|-----|
| 〈그림 4-1〉 기초자치단체별 산업 분포(특광역시 제외) | 69 |
| 〈그림 4-2〉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 모습 | 83 |
| 〈그림 4-3〉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수 변화 추이 및 향후 전망 | 84 |
| 〈그림 4-4〉 5년 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도시민 현황 | 84 |
| 〈그림 4-5〉 관계인구의 농촌 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 85 |
| 〈그림 4-6〉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책 | 85 |
| 〈그림 4-7〉 일본의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개념도 | 96 |
| 〈그림 4-8〉 농촌의 스마트 허브와 각급 거점별 기능 | 98 |
| 〈그림 4-9〉 스마트경로당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구성 체계 | 99 |
| 〈그림 4-10〉 농어촌 경관 저해요인 | 105 |
| 〈그림 4-11〉 경관자원을 매개로 지역활성화로 성장하는 단계별 접근 | 108 |
| 〈그림 4-12〉 마을 단위 에너지 생산-이용을 통한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개념 | 110 |
| 〈그림 4-13〉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현황 | 111 |
| 〈그림 4-14〉 농어촌생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격차 분포 | 115 |
| 〈그림 4-15〉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도농 간 격차 | 116 |
| 〈그림 4-16〉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변화(2000~2023) | 154 |
| 〈그림 4-17〉 일 가정생활 우선도 | 157 |
| 〈그림 4-18〉 농촌관광 경험률 변화(2003~2022) | 158 |
| 〈그림 4-19〉 수도권 초중생 학부모의 농촌유학 수요 | 159 |
| 〈그림 4-20〉 연령대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지율 | 160 |
| 〈그림 4-21〉 농촌 면 전체와 학교 없는 면의 인구변화율(2010~2023) | 163 |
| 〈그림 4-22〉 지역별 문해능력 수준 | 166 |
| 〈그림 4-23〉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기여 희망 분야 | 170 |
| 〈그림 4-24〉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 | 171 |
| 〈그림 4-25〉 농촌과 도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및 타 지역 이동 관람 비율 | 174 |

| | |
|---|-----|
| 〈그림 4-26〉 지역 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지역 | 180 |
| 〈그림 4-27〉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직접 참여율 | 180 |
| 〈그림 4-28〉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인식 | 182 |

제5장

| | |
|---|-----|
| 〈그림 5-1〉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편(안) | 190 |
| 〈그림 5-2〉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추진체계 개편(안) | 196 |
| 〈그림 5-3〉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 분석(예시) | 198 |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생·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지역 간·도농 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경제·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농촌소멸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
 - 지역 소멸은 농업생산위기, 공동체 약화, 지역의 기능 약화 등 농어촌 사회의 소멸을 유발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 초래
 - 농어촌 투자 확대로 생활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

- 농촌소멸, 기술 혁신, 지역 간·도농 간 경제·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불균형 심화에 대응한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방향 모색 필요
 - 농어촌 빈집 증가 및 시설 노후화, 이상 기후 증가, 난개발 확대 등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삶의 질 문제 해법 마련 필요
 - 농어촌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확대에 대응하고, AI, 자율 주행 자동차, 원격 진료 등 기술 혁신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삶의 질 정책 필요

- 농어촌 공동화·유휴화로 인한 공동체 기반 약화 대응 필요
- 정부는 농촌소멸 위험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으로의 전환, 생활인구 확대, 범부처 통합적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삶의 질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삶의 질 비전과 전략 마련
- 다부처 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부족함 없는 농어촌 삶의 질 환경 조성
 -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삶의 질 정책의 공간화 및 공간 관리 전략 마련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농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서 '2025~2029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필요
- 2020년부터 시행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마련 필요
 -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포괄하는 새로운 삶의 질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의 삶의 질 정책 지표로 활용
 - 선제적·체계적 연구를 통해 법정 계획을 적시에 수립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 수립 및 후속 조치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기본계획에는 농업·농촌·산업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구감소·농촌소멸 위기, 지방분권 확대,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 국가적 사회 변동과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협력조정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 제시
 - 지방분권화 진전, 주민참여 기반 사업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거버넌스 방향 제시
 - 중장기 삶의 질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문별 중점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등을 도출
 - 지자체 삶의 질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 및 정책 추진 여건 변화 검토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과 목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농어업인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현황, 정책 추진 환경 변화 검토
 - 농어촌 지역의 인구 변화(농촌소멸 위기 심화, 고령화 등), 도시와 비교한 삶의 질 격차 등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여건 진단
 - 농어촌 주민 관점에서 필수서비스 공백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 필요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지향 등 농어촌이 담당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검토

- 지방분권 확대 기조하에 예상되는 삶의 질 정책 추진 환경 변화, 분권화 이후 지자체 여건 및 역량 차이에 따른 삶의 질 정책 추진 격차 등 정책 추진 여건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 방향 제시

○ 기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성과 분석

- 지난 20년(2004년~2023년) 동안 추진해온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의 성과 제시
-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인에게 나타난 긍정적 성과 분석·제시
- 특히 2024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개선점 등 분석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사업) 강화, 새로운 정책 아젠다 발굴 등 제안

○ 유관 계획·정책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시대위원회),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사업(교육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농식품부) 등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지방 소멸·농촌소멸 이슈에 대응하는 관련 계획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특히 2024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중심으로 농촌정책이 개편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농촌공간계획제도와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검토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도출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 정책 추진 여건 변화, 유관 계획·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도출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구성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일자리 등 기존 4대 전략 부문을 바탕으로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 부문 구성안 마련
- 최근 농어촌 여건 변화 및 정책 동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정책 부문을 새롭게 발굴하여 기존 계획의 큰 틀을 전환하는 방식 고려

○ 전략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원내 연구진과 부문별 외부 전문가로 ① 경제·일자리, ② 주거·교통·안전·환경, ③ 보건·복지·돌봄, ④ 교육·문화의 4개 정책 부문 자문단 구성
- 분과 회의를 통해 부문별 과제 발굴, 핵심과제 선정, 부문별 정책 목표, 방향, 전략 등에 대한 계획안 마련
 - *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세부 과제별 원고 의뢰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구성한 전략 부문을 토대로 전략 부문별 여건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와 정책군, 전략을 대표하는 핵심과제 제안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기반 개편

-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아젠다 도출 및 위원회 대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
- 범부처 협력 정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 농어촌서비스기준,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 등 삶의 질 정책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출

4. 삶의 질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법적 근거

- 정부는 2004년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정
 -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5조에 의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이 법에 의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 및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5 ~ 2029년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당해 기간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

- 수혜자 범위

- 보건·복지 분야 중 소득보장 정책: 농어업인
- 보건·복지 분야 중 소득보장을 제외한 정책, 교육, 생활권기반,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정책: 농어촌 주민

* 농어촌: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내용적 범위: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 복지증진,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정책 체계화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
3. 농어촌의 교육 문화예술 여건 개선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6. 농어촌산업 육성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9. 필요한 자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10. 농어촌서비스기준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계획의 성격

○ 정책 전략 계획

- 농어촌 삶의 질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전략 마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별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데이터 기반 계획

- 농어촌 여건 변화, 정주민족도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 취약지역 분석, 삶의 질 여건 변화 분석을 토대로 삶의 질 관리 및 전략 마련

○ 범부처 종합계획

-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포괄

-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
 - * 국무조정실(총괄), 농림축산식품부(간사),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1개 부처 청
- 관계부처 합동(총리 주재)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가 이행 상황 모니터링

6.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경과

-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2005~2009) 이후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까지 수립·이행
 - (제1차 계획) 한·칠레 FTA 발효 계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제2차 계획) 농어촌의 도시화를 지향하는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농어촌 자원 발굴 및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중점 추진
 - (제3차 계획) 도·농이 상생하고,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제4차 계획) 국민의 가치관·인구구조·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대상별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
- 삶의 질 정책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178개 과제로 확대
 - (제1차 계획) 4대 부문 133개 과제, 농어촌 복지인프라 확충 추진
 - (제2차 계획) 7대 부문으로 확대,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도입
 - (제3차 계획) 7대 부문 185개 과제, 위원회 개편 및 분과위원회 운영, 삶의 질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

- (제4차 계획) 4대 부문 178개 과제, 다부처 정책 협력 조정 기능 강화

〈표 1-1〉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교

| 구분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
| 기간 | 2005~2009 | 2010~2014 | 2015~2019 | 2020~2024 |
| 추진배경 | 한·칠레FTA 체결 농업·농촌 종합대책 | 포괄보조금 도입, 기초생활권정책 재편 | 지역행복생활권 도입 | 지방분권 확대 |
| 주요내용 |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 기초생활인프라 및 복지 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 맞춤형 체감복지 확충,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 | 수요 맞춤형 대응, 교육문화 기획의 형평성 보장, 서비스공급망 확충 등 (4대 전략 178개 과제) |
| 투융자규모 | (계획) 20.3조원 | (계획) 34.5조 원 | (계획) 46.5조 원 | (계획) 51.1조 원 |
| 참여부처 |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5개 부처 |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21개 부처·청 |
| 특징 | 농어촌 복지인프라 확충 추진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농어촌영향평가 등 선진제도신규도입 | 위원회 개편 및 분과위원회 운영 삶의질정책연구센터출범 | 영향평가 내실화 및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협력 조정제도 강화 |

2

삶의 질 기본계획 개요

1. 농어촌 정주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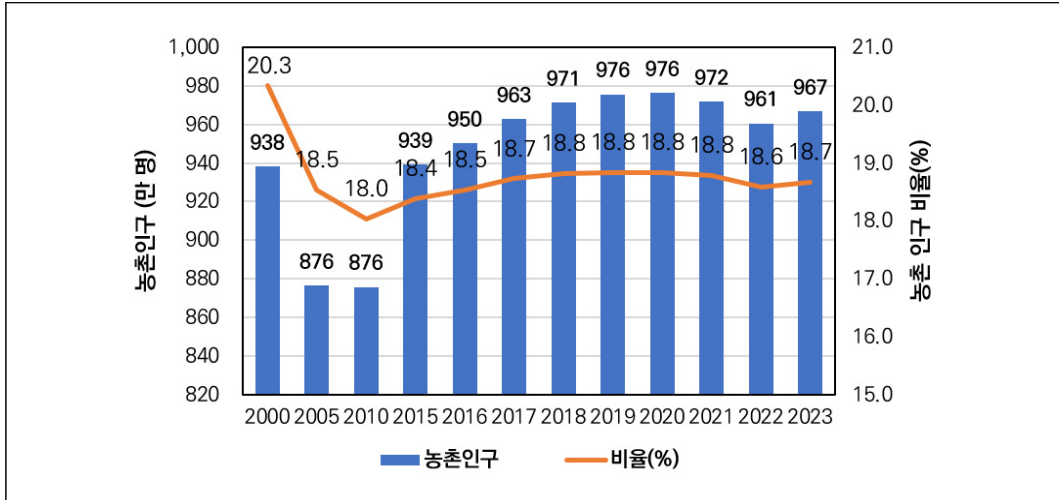
1.1. 농어촌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지역 증가, 고령화 심화 및 청년인구 감소

○ (인구 감소) 농어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

- 농어촌 인구는 1980년 1,600만 명(42.7%)에서 2010년 18.0%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인구유입 등에 따라 2023년 18.7% 수준으로 증가
- 2023년 기준 농어촌 인구는 약 967만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91만 명이 증가(연평균 0.8%)했는데, 특히 읍부에서의 인구 증가(93만 명)가 두드러짐
- 비수도권 면 지역은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원격 농어촌 지역에 속한 면의 경우 지난 20년간 평균 25%의 인구 감소율을 나타내는 등 인구 공동화 심화
 - * 2000~2022년 수도권 면 지역 인구 23.3% 증가, 비수도권 면 지역 14.5% 감소
 - * 수도권 원격 농어촌 면 지역 인구 9.7% 증가, 비수도권 원격 면 지역 인구 24.6% 감소
- 향후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읍·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 인구 3,000명 이하 읍·면 수: 2020년 665개에서 2040년 714개로 증가 전망(유찬희 외, 2024)

〈그림 2-1〉 농어촌 인구 변화(2000-202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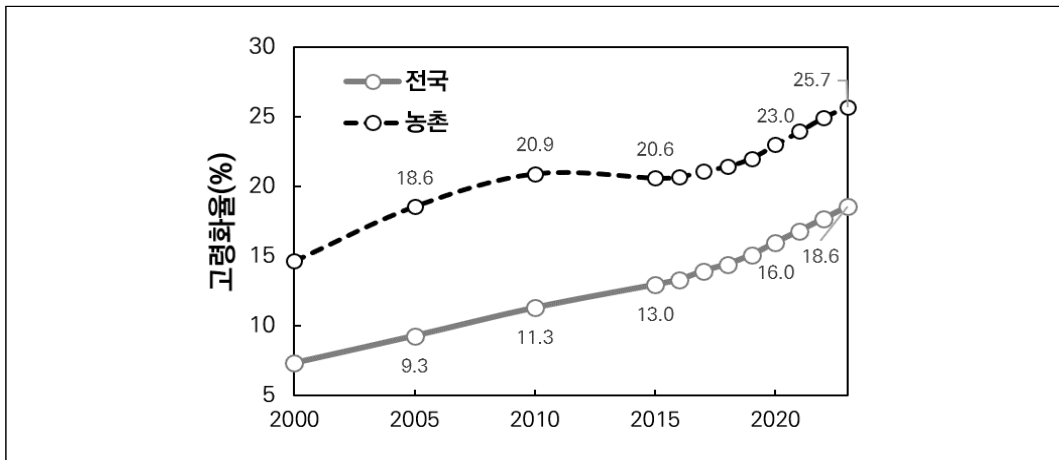
○ (고령화)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 특히 면부에서 급격한 고령화 진행

- 2023년 농어촌 65세 이상 인구수는 약 249만 명(고령화율 25.7%)에 도달

* 농어촌 고령인구 추이: ('00) 137만 명(고령화율 14.7%) → ('23) 249만(25.7%)

* 면 부 고령인구 비율: ('00) 18.1% → ('23) 33.1

〈그림 2-2〉 농어촌 고령화율 추이(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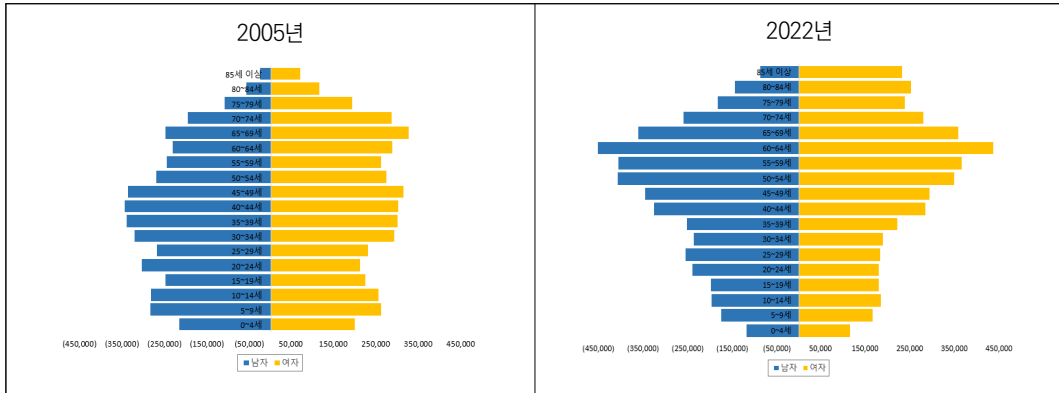
주: 이전 자료와 비교를 위해 내국인 인구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청년 인구 유출) 농어촌의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비율 감소

- 농어촌 지역의 유소년 및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바뀌면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위협

〈그림 2-3〉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2005년 및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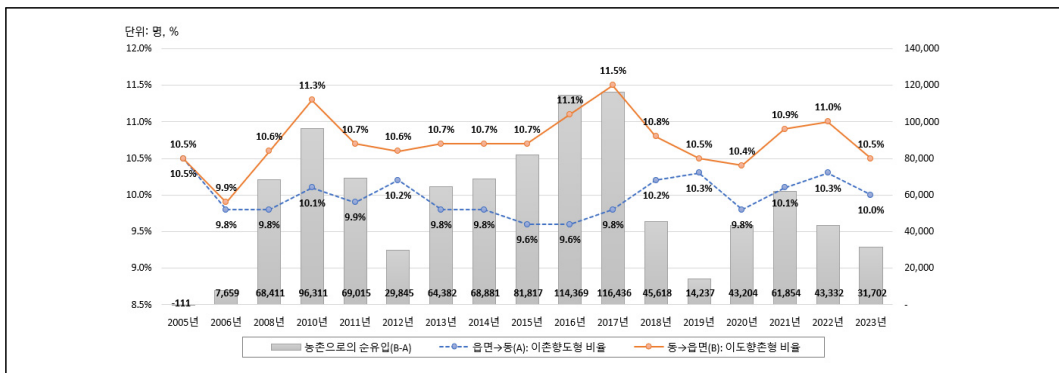
주: 내국인 인구조 집계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농어촌 인구구성 다변화 및 공동체 약화

○ (귀농·귀촌) 농어촌 내 귀농·귀촌 등으로 순 인구 증가 추세 지속

- 이도향촌형 인구이동 비율(약 10.5~11.5%)이 이촌향도형(9.6~10.3%) 상회

〈그림 2-4〉 도시-농어촌 인구이동 변화(200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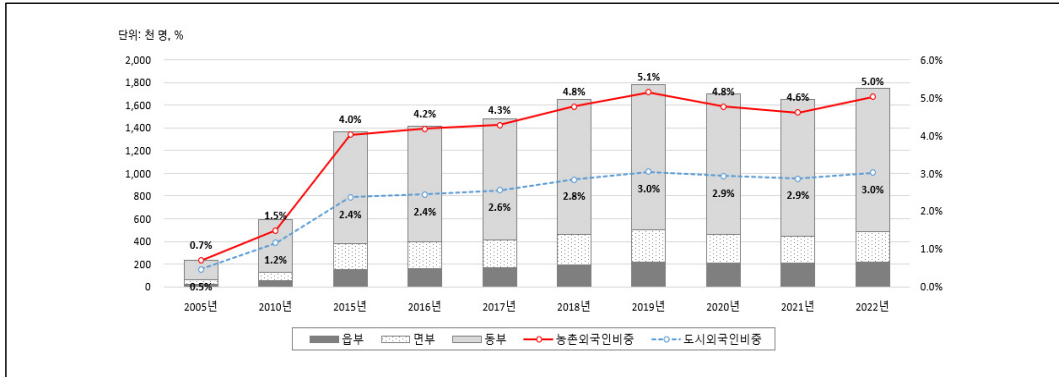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각 연도).

○ (외국인 인구) 농어촌 외국인 인구가 농어촌 전체 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증가

- 일정 시기 고용이 집중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농어촌 지역에 상주하거나 체류할 것으로 예상

* 농어촌 지역 외국인 수: ('10) 13만 명 → ('22) 48만 2천 명으로 3배 이상 증가

〈그림 2-5〉 읍면동 외국인 수 및 비중 변화(2005-20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공동체 약화) 귀농·귀촌인 증가, 고령화 심화, 청년세대 감소, 외국인 가구 증가 등 주민 구성원의 다변화로 마을 공동체 활동 약화

1.2. 농어촌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악화

□ 농어촌 주민의 기초적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미흡

○ (상·하수도 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보급률과 농어촌지역 보급률의 차이는 지속해서 감소

- 2005년에는 전국과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 격차가 53.0%p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2년에는 15.0%p 차이로 감소(환경부, 각 연도)

* 전국 상수도 보급률: ('05) 90.7% → ('22) 97.8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05) 37.7% → ('22) 82.8

- 전국 대비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격차도 2013년 28.4%p에서 2022년에는 그 차이가 18.5%p로 감소(환경부, 각 연도)

* 전국 하수도 보급률: ('13) 92.1% → ('22) 95.1

*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13) 63.7% → ('22) 76.6

○ (도로포장률) 도시 지역의 도로포장률이 2013년 99.4%에서 2022년 99.8%로 0.4%p 증가한 데 비해 농어촌 군지역의 도로포장률은 6.8%p(특·광역시 소속 군 4.6%p), 도농 복합시에서 4.2%p 증가(국토교통부, 각 연도)

○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하루 3회 미만으로 운행하는 교통여건 취약지역 증가

- 2020년 기준 2,638개 마을(전체 행정리 중 7.0%)에서는 여전히 시내버스 이용 불가(통계청, 각 연도)

* 전체 행정리 기준 교통 취약지역 비율: ('10) 9.8% → ('2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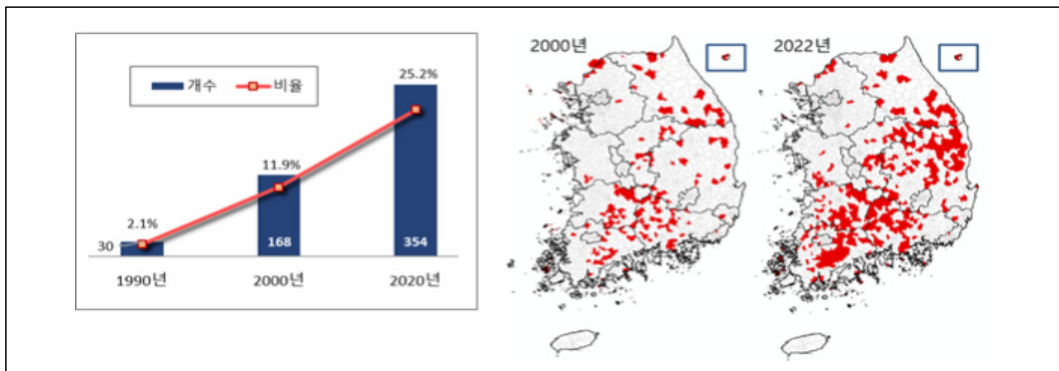
*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0): 전체 행정리 5.9%, 시내버스가 없는 마을 7.0%

□ 인구 과소 읍·면 증가와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감소

○ 면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이어진 결과, 인구 2천 명 미만인 읍·면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인구 2천 명 미만인 읍·면은 1990년 전체 읍·면의 2.1%(30개소)에서, 2020년 전체 읍·면 중 약 25%(354개소)까지 증가

〈그림 2-6〉 연도별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현황 및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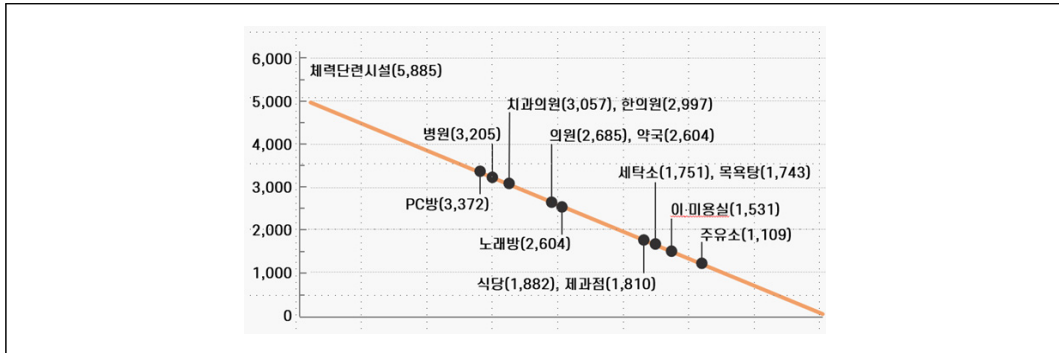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이 증가하면서 상점, 약국, 의원, 미용실 등 농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폐업되는 경향 발생

- 식당, 주유소,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등 상당 수 시설들이 읍·면당 인구 2천 명 규모 정도에서 폐업

〈그림 2-7〉 읍·면별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의 임계인구



주: 임계인구는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에서 2010~2020년간 폐업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들을 추출하고, 각 시설별로 폐업 시점 인구들의 중위값으로 산출함.

자료: 한이철 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

□ 보건·의료, 교육·문화 서비스 이용 여건 악화

○ (분만의료 여건) 2006년에는 전체 산부인과의 3.3%가 군 지역에 소재(도시 73.1%)했으나, 2022년에는 2.6%로 0.7%p 감소(도시 71.0%)

* 군 지역 중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비율: ('06) 57.0% → ('22) 70.7

〈표 2-1〉 산부인과 수 변화

| 구분 | 단위: 개소 (%) | |
|-----------|---------------|---------------|
| | 2006년 | 2022년 |
| 전국 | 1,818 (100.0) | 1,322 (100.0) |
| 도시 | 1,329 (73.1) | 938 (71.0) |
| 도농복합시 | 429 (23.6) | 350 (26.5) |
| 군 | 60 (3.3) | 34 (2.6) |
| 산부인과 없는 군 | 49 (57.0) | 58 (70.7) |

주: '도시' 지역은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에 해당하지 않는 특광역시 및 일반시 지역을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각 연도).

○ (교육 여건) 학교 수 감소로 인해 농어촌 공교육 여건 악화

- 도시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경우 행정구역면적 당 학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군 지역 초등학교 수 감소

* 2022년 기준 행정구역면적 1㎢당 초·중·고 수는 도시 0.297개소, 농촌 0.025개소(한국교육개발원, 2023)

* 군 지역의 경우 0.013개소로 도농복합시(0.036개)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적음

○ (문화·예술 여건) 도시와 농어촌 모두 문화·예술시설 수는 증가하나, 도·농 간 상대적 비율(도시/농어촌)은 계속 10~11배 수준을 유지하며 격차 확대

* 2022년 기준 행정구역면적 1㎢당 문화기반시설 수: 도시 0.231개소, 농어촌 0.021개소(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체육) 공공체육시설 수는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행정구역면적당 시설 수가 6.4배이며, 접근성을 고려한 여가·체육 여건의 도·농간 격차는 확대

* 2022년 기준 행정구역면적 1㎢당 공공체육시설 수: 도시 0.478개소, 농어촌 0.075개소(문화체육관광부, 2023)

* 군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수: 0.058개소. 도농복합시(0.097개) 대비 1.7배 낮은 수준

1.3. 농어촌 경제·일자리 활동 기회 확대

○ (경제활동) 농어촌 내 사업체 수와 창업기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 다각화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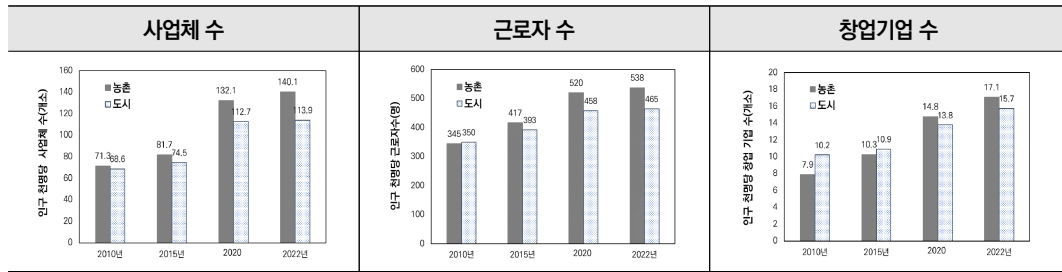
- 2010~2022년 기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체가 폐업하였지만, 사업체와 근로자 수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증가율이 더 높음

* 인구 천명 당 사업체 수: 농어촌 ('10) 71개소 → ('22) 140(약 97% 증가), 도시 ('10) 69 → ('22) 114(약 66% 증가)

* 인구 천명 당 근로자 수: 농어촌 ('10) 345명 → ('22) 538(약 56% 증가), 도시 ('10) 350 → ('22) 465(약 33% 증가)

* 인구 천명 당 창업 기업 수: 농어촌 ('10) 8개소 → ('22) 17(약 116% 증가), 도시 ('10) 10 → ('22) 16(약 54% 증가)

〈그림 2-8〉 도시·농촌 경제활동 변화 비교(2010-202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각년도).

○ (사회적경제 활동) 농어촌 지역(읍·면부)에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 확대

- 2023년 기준 사회적기업은 1,038개소, 마을기업은 982개소, 협동조합은 7,038개소가 농어촌 지역에서 설립·운영

* 협동조합: 2022년 이후로는 매년 700~800개소가 꾸준히 설립되면서 전체 규모가 확대

〈표 2-2〉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개소 수(누적, 2011-2023)

단위: 개소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사회적기업 | 116 | 204 | 321 | 382 | 425 | 464 | 519 | 563 | 599 | 649 | 742 | 908 | 1,038 |
| 마을기업 | 77 | 104 | 153 | 217 | 268 | 318 | 376 | 449 | 527 | 637 | 759 | 877 | 982 |
| 협동조합 | - | 10 | 554 | 1,117 | 1,643 | 2,148 | 2,632 | 3,175 | 3,839 | 4,668 | 5,550 | 6,290 | 7,038 |

자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운영현황(23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 ccop 협동조합 (<https://www.coo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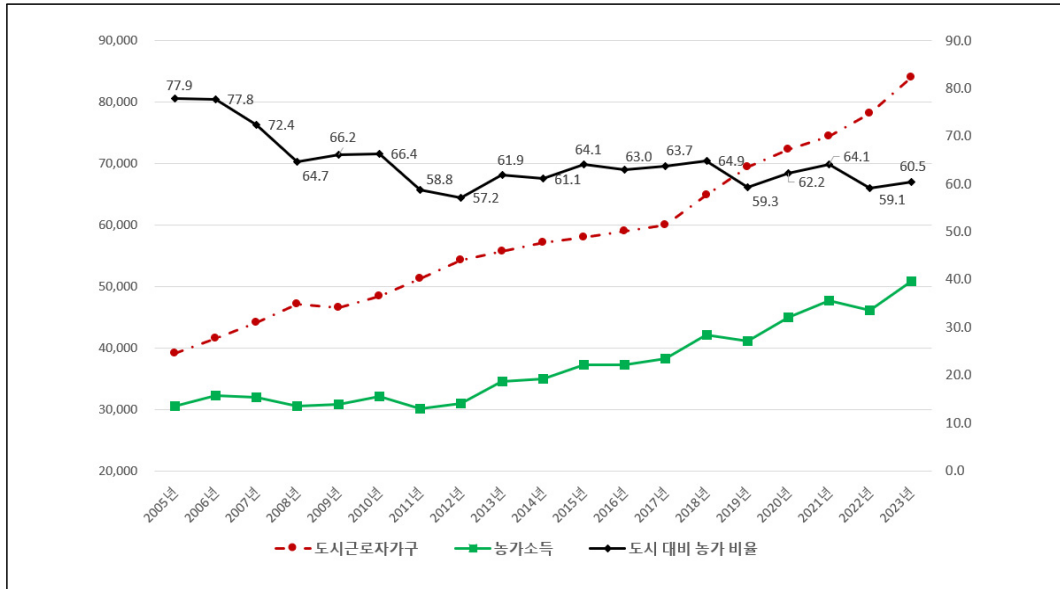
○ (농가소득) 농어촌 경제활동 여건 확대 및 경제 다각화에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격차 확대

- 농가소득은 2005년에 연 3,050만 원에서 2023년 5,083만 원으로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05) 77.9% → ('23) 60.5

〈그림 2-9〉 농가소득 및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비교(2005-2023)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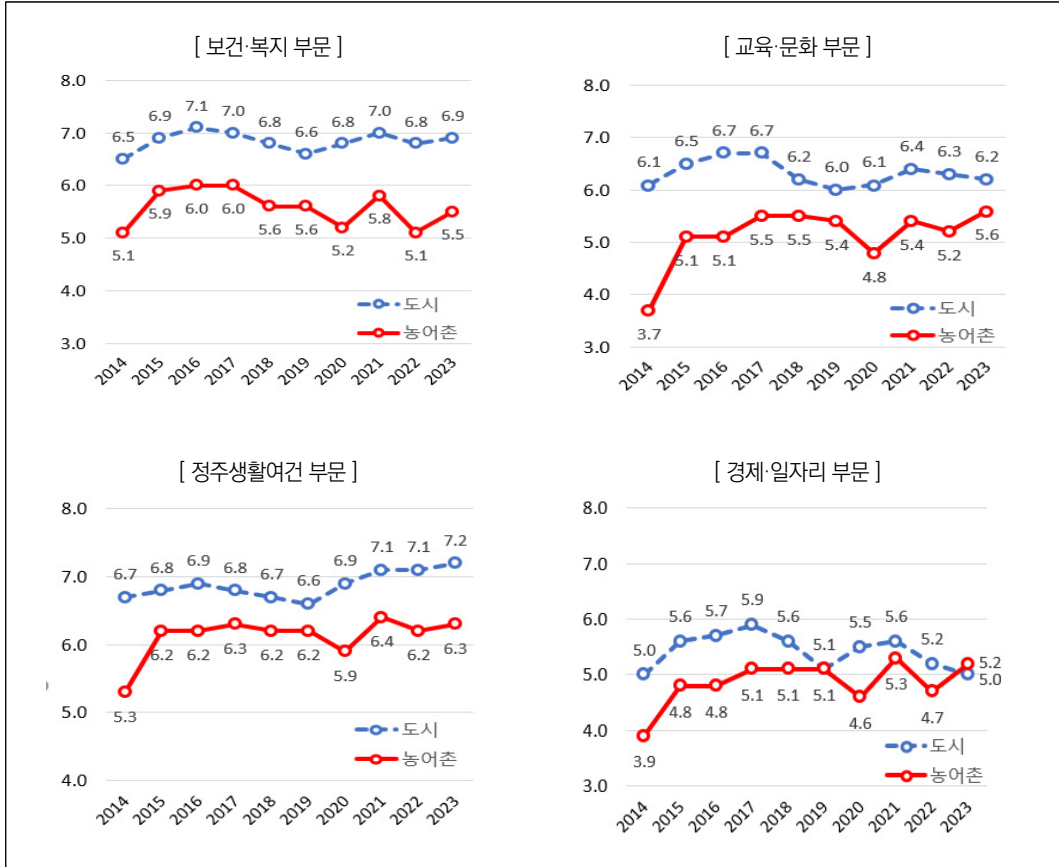


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기준이며,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1.4. 도·농간 삶의 만족도 격차 완화

-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지만, 장기적으로 도·농 간 만족도 차이 감소 추세
- 2014년 이래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전략 부문별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 수준은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낮음
 - 조사가 시작된 2014년에 도·농 간 만족도 점수 차이가 1.6점이었던 데 비해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에는 0.7점으로 감소

〈그림 2-10〉 4대 정책전략 부문별 만족도 변화(2014-2023)



주 1) 2020년 이전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을 현재 4대 부문에 맞추어 산출한 수치임.

2) '15~'17년도는 10점 척도(1점~10점), '14년도 및 '18~'23년도는 11점 척도(0점~11점)를 사용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농어촌의 객관적인 삶의 질 여건은 열악하지만, 긍정적인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 확산

○ (행복도) 도시와 농어촌 주민이 느끼는 행복 수준은 전반적으로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행복도가 더 높은 수준 유지

- 2010년대 후반부터 도·농 간 행복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매년 0.5~0.7점 정도의 격차 발생

○ (지역생활 만족도)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도시 주민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음

- 2019년 이래로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지역생활 만족도가 매년 0.3~0.4점 정도 더 높음

○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더 높은 수준 유지

- 2019년에 도·농 간 차이가 0.7점 수준으로 벌어져 이후 매년 0.6점 정도의 격차 발생

〈표 2-3〉 주관적 삶의 질 인식

단위: 명, 점

| 구분 | 응답자 수 | | 행복도 | | |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 | | | 삶의 전반적 만족도 | | |
|-------|-------|-------|------|------|--------|--------------|------|--------|------------|------|--------|
| | 도시 | 농어촌 | 도시 | 농어촌 | 도·농 차이 | 도시 | 농어촌 | 도·농 차이 | 도시 | 농어촌 | 도·농 차이 |
| 2015년 | 1,269 | 1,775 | 6.53 | 6.69 | -0.15 | 6.71 | 6.71 | 0.00 | - | - | - |
| 2016년 | 950 | 2,337 | 6.39 | 6.44 | -0.05 | 6.65 | 6.52 | 0.13 | - | - | - |
| 2017년 | 1,075 | 2,378 | 6.21 | 6.31 | -0.10 | 6.29 | 6.28 | 0.01 | 6.14 | 6.21 | -0.06 |
| 2018년 | 949 | 2,203 | 5.92 | 6.15 | -0.23 | 6.12 | 6.19 | -0.08 | 5.94 | 6.07 | -0.13 |
| 2019년 | 719 | 2,344 | 5.69 | 6.40 | -0.71 | 5.96 | 6.36 | -0.40 | 5.58 | 6.27 | -0.69 |
| 2020년 | 793 | 2,219 | 5.55 | 6.22 | -0.67 | 5.82 | 6.27 | -0.44 | 5.48 | 6.10 | -0.62 |
| 2021년 | 738 | 2,445 | 6.16 | 6.63 | -0.48 | 6.39 | 6.69 | -0.30 | - | - | - |
| 2022년 | 855 | 2,370 | 5.78 | 6.31 | -0.53 | 6.04 | 6.33 | -0.30 | 5.67 | 6.23 | -0.56 |
| 2023년 | 1,597 | 2,503 | 5.96 | 6.57 | -0.61 | 6.22 | 6.49 | -0.26 | 6.03 | 6.58 | -0.55 |

주 1) 도시는 동부, 농어촌은 읍·면부를 의미함.

2) 도·농 차이는 (도시 점수 - 농어촌 점수)로 산출함.

3) '15~'17년도는 10점 척도(1점~10점), '14년도 및 '18~'23년도는 11점 척도(0점~11점)를 사용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2.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계획·정책 동향

2.1. 관련 계획 및 정책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는 공정, 희망, 자율 가치에 기반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

- 농어촌 발전전략은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정책 목적을 기준으로 ①농촌다움 복원·활용, ②정주환경 개선, ③경제 활성화, ④의료·복지 확충, 그리고 정책추진 기반으로 ⑤인적자원 육성, ⑥정책 추진 기반 구축 전략으로 구분

- (농촌다움 복원·활용) 지역의 고유한 자산·문화를 활용한 로컬브랜딩, 지역특화재생 등을 통해 지역자원에 기반한 특화 발전 도모
- (정주환경 개선)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주거단지 조성
- (경제 활성화) 농산업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을 전략 육성하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 창출
- (의료·복지 확충) 의료·돌봄 서비스의 연계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 육성) 청년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직업교육과 청년의 취·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
-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체계, 토지 이용제도, 통합적인 패키지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제도 포함

- 정책 목적을 기준으로 한 4가지 전략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발전, 혁신성장 기반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성

〈표 2-4〉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과제

| 구분 | 정책 내용 |
|---------------|---|
| 농촌다움 복원·활용 | (과제38)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유산 보전 (과제119)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 |
| 주거 | (과제38)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과제71) 청년농촌보급자리 확대 조성 (과제73) 어촌을 도시수준 생활공간으로 혁신 |
| 경제 | (과제71)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과제73) 스마트 양식단지 본격 가동 (과제117) 지역주력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과제118)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
| 의료·복지 | (과제44)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 (과제45)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질 제고 (과제67)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제70)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 활성화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 인적자원 육성 | (과제54)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과제71) 청년농 정착지원 강화 (과제90) 민·관 협업을 통한 지방청년 일경험 제공. 청년 창업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과제92) 중앙부처·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한 사업 발굴 지원 (과제119)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
| 기반 구축 | (과제70)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도입,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제114) 주민의 정책 결정권 확대를 통한 주민주도 지역개발 추진 (과제119)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

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를 바탕으로 작성.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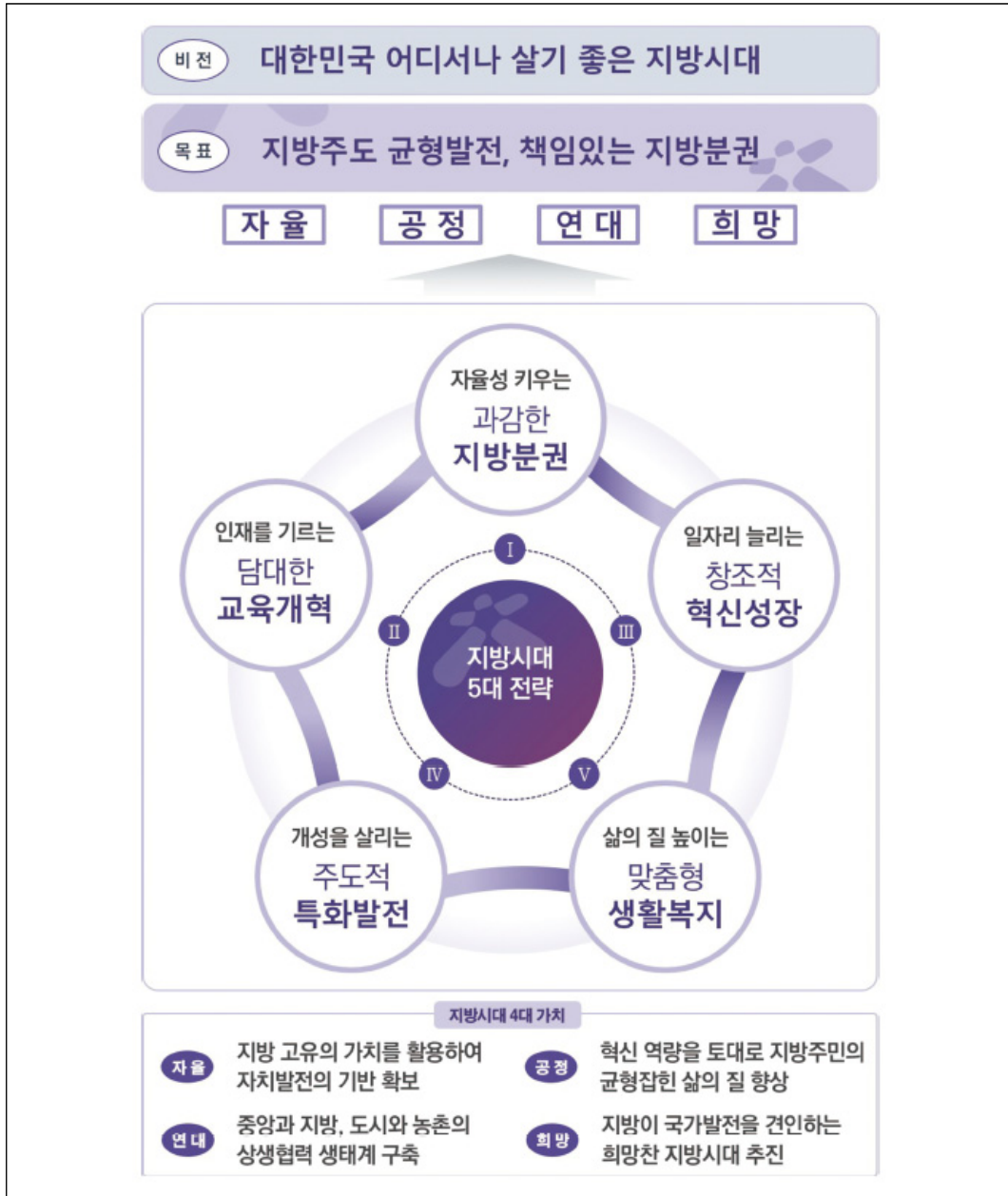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이자 범정부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5대 전략으로 국정과제 추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역마다 특색있는 로컬콘텐츠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발굴·육성으로 신(新)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그림 2-1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2023).

□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농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농정 방향과 전략 제시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대내외 여건 및 전망을 반영하여, ‘균건한 식량안보’,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5대 전략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제시

○ 5대 전략별로 농어촌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세부추진과제

- (균건한 식량안보 확보)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SOC 체계 개편
-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미래세대 농업인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여 농업 생산의 디지털 혁신성장 지원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농업 재해보험 보장과 피해를 지원하고 소득정보에 기반한 농업 경영위험에 대응,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주요 농기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경영비 부담 완화
-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저소득 취약계층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하여 농촌재생을 지원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및 농촌 여성 지원, 농업·농촌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교류·체류 활성화

〈그림 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비전 | | |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 | |
|--------------------------|---|---|---|--|--|
| 전략 | 성과목표 | | 세부추진과제 | | |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 식량 자급률 제고 국내 비축 및 해외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 · 식량자급률: (21) 44.4% → (27) 55.5 · 일/종 자급률: (21) 1.1/23.7% → (27) 8.0/4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식량작물 생산-소비체계 전환 ○ 농지 관리 체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국내 비축 및 해외 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 | |
|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에 적합한 농업으로 전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 · 청년농 3만명 육성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연산 128% 추산 19.8% → (27) 30, 30 · k-Food* 수출 목표: (22) 118억달러 → (27) 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스마트농업 확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 R&D 혁신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전략적 국제협력 농정 추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푸드테크 산업 육성 ○ K-Food* 수출 확대 ○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제도정비 | | |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가 경영 여건 개선 |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달성 · 농식품펀드 1조원 추가 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재해 피해 지원 ○ 농업 경영위험 대응 ○ 직접지불제도 개편 ○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농축협의 경제사업 강화 | | |
|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 · 유통비용 절감: (20) 48% → (27) 45 ·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 (18~22) 14.4% → (23~27) 1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사전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가축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간책임성 강화 ○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 | |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21) 5.7점 → (27) 6.7 · 농촌 융복합산업규모: (22) 3.6조원 → (27)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농촌 재생 지원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 여성농업인, 농촌 거주 여성 지원 ○ 농업·농촌 소득 기반 다각화 ○ 귀농·귀촌 활성화 ○ 농촌 교류·체류 활성화 | | |
| 추진 기반 | 혁신농정, 현장소통·지방중심 농정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3대 전략 마련

○ 3대 전략에 따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 육성 확대
-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복합 주거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지원,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해 디지털 타운 등을 조성 확산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농촌형 교통모델 지속 지원,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며, 학생과 주민의 교육자원 활용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지원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협약 체결 지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지역 특화관광상품 개발 지원

〈그림 2-13〉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3).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국토교통부는 20년의 대한민국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국토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발표

-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살고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

-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6대 전략 제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정책과제

-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농촌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산림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출 발전의 유도,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문화·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노후관광지 또는 노후시설의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공
-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자연과 조화된 농산어촌 경관 조성을 위해 농촌 환경을 재정비하고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다움 제고, 농어촌 지역 환경저해요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농어촌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지역 경관 향상

〈그림 2-14〉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초: 비전, 목표, 전략



자료: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0).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 (New Ruralism 2024)' 구현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 농촌 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 등 3대 공간 전환 추진
- 새로운 농촌으로의 전환을 위해, 청년 등의 창업 기회 및 농촌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농촌 체류·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주민·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의 3대 전략 추진 계획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일자리·서비스 공간 조성',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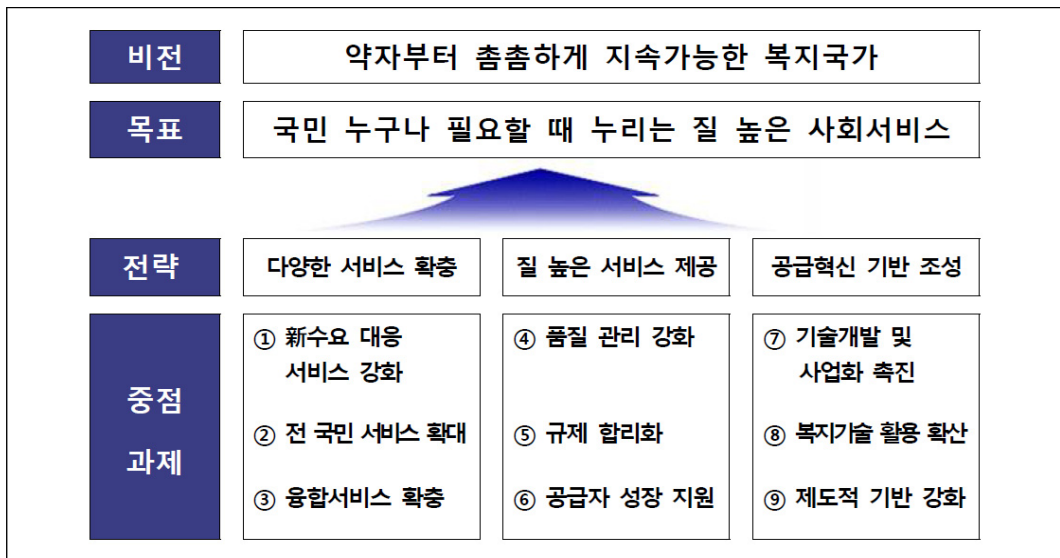
- (주거·일자리·서비스 공간 조성) 139개 농어촌 시·군에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농촌 돌봄마을을 활용해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모바일보건소 시스템 도입으로 원격협진 체계 구축
-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농촌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 다양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돌봄·복지·교육 서비스를 확충,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확대하고, 기존 농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해 2023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발표

-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며,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제시
-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제시
- 농어촌 삶의 질 관련하여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에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 제공기관’ 지정 및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주도형 서비스 개발·실행

〈그림 2-16〉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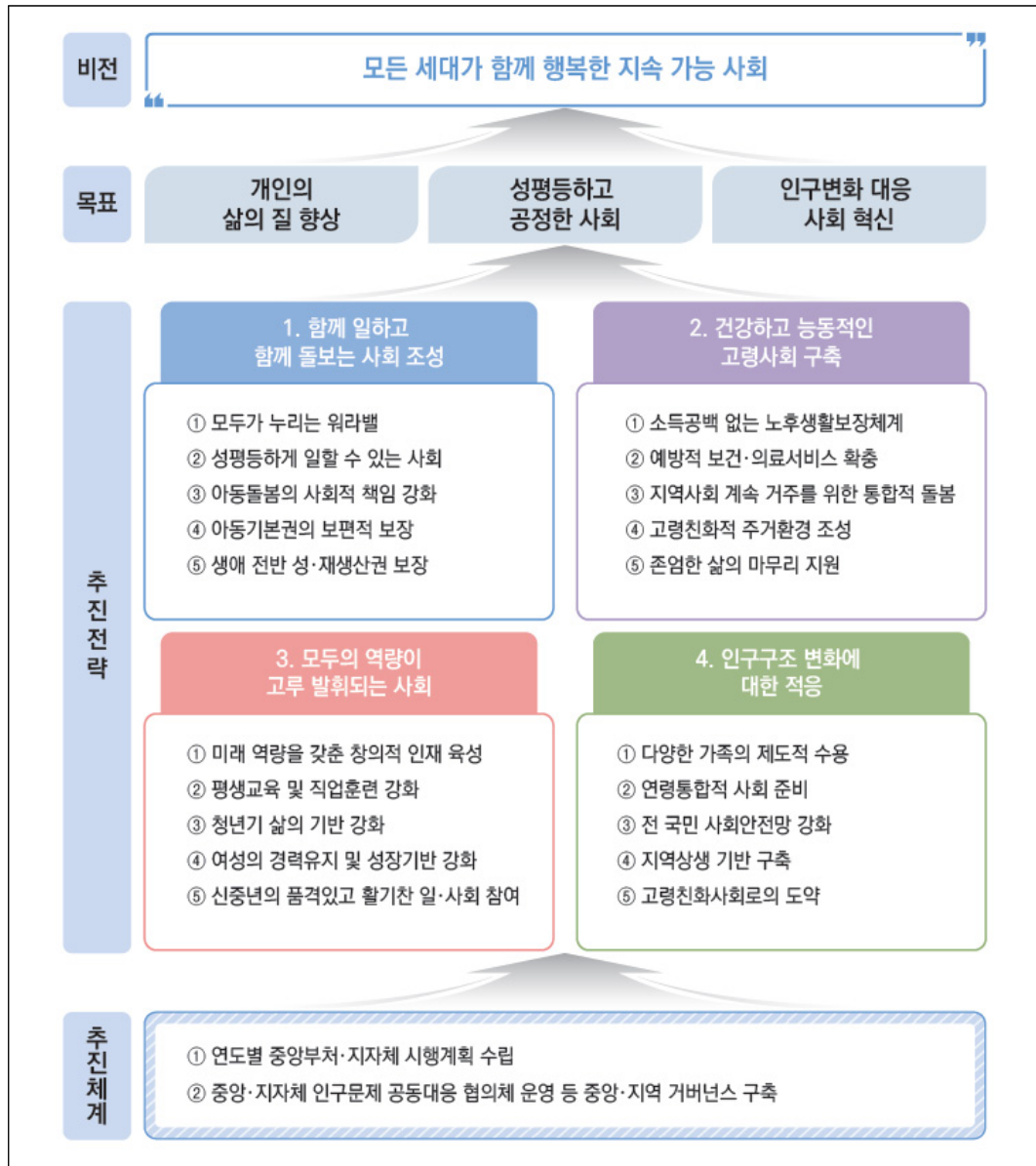
- 정부는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을 강조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목표 설정
 - 4대 전략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따라 영역별 핵심과제를 구성

〈표 2-5〉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
|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 (1-3-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 | (1-3-2)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
| | (1-3-3)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 | (2-2-1)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
| | (2-2-2)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
| | (2-2-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
| |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 | (2-3-1)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
| |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 | (2-4-1)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 (2-4-2)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2-4-3)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 |
|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
| | (3-3-1)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
| |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 | (3-4-2)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
|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 | (4-1-2)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강화 |
| |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
| | (4-4-1)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4-4-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 | (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
| | (4-5-1)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4-5-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그림 2-1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로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발표
 -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관련 하위 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3대 분야인 ‘〈규모·양〉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역량·질〉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협력·지원〉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따라 11개 추진과제 설정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추진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으로 구성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제도 개선, 기존 병원의 공공의료 참여 기반을 확대
 -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 의료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인프라 확충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의사, 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및 지역 균형 배치 방안 마련

〈표 2-6〉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과제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
| 1. (규모·양)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1-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
| | (1-1-1)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적 민간의료기관 확충 |
| | (1-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
| | (1-3-1)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 의료서비스 보장 |
| 2. (역량·질)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2-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
| | (2-1-1)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체계 마련 |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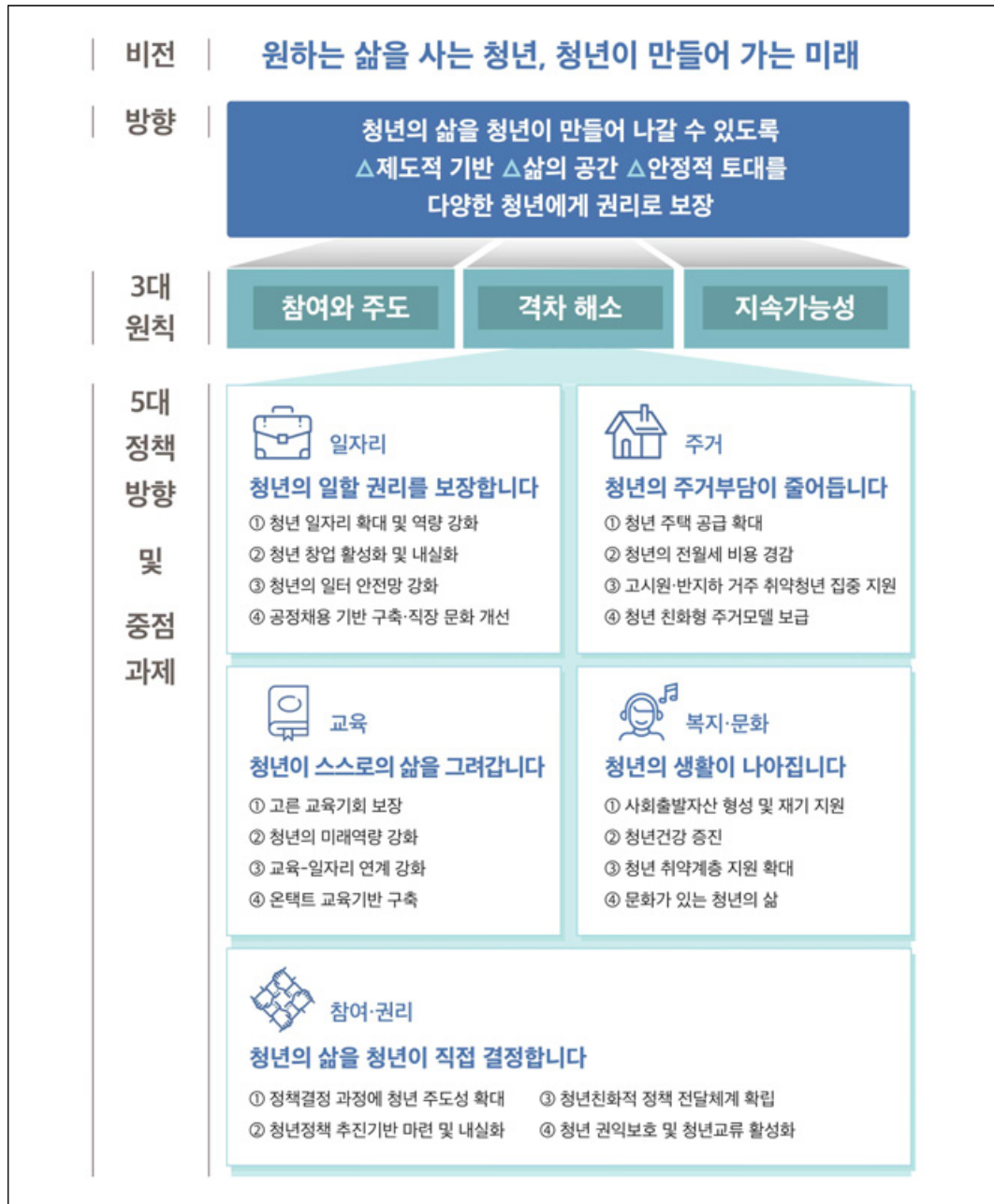
○ 「청년기본법」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로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설정
-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방향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5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과제 제시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및 ICT 기반 스마트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의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관광 홍보·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자립마을 및 청년두레, 로컬크리에이터 조성·육성 지원

〈그림 2-18〉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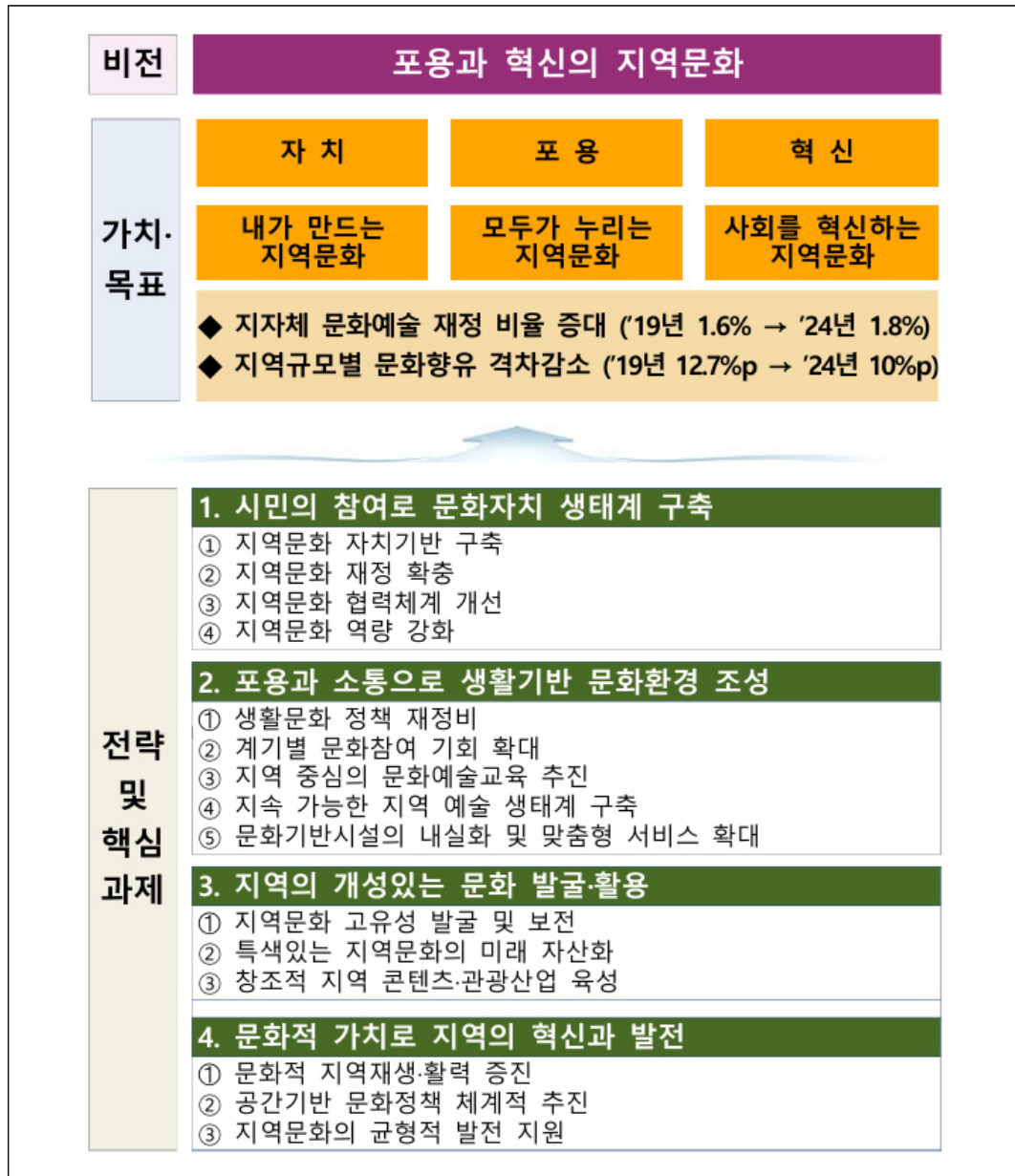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 문화의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지역문화 진흥정책인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 분권과 자치의 원리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계획의 비전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로 설정하고,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4대 전략 제시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는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으로 구성

-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지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생활문화동호회·공동체 지원
-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생활안전망 구축을 통한 비수도권에서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축·지속성 담보
-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지역특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력있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추진
-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유희공간을 재생하고, 독거노인·빈집·범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그림 2-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

2.2. 시사점

- **(삶의 질 아젠다 발굴)**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부처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제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아젠다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부처에 제안하도록 삶의 질 정책 영역 확장
 - 농촌다움과 지역자원,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농어촌의 강점과 다양한 신기술의 실험공간 관점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할 기반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ICT·AI 등 미래 여건 변화, 삶의 질 관련 민간투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성과지표 제시

-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한 인적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에 대응하여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기반 조성 필요
 - 시설·서비스의 공급 위주에서, 농어촌 주민이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혁신 필요

- **(활동 주체 육성)** 인구감소·주민구성 다변화, 고령화에 따른 기존 공동체 약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민을 삶의 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지역 활동 조직·단체가 연계·협력하여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조직·단체를 지원·육성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각자 활동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유도
 -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 확대

○ (정책추진 협력체계 강화)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계획과 사업의 연동을 통한 정책 추진 협력 체계 구축

- 삶의 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시행되는 사업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협력적·통합적인 추진체계 필요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처들이 서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삶의 질 향상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신규 법·제도 반영) 새로운 법·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변화 고려

- 기존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중간지원 조직이나 민간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필요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평가

3.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성과

□ 투융자 증액 및 타 부처 비중 확대로 범부처 계획으로서 위상 강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의 총 투융자 규모는 약 55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투융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액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주여건 전략이 약 35조 3천억 원, 보건·복지 11조 원, 경제활동·일자리 4조 8천억 원, 교육·문화 3조 7천억 원 규모

* 교육·문화 부문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이 많아 '20년 대비 투융자 규모 감소

- 국토부, 복지부 등 타 부처의 투융자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범부처 계획의 위상 강화

* 투융자 비중(%): 국토부 ('20) 20.7% → ('23) 27.4, 복지부 ('20) 5.1% → ('23) 10.4

〈표 2-7〉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연도별 투융자 실적

단위: 억 원, %

| 구 분 | | 2020 (실적) | 2021 (실적) | 2022 (실적) | 2023 (실적) | 2024 (계획) | 합계 |
|-------------|----------|------------------|------------------|------------------|------------------|--------------|---------|
| 계획 | | 103,566 | 109,572 | 116,960 | 121,868 | 98,253 | 550,219 |
| 실적 | | 102,652 | 110,061 | 121,087 | 116,877 | - | - |
| 재원별 | 국비 | 72,644 | 81,348 | 83,172 | 88,890 | 71,576 | 397,630 |
| | 지방비 | 24,770 | 24,333 | 30,956 | 23,537 | 19,043 | 122,639 |
| | 민자 등 기타 | 5,239 | 4,380 | 6,959 | 4,383 | 7,633 | 28,594 |
| 전략별 | 보건·복지 | 19,431 | 20,620 | 23,312 | 25,197 | 21,402 | 109,962 |
| | 교육·문화 | 10,921 | 6,586 | 8,933 | 5,531 | 5,329 | 37,300 |
| | 정주여건 | 63,579 | 73,473 | 78,030 | 76,033 | 62,503 | 353,618 |
| | 경제활동·일자리 | 8,722 | 9,383 | 10,812 | 10,176 | 9,020 | 48,113 |
| 부처별 (비중) | 농식품부 | 40,738 (39.7) | 45,320 (41.2) | 46,414 (38.3) | 46,212 (39.5) | - | - |
| | 해수부 | 12,455 (12.1) | 13,901 (12.6) | 13,091 (10.8) | 12,163 (10.4) | - | - |
| | 국토부 | 21,290 (20.7) | 25,898 (23.5) | 28,044 (23.2) | 32,017 (27.4) | - | - |
| | 복지부 | 5,264 (5.1) | 6,554 (6.0) | 7,649 (6.3) | 8,766 (7.5) | - | - |
| | 그 외 | 22,906 (22.3) | 18,388 (17.9) | 25,891 (25.2) | 17,719 (17.3) | - | - |

주: 2023년은 삶의 질 시행계획, 2024년은 기본계획 보고서상의 계획예산을 기입함.

자료: 관계부처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각 연도).

□ 범부처 삶의 질 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도·농 간 만족도 격차 완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동안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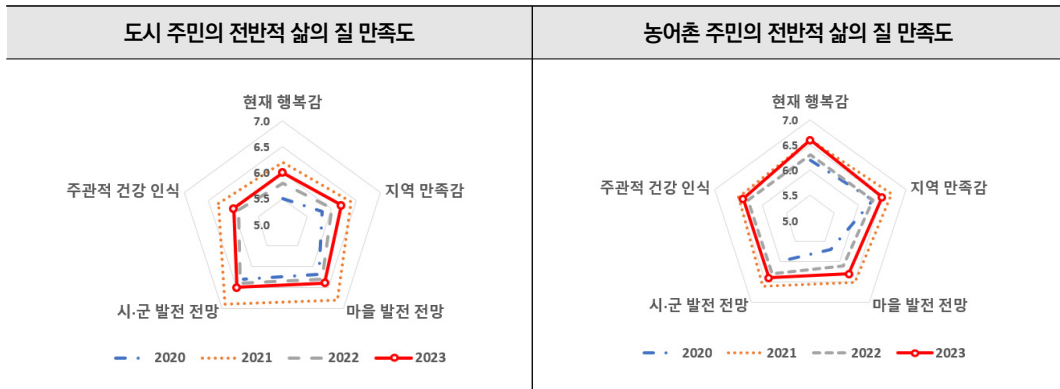
- 주관적·정서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높았고, 도·농 간 격차는 0.1점 확대

*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 도·농 간 격차: ('20) 0.1점 → ('23) 0.2

○ 도시 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는 '시·군 발전 전망' 및 '마을 발전 전망' 점수가 높으며, 농어촌 주민은 '현재 행복감', '지역 만족감' 및 '주관적 건강 인식' 점수가 높음

- 농어촌 주민의 경우 '마을 발전 전망' 점수가 '20년 대비 0.6점 향상

〈그림 2-20〉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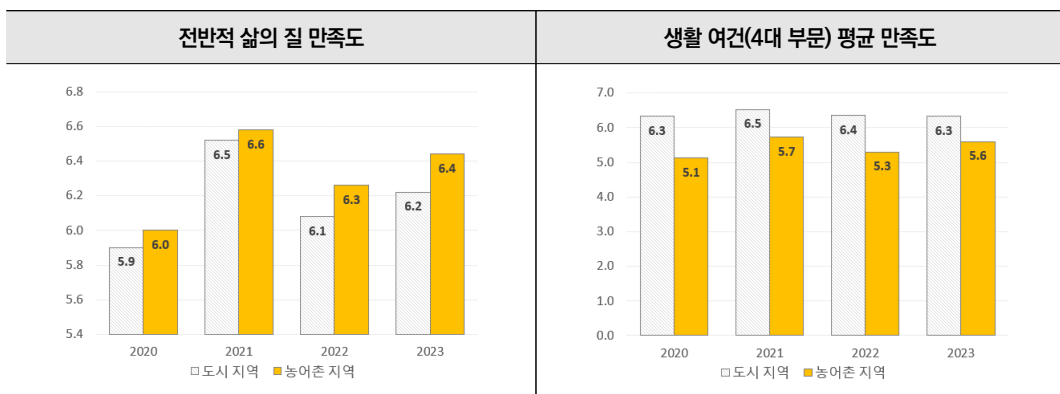


주: '주관적 건강 인식' 문항은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되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생활 여건을 의미하는 4대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낮았지만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상 4대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계속 낮았으나, 동 기간동안 도·농 간 만족도 격차는 0.5점 개선
 * 4대 부문 평균 만족도 도·농 간 격차: ('20) 1.2점 → ('23) 0.7
- 교육·문화 부문의 2023년 도·농 간 격차는 2020년 대비 0.6점 개선, 2023년 경제·일자리 부문의 경우 통계적으로 도·농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그림 2-2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의 정주 만족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표 2-8〉 4대 전략부문에 대한 만족도(2020-2023)

| 전략부문 | 지역유형 | 2020 | 2021 | 2022 | 2023 |
|--------|------|------|------|------|------|
| 보건·복지 | 도시 | 6.8 | 7.0 | 6.8 | 6.9 |
| | 농어촌 | 5.2 | 5.8 | 5.1 | 5.5 |
| | 차이 | 1.6 | 1.2 | 1.7 | 1.4 |
| 교육·문화 | 도시 | 6.1 | 6.4 | 6.3 | 6.2 |
| | 농어촌 | 4.8 | 5.4 | 5.2 | 5.6 |
| | 차이 | 1.3 | 1.0 | 1.1 | 0.6 |
| 정주기반 | 도시 | 6.9 | 7.1 | 7.1 | 7.2 |
| | 농어촌 | 5.9 | 6.4 | 6.2 | 6.3 |
| | 차이 | 1.0 | 0.7 | 0.9 | 0.9 |
| 경제·일자리 | 도시 | 5.5 | 5.6 | 5.2 | 5.0 |
| | 농어촌 | 4.6 | 5.3 | 4.7 | 5.2 |
| | 차이 | 0.9 | 0.3 | 0.5 | -0.2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농어촌서비스 이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동안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중기목표치를 달성하여 공공서비스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

* 의료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부문의 전체 항목과 정주여건 9개 항목 중 3개 항목

- 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 6개 항목*은 2021년 중기목표치를 기달성, 상·하수도, 경찰 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내 중기목표치 달성 예상

* 진료, 영유아보육·교육,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 응급의료, 노인복지, 체육시설,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경찰순찰,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등 12개 항목의 이행실태는 우상향 추세로 개선

- 영유아보육·교육, 평생교육 항목은 중기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이행실태 소폭 감소

〈표 2-9〉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부문 | 항목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중기목표치 (2024년) |
|-------|-----------------|--------------|--------------------------|--------------------------|--------------------------|------------------|
| 의료·복지 | 진료 | 23.3분 | 22.7분 | 23.1분 | 22.7분 | 30분~1시간 |
| | 응급의료 | 20.8분 | 14.6분 | 13.8분 | 12.1분 | 30분 |
| | 영유아보육·교육 | 5.8분 | 9.0분 | 9.1분 | 9.1분 | 20분 |
| | 노인복지 | 99.3% | 100% | 100% | 100% | 80% |
| 교육·문화 | 초·중등교육 | 7.5분 | 7.3분 | 7.4분 | 7.3분 | 10분 |
| | 평생교육 | 88.2% | 79.1% | 84.6% | 85.6% | 70% |
| | 문화 | 24.7분 | 24.0분 | 24.1분 | 24.0분 | 40분 |
| | 도서관 | 10.3분 | 9.9분 | 10.0분 | 9.7분 | 10분 |
| | 체육시설 | 18.8분 | 17.0분 | 16.6분 | 15.8분 | 30분 |
| 정주 여건 | 주택 | 7.8% | 30.7%* | 34.8% | 38.4% | 23% |
| | 상수도 | 77.0% | 80.6% | 81.6% | 82.8% | 85% |
| | 하수도 | 71.8% | 74.6% | 75.6% | 76.7% | 76% |
| | 난방 | 68.1% | 69.4% | 70.0% | 72.7% | 68% |
| | 대중교통 | 87.1% | 87.3% | 89.1% | 89.2% | 100% |
| | 생활폐기물 | (영농) 66.4%** | (영농) 75.0% (생활) 18.8% | (영농) 76.9% (생활) 20.6% | (영농) 80.7% (생활) 26.7% | 마을 내(100%) |
| | 방법설비 | 64.9% | 71.3% | 75.9% | 75.4% | 60% |
| | 경찰순찰 | 62.9% | 90.8% | 95.4% | 98.2% | 100% |
| 경제 활동 | 소방출동 | 72.1% | 64.9%*** | 69.1% | 58.4% | 70% |
|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65.5% | 68.8% | 77.5% | 87.1% | 86% |

주: 중기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은 음영표시함.

* 주택 항목은 측정 자료가 변경되어 '20년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상 표제부 자료에서 '21년 사업성과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환경부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실적 자료'를 활용함.

** 20년 생활폐기물 항목은 자료 구득이 불가하여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만 조사하였음.

*** 소방출동 항목은 목표시간 설정에 필요한 화재발생 주소가 비공개 정보로 '20년에는 주소 대신 화재발생 동·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으나 '21년부터는 출동 건별로 차고에서 화재현장까지의 이동 거리 자료 구득이 가능함에 따라 측정 방식을 변경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3.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한계

-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파악과 실질적인 주민 체감을 반영하는 지표체계 미흡
 - (제4차 기본계획)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목표는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 및 지역·정책 대상별로 다변화되는 정책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
 - 삶의 질 기본계획 과제의 시행계획상 성과지표는 대부분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해당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발생시킨 성과를 알맞게 파악하기 어려움
 -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의 정책적 성과 달성도가 높더라도 주민의 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다수
 - * 서비스기준 달성 항목: (20) 11개 → (23) 13
 - 도·농 간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구성되어, 이웃과의 관계, 내 생활의 만족감,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 등 농어촌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함
 - * 정주민족도 조사 문항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서 우수한 항목으로 구성
- 정책 범위 및 대상의 제한으로 정책적 소외 발생
 - (제4차 기본계획) 농어업인 중심 계획에서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귀농어·귀촌자, 다문화가정, 도시민 등 다양한 세대 및 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우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업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농어촌 지원 수단 도입
 - 정책은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읍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구 규모가 적은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됨
 - 농어촌 지역 중 인구 밀도가 높은 읍 지역부터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농어촌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면 지역에 대한 지표나 정책 목표 부족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어촌, 섬과 같이 특수한 공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특수 지표가 없어 공공서비스 전달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책 수요 대응 한계
- 농어업인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집중된 정책 지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가 농촌 활동 및 정책 영역에서 소외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내에서도 특히 농어업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분야로는 취·창업에 집중되어 있음.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 쏠 부처 참여 계획으로 확대되었으나, 농어촌영향평가 및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환류체계 미흡
- (제4차 기본계획) 농식품부·해수부 정책 수단 중심에서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쏠 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체계 내실화 추구
 - 각 부처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대상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 과제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구성·추진
 - 이전 계획 대비 총 투융자 규모가 확대, 특히 국토부와 복지부의 투융자 비중 확대로 농어촌 주민의 삶 전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부처 간 연계 강화
-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 효과 확대를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더라도 이를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 절차 미흡
 - 농어촌 영향평가 및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통해 발굴한 개선점이 정책 추진과정에 환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절차 미흡
 - 정책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기본계획에서 새로이 도입한 사전협의제에 대한 부처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실효성 미흡

- 삶의 질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 사업 및 성과지표 부재
- (제4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유관 사업을 취합해서 평가하는 것에 그침
-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대표적인 사업과 성과지표 관리 미흡
 - 삶의 질 기본계획을 통해 대표 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처에 방향성을 전달할 필요

3.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3.4.1. 보건·복지 부문

- (주요 성과)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주민 주도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 농어촌 보건·의료*, 건강생활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 * 보건·의료기관 수: ('20) 8,030개소 → ('23) 8,232, 병상 수: ('20) 131,002개 → ('23) 125,055(보건복지부, 2024)
 - ** 건강생활지원센터 수: ('20) 117개소 → ('23) 144 (보건복지부, 2024)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안전보험 가입 증가 등 양적 확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 등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미흡한 점) 큰 격차의 도·농 간 정주민족도,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발생, 주민 주도 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정주민족도) 생활 여건 4대 분야 중 타 분야(교육·문화, 정주기반, 일자리)에 비해 보건·의료 만족도의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큼
 - * 도·농 간 만족도 격차('23): 보건·복지 1.4점, 교육·문화 0.6, 정주기반 0.9, 경제·일자리 -0.2 (정민주·손경민, 2023)
 - 특히, 분만, 의료서비스 범위, 응급의료 순으로 격차가 큼
 - * 도·농 간 만족도 격차('23): 분만 2.1점, 의료서비스 범위 1.6, 응급의료 1.8 (정민주·손경민, 2023)

- (의료)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 저출산의 영향으로 필수 의료시설*(산부인과 등) 및 민간 병·의원 부재** 등 취약성 부각
 - * 산부인과 없는 군 비율('23): 70.7% (권인혜 외, 2023)
 - ** 인구 1,000명 이하 읍·면(39개)은 민간 병·의원, 약국 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 농어촌의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전문인력 부족, 의료기관 유지비용 부담 및 지역별 격차에 대한 대응 방안 미흡
- (서비스 제공) 주민 주도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돌봄농장, 돌봄공동체 등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확대 필요
- (보육·돌봄) 농어촌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기반 마련 필요
- (사회안전망) 저소득 층의 낮은 농업인 연금 가입률 등으로 실효적인 농어촌 안전망 구축 미흡

3.4.2. 교육·문화 부문

- (주요 성과) 배움 여건 개선,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및 접근성 향상
- 농어촌 교육·문화 부분 주민 만족도 도·농간 격차 감소*
 - *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격차: ('20) 1.3점 → ('23) 0.6 (정민주·손경민, 2023)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시간 감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 증가 등 교육 서비스 질적 여건 개선
 - *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 도달 소요시간: ('20) 7.5분 → ('23) 7.3 (권인혜 외, 2023)
 -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20) 51.3% → ('22) 54.0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 생활문화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전한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및 농어촌 내 사회적 자본 형성·축적
 - * 생활문화센터 조성: ('20) 218건 → ('22) 383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 ** 주 4회 이상 문화·여가활동 빈도 추이: ('19) 47.5% → ('23) 51.7 (농촌진흥청, 각 연도)

○ 체육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증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농어촌 체육시설 도달 소요 시간: ('20) 18.8분 → ('23) 15.8 (권인혜 외, 2023)

* 스포츠 참여 활동 비율 추이: ('18) 5.2% → ('23) 15.9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 (미흡한 점)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도·농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좁히긴 어려운 상황

○ (교육) 농어촌의 과소학교 및 폐교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체계 구축 등 구조적 전환 필요

* 학년당 20명 학급 운영이 가능한 학교 비중: (도시) 92.8%, (농촌) 27.4%. 특히, 면 지역의 경우 학년당 10명 미만인 과소학교가 71.1% (교육부, 2022)

○ (문화) 대부분의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는 여전히 부족

* 행정구역 100km²당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수: ('22) 도시 23.1개 > 농어촌 2.1 (통계청, 2022)

3.4.3. 정주생활기반 부문

□ (주요 성과) 주택·에너지·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주 만족도 상승,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법적 기반 확충

○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 운영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과 여건 개선*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참여 군: ('18) 76개 군 → ('22) 99 (농림축산식품부, 2023)

○ 도시가스·LPG 보급률 확대 및 난방비 절감*, 상·하수도 보급률 개선**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

* 난방시설 보급률/난방비(도시가스·LPG): ('18) 48.9%/15.5만 원 → ('23) 55.8%/14.8 (농촌진흥청, 각 연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0) 80.2% → ('22) 82.8, 하수도 보급률 ('20) 74.6% → ('22) 76.6 (권인혜 외, 2023)

○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3.3)

□ (미흡한 점) 필수서비스 기능 소멸, 비계획적 입지 등 난개발, 빈집 증가 등의 여건 속에서 농촌공간 고려 정주공간 재생 필요

○ (필수서비스) 인구 과소지역 증가 전망*에 따라 필수생활서비스 기능이 사라지는 읍·면이 전국적으로 증가** 현실에 대한 대응 미흡

*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20) 354개(25%) → ('30) 382(27) → ('40) 427(30) → ('50) 470(34) (한이철 외, 2022)

**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할 소매점이 없는 식품사막 마을이 전국 농촌에 73.5% 분포 (통계청, 2020)

○ (주택)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 증가* 등 주거환경 대대적 개선 필요

* 빈집 수(지자체 행정조사): ('15) 49천 동 → ('20) 56 → ('22) 66 (지자체 행정조사, 각 연도)

○ (교통) 도시 대비 농촌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열악**,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광역이동권 축소

* 시외버스 이용객: ('19) 199백만 명 → ('22) 97, 시외버스 업체 수: ('18) 72개소 → ('20) 69 → ('22) 66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각 연도)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부족 지역: 농촌(법정리) 30.2%, 도시(법정동) 16.9%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 (안전) 농촌의 범죄발생 감소 저조

* 인구 1만명 당 범죄발생건수: 도시 ('18) 312건 → ('22) 292, 농어촌 ('18) 298건 → ('22) 292 (경찰청, 각 연도)

○ (경관·환경) 농촌 주민이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요소에 대한 주민 참여 관리 방안 필요

* 버려진 생활쓰레기 29.5%, 빈집 19.5%, 공장 9.8%, 불법현수막 9.2%, 영농폐기물 8.2% 등 (농촌진흥청, 2022)

3.4.4. 경제·일자리 부문

□ (주요 성과) 융복합사업·농촌관광 활성화, 취·창업 지원 등으로 농촌 소재 농식품 창업 증가율 전국 상위 등 최근 농어촌은 기회의 공간으로 부각

○ 소득기반 다각화,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 기여

-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 원) 증가

* 농가소득: ('20) 45,029천 원 → ('22) 46,153 → ('23) 50,828 (통계청, 각 연도)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촌관광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20) 1,909명 → ('23) 2,396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 농촌관광 경험률 변화 추이: ('20) 30.2% → ('22) 35.2 (농촌진흥청, 각 연도)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조직 지속 증가

* 사회적기업: ('20) 649개소 → ('23) 1,038 (사회적기업포털, 2023)

** 마을기업: ('20) 637개소 → ('23) 98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운영현황, 2023)

*** 협동조합: ('20) 4,668개소 → ('23) 7,038 (coop 협동조합, 2023)

□ (미흡한 점) 그간 농업 위주의 정책추진과 농업, 혁신, 식품 등 개별 접근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 미흡

○ (산업구조) 농산업 구조를 농업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기반, 기업참여 융복합형 구조로 전환 필요

○ (취·창업) 최근 5년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이나, 2023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농림어업분야 취업자 수: ('19) 1,395천 명 → ('22) 1,526 → ('23) 1,513 (통계청, 각 연도)

○ (생태계)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관계·생활인구를 창출하여 정주인구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마련 필요

* 선순환 구조: 관계인구 → 생활인구(체류인구) → 정주인구

3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 (정책 목표) 농어업인·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 간, 농어촌 내 격차 해소와 함께,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목표로 전환하고 농어촌에 특화된 성장 전략 마련
 - 농어촌의 상대적인 삶의 질 우위 영역 강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삶의 질 여건을 조성하는 새로운 농어촌 도모

- (정책 대상)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중심에서, 생활인구·관계인구로 확장

- (추진 체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지역 소멸 위험이 크고 농어촌서비스 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읍·면을 삶의 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 및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

- 지자체가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관련 사업의 통합·포괄 지원으로 지자체 계획의 실행력 확보
- 삶의 질 핵심과제와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촌공간계획의 연계·운영 강화

○ (평가·환류 체계) 삶의 질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편

- (과제 평가)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과 대표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를 구성하고, 별도의 중점관리 체계 마련, 핵심과제 심층 평가 결과에 기반한 사전협의 추진
- (실효성 제고) 지자체가 지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 수립주체 일치 및 계획 내용 정합성 제고
- (서비스기준 내실화)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상향,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세밀히 알 수 있도록 서비스기준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
- (계획 환류) 지자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정부는 농촌협약 체결 시 반영여부 확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평가 결과, 취약지역(예: 하위 5개 시·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 도입
- (공간정보 고도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서비스수준 정밀 분석

○ (전략과 부문별 과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전략으로하는 3대 전략, 4대 부문과 12대 주요 과제 제안

〈그림 3-1〉 삶의 질 정책 패러다임 변화

| | | 기존 기본계획 | 제5차 기본계획 |
|--------|----|------------------------------|----------------------------------|
| 기본이념 | |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 | + 농어촌에 특화된 성장전략 마련 |
| 정책 범위 | |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정주인구 유치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 + 생활인구 확대 |
| 부문 | | | |
| 경제·일자리 | | 농수산물 기반 1·2·3차 산업 연계 | 농촌융복합산업 + 지역 특화산업 육성 |
| 정주기반 | | 중심지 기능 강화 |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 보건·복지 | | H/W 정비, 인프라 확충 |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
| 교육·문화 | | 기회의 형평성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 추진 체계 |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시·군 단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읍·면 단위) |
| | 환류 | 지자체 삶의 질 계획에 개선방안 마련 | + 삶의 질 위원회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문제 해결방안 모색 |

2. 목표와 전략

2.1. 비전 및 전략

□ 비전: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

○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농어민·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길 원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다양한 주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농어촌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동 공간,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취약지역 해소를 통해 편리한 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만의 새로운 가치 창출

○ 미래성장 공간: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와 기후 위기의 최전선인 농어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일, 심이 균형 잡힌 미래에도 지속해서 성장하는 공간

□ 추진 전략

○ (전략 1)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벤처·창업 지원 확대
- 경관, 유산, 자연 등 농어촌만이 가진 어메니티 자원이 과거의 보존을 넘어 관광, 치유 등 비즈니스로 활성화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 인재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 (전략 2)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국민의 삶터로서 본래의 농어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여건 개선, 청년 보금자리, 고령자복지주택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해 생활인구·관계인구가 귀농·귀촌 등 정주인구로의 징검다리가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저감, 환경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안전한 공간 조성

○ (전략 3)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농촌 왕진버스, 섬 닥터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도 확충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 여건 개선
- 농어업인 사회보장 및 재해보장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안정화 도모
- 농어촌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임비 지원, 벽지노선 지원대상 확대 등 식품 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2.2. 부문별 과제

○ (경제·일자리) 전후방 산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Agribiz+) 활성화로 기회의 농어촌 구현

- Agribiz+ 확대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네트워크 기반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
- 전환기 농촌관광의 변화 대응과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소멸 대응형 지역특화발전 거점 구축 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경제공간 정비

○ (주거·교통·안전·환경)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조성

- 미래 지향적 주거기반 조성

- 거점-배후마을 연계를 통한 농촌생활권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
- 환경·경관 보전과 농촌다운 가치 제고
- 재해·재난·사고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

○ (보건·복지·돌봄)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한 농어촌 실현

- 필수의료체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세대 소득 안정
- 농어촌 맞춤형 영유아 보육 제도 정착

○ (교육·문화)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농어촌 특화 환경 조성

- 농촌형 교육·문화 사업 확대
- 교육·문화 주체 육성 및 신 공동체 문화 조성
- 농촌 교육·문화 공간 및 서비스 확충
- 미래형 문화·여가 생태계 구축

2.3. 추진 기반

□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 연계성 강화

- 시·도 삶의 질 계획 폐지, 지자체 공간계획 수립 주체를 시·군·자치구로 확대*해 지자체 공간계획-삶의 질 계획 수립주체 일치

* 일반시·자치구 중 농어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포함(예, 광주시 광산구, 전주시 등)

- 지자체가 삶의 질 향상 내용을 포함하여 농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통합·포괄 지원으로 지자체 계획의 실행력 확보

○ 삶의 질 정책 추진·환류 기능 강화

- 관계부처 사전협의 대상으로 삶의 질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가
-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삶의 질 향상에 영향력이 큰 타 부처 사업(핵심사업)을 포함시키는 추진체계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를 농촌공간계획과 연계·운영
 - *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 현황과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행실태,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 도입

- 지역 소멸 위험이 크고 농어촌서비스 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읍·면을 삶의 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 취약지역 읍·면을 포함하여 시·군 공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사업 포괄적 농촌협약 체결

-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요구권 부여(「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 및 정부의 기초 인프라 지원사업의 우선권 부여(사업 시행지침 일괄 개정)
- 필요 사업이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내실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자체 행정조사를 근거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4개 항목은 국가 승인 통계로 대체하여 통계의 신뢰성 제고

- 지자체가 지역의 농어촌서비스 달성 정도를 세밀히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

-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과제 중 핵심과제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
 - 핵심과제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과제 중 시의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사전협의 방식의 정책 환류에 활용하여,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삶의 질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지원 강화
- (가칭) 농어촌 삶의 질 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삶의 질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삶의 질 정책 성과를 평가
 - 지자체 삶의 질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 지자체 삶의 질 계획 이행실태 분석 및 정보 제공 강화
 - 시·군별로 서비스 전달 공백지역을 세밀하게 분석·도출하고, 분석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서비스기준 달성 관련 미달성 세부 실태에 초점을 두어 운영

〈그림 3-2〉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추진기반

| | | | |
|-------------------|--|--|------------------------|
| 비전 |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 | | |
| 목표 | ① [경제·일자리] 농어촌 사업체 수 : ('22) 135만 개 → ('29) 189 ② [생활인구]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 : 연평균 3% 증가 ③ [정주만족도] 도·농간 삶의 질 격차 : ('24) 0.8점 → ('29) 0.4 | | |
| 전략 | 농어업 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 부문별 과제 | 경제·일자리 | ○ Agribiz+확대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네트워크 기반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 ○ 전환기 농촌관광의 변화 대응과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소멸 대응형 지역특화발전 거점 구축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경제공간 정비 | |
| | 주거·교통· 안전·환경 | ○ 미래 지향적 주거기반 조성 ○ 거점-배후마을 연계를 통한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 ○ 환경·경관 보전과 농촌다운 가치 제고 ○ 재해·재난·사고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 | |
| | 보건·복지·돌 봄 | ○ 필수의료체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소득안정 및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촌 맞춤형 영유아 보육 제도 정착 | |
| | 교육·문화 | ○ 농촌형 교육·문화 사업 확대 ○ 교육·문화 주체 육성 및 신 공동체 문화 조성 ○ 농촌 교육·문화 공간 및 서비스 확충 ○ 미래형 문화·여가 생태계 구축 | |
| 추진 기반 | ○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적 지원 강화 ○ 삶의 질 정책 정책 평가·환류 체계 내실화 ○ 삶의 질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지원 강화 | | |

자료: 연구진 작성.

4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부문별 추진 과제

1. 경제·일자리 부문

1.1. 여건 및 개선 방향

□ (농어촌경제의 삼중고)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농업 기반 감소

○ 최근 증가하던 농어촌 인구가 다시 감소하거나 정체하기 시작

- 2017년 귀농·귀촌 50만 시대가 열렸지만, 이후 증가세가 약화하거나 증감 반복
- 도시민의 귀농·귀촌만으로는 농촌의 인구·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
- 농어촌의 고령화 심화*와 향후 농촌경제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 감소

* 2023년 기준 농촌의 고령화율 27.6%(면 부 35.7%, 전국 19.0%) (행정안전부, 각 연도)

* 19세 미만 미래세대 인구 비율: 농어촌 ('11)22.6% → ('23)15.6, 전국 ('11)24.5% → ('23)18.6 (행정안전부, 각 연도)

○ 도시 가구 대비 농어가의 소득 격차 심화와 농어업에 대한 외면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수준: ('02) 71.9% → ('22) 59.1 (통계청, 각 연도)

* 전국 가구 대비 농가 비중: ('70)42.4% → ('00)9.6 → ('22)4.7 (통계청, 각 연도)

* 전국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 ('70)44.7% → ('00)8.6 → ('22)4.2 (통계청, 각 연도)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 감소

- 국내 총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림어업생산액은 오히려 감소

* 국내 총생산¹⁾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70)26.5% → ('00)3.9 → ('22)1.7 (통계청, 각 연도)

* 2022년 기준 국내 총생산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 농림어업 생산액은 1.0% 감소

〈표 4-1〉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

단위: 10억 원, %

| 시기 | 농림어업 생산액(10억 원) | 농림어업 비중 | 국내 총생산(10억 원) |
|-------|-----------------|---------|---------------|
| 1970년 | 740.7 | 26.5 | 2,796.6 |
| 1980년 | 5,668.5 | 14.3 | 39,725.1 |
| 1990년 | 15,255.3 | 7.6 | 200,556.2 |
| 2000년 | 25,138.7 | 3.9 | 651,634.4 |
| 2010년 | 28,357.0 | 2.1 | 1,322,611.2 |
| 2020년 | 31,441.7 | 1.7 | 1,839,523.3 |
| 2021년 | 33,070.8 | 1.7 | 1,918,709.9 |
| 2022년 | 32,736.0 | 1.7 | 1,968,839.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23).

□ (농어촌 일자리, 새로운 기회의 場)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 新인구의 유입과 이들에 의한 新경제활동 확대

○ 청년들 특히 MZ세대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농어촌을 선택하는 사례 증가

- 평생을 한곳에서 사는 장소 기반의 삶의 양식(place-bound tradition)에서 인생 주기별로 그리고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시간 기반의 삶의 양식(time-bound tradition)으로 사회 변화

* 기대 수명 증가와 의료수준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 소득 증대 등으로 우리 국민은 길어진 인생의 시간 길이만큼이나 삶의 공간적 확대와 다양화를 추구

1)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에 의해 창출된 것도 포함.

- 이러한 경향은 MZ세대에서 증가함.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탈도시 청년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 등을 실현할 기회의 공간으로 농촌을 선택
- 농어촌에 새롭게 유입된 청년은 스스로 창업을 이루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추가적인 일자리, 농어촌에서 새로운 활력과 혁신, 주민의 소득 등을 창출
 - * 전남 곡성군 팜앤디협동조합, 경남 고성군 ㈜바다공룡,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관찰아 마을, 충남 공주시 자유도, 경남 의성군 논밭에,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충남 홍성군 ㈜행복한여행나눔 등 다양한 사례 존재
- 지난 10년간 귀농·귀촌인 누적 수 5백만 명을 초과하였고, 특히 이들 중 창조계층은 농촌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기여
 - * 최근 귀농·귀촌인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50만 명 전후의 도시 인구가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
 - * 지난 10년(2013~2022년) 동안의 누적 귀농·귀촌 인구는 총 5,078,449명 (통계청, 각 연도)
 - *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군 지역이 인구 3만 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지난 10년간 우리 농어촌에 169개의 군을 만들 수 있는 인구가 사회적 이동으로 새로 유입

○ 귀농·귀촌인 중 창조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

- 창조계층(creative class)은 문화·예술작품을 포함한 새로운 상품이나 체계, 관계 등을 개발, 디자인 또는 창조하는 일 즉, '의미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전문지식·기술 분야 전문가, 창조적 전문가로 구분*
 - *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은 작가, 연극·영화·영상 전문가, 화가 및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기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을, 전문지식·기술 분야 전문가는 생명·자연과학 전문가, 공학분야 전문가,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창조적 전문가는 공공조직·단체의 임원, 기업 고위 임원, 정보시스템 운영자, 의료전문가, 법률·행정 전문가, 인사·경영 전문가, 금융·보험 전문가, 기획·홍보·조사 전문가 등을 포함
- 귀농·귀촌인 중 창조계층은 농어촌에서 교육·역량 강화, 홍보·출판, 문화·예술, 기술 지원, 농촌관광·축제, 유기농 등 농업활동, 투자 및 기업지원, 농촌 ICT 기반구축, 가공 및 판매, 마을 및 지역개발, 지역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농촌경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표 4-2〉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귀농·귀촌 창조계층의 농어촌활동

단위: %

|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 | 전문지식기술분야 전문가 | | 창조적 전문가 | |
|--------------|------|---------------|------|--------------|------|
| 교육 및 역량강화 | 21.7 | 농업농촌 기술지원 | 37.7 | 교육 및 역량강화 | 20.3 |
| 언론출판홍보 | 17.4 | 유기농 등 농업활동 | 13.2 |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 16.9 |
| 지역문화예술활동 | 17.4 |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 11.3 | 취업 및 소득 창출 | 11.9 |
| 농촌관광축제활동 | 13.0 | 교육 및 역량강화 | 9.4 | 공공부문 지원 및 자문 | 8.5 |
|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 8.7 | 취업 및 소득 창출 | 5.7 | 농업농촌 기술지원 | 8.5 |
| 지역복지활동 | 8.7 | 가공 및 판매 활동 | 3.8 | 투자 및 기업 지원 | 5.1 |
| 가공 및 판매사업 | 4.3 | 농업농촌 ICT 기반구축 | 3.8 | 가공 및 판매 활동 | 5.1 |
| 유기농 등 농업활동 | 4.3 | 지역복지활동 | 3.8 | 농촌관광축제활동 | 5.1 |
| 취업 및 소득 창출 | 4.3 | 가공 및 판매사업 | 1.9 | 유기농 등 농업활동 | 5.1 |
| | | 공공부문 지원 및 자문 | 1.9 | 귀농귀촌지원활동 | 3.4 |
| | | 귀농귀촌지원활동 | 1.9 | 지역문화예술활동 | 3.4 |
| | | 기타 | 5.7 | 지역복지활동 | 3.4 |
| | | | | 교육 및 역량 강화 | 1.7 |
| | | | | 기타 | 1.7 |

자료: 김광선 외(2019),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 (농어촌의 저밀도 경제) 농어촌의 발전 소외, 낙후, 산업기반 부족 등의 인식과 달리 최근에는 농어촌경제가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주목

○ 농업 부문의 감소를 상쇄할 기업이나 일자리의 분포에 있어 농어촌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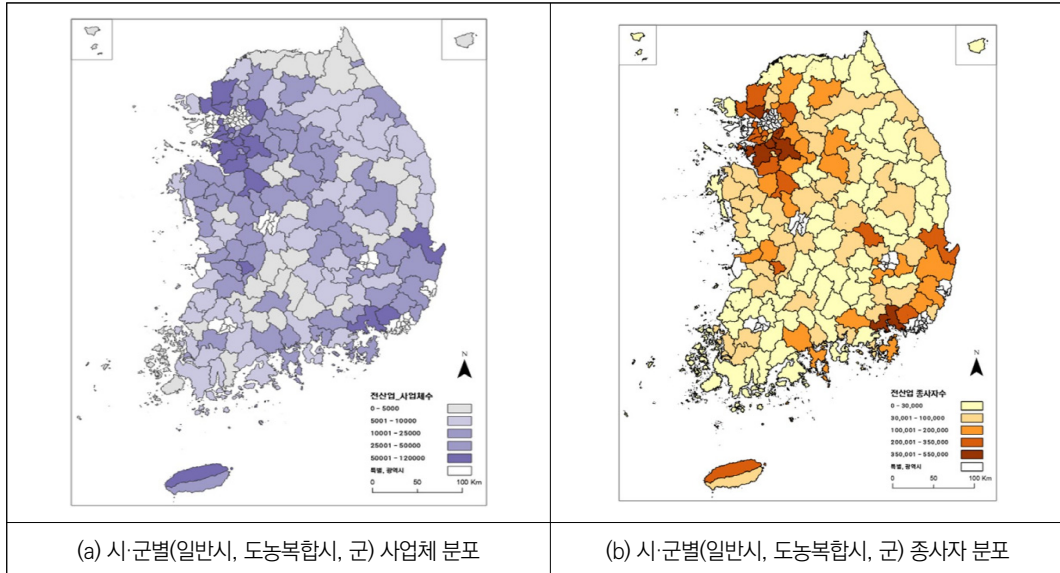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40.2%, 사업체 종사자 중 38.5%가 농어촌에 분포(통계청, 2022)

- 교통·통신 발달과 물류, 유통, 기업환경, 주거환경, 산업기반 등의 개선으로 농촌과 같은 저밀도 지역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저밀도 경제의 발전 기대 가능

* 다만, 전형적인 농어촌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의 사업체 분포 비중은 9.7%, 종사자 분포 비중은 8.5%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 농촌소멸의 위험을 해소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작용

〈그림 4-1〉 기초자치단체별 산업 분포(특광역시 제외)

단위: 개소, 명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는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였음.

자료: 경제총조사(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20); 김광선 외(2023)에서 재인용.

○ 새로운 사업 기회,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중요성 증대

- 2023년 기준 농어촌(읍·면) 소재 기업 중 29.8%가 창업 후 5년 이하인 창업 단계 기업
 - * 2023년 4월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읍·면에 소재하면서 정상 운영 중인 기업 7만 4,497개소를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운영 자료 분석 결과(김광선 외, 2023)
-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사업체 창업 증가율이 연평균 5.7%를 기록한 반면, 농어촌에서 농식품산업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음료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의 창업 증가율은 연평균 12.1%의 높은 수준(송미령 외, 2023)

〈표 4-3〉 농어촌 소재 기업 현황

| 지역 구분 | 사업체수 (개소) | 종사자수 (명) | 기업규모별 비율(%) | | | | | 2016~22년 창업기업(%) |
|--------|-----------|----------|-------------|------|-----|------|-----|------------------|
| | |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경기 | 3,172 | 14,344 | 50.3 | 42.4 | 6.4 | 0.1 | 0.1 | 34.9 |
| 강원 | 4,939 | 24,503 | 56.6 | 38.7 | 3.7 | 0.1 | 0.2 | 28.6 |
| 충북 | 7,927 | 76,099 | 51.1 | 38.9 | 8.4 | 0.6 | 0.2 | 30.0 |
| 충남 | 6,208 | 35,786 | 53.6 | 38.9 | 6.4 | 0.2 | 0.1 | 28.4 |
| 전북 | 5,079 | 25,942 | 58.5 | 36.0 | 4.4 | 0.2 | 0.0 | 30.8 |
| 전남 | 12,563 | 70,060 | 55.5 | 38.1 | 5.5 | 0.2 | 0.1 | 30.0 |
| 경북 | 10,622 | 54,058 | 56.3 | 37.7 | 5.4 | 0.1 | 0.0 | 27.5 |
| 경남 | 7,402 | 41,090 | 56.4 | 37.4 | 5.1 | 0.2 | 0.1 | 28.0 |
| 제주 | 2,859 | 12,415 | 52.0 | 41.0 | 6.1 | 0.2 | 0.3 | 34.4 |
| 군 | 67,062 | 434,664 | 54.8 | 38.3 | 5.9 | 0.3 | 0.1 | 29.1 |
| 도농복합시 | 7,265 | 46,490 | 53.8 | 37.7 | 7.2 | 0.3 | 0.3 | 36.5 |
| 읍 | 37,092 | 232,224 | 55.3 | 37.9 | 5.7 | 0.2 | 0.1 | 29.5 |
| 면 | 37,405 | 250,700 | 54.0 | 38.5 | 6.3 | 0.3 | 0.1 | 30.1 |
| 농산업기업 | 7,819 | 25,730 | 56.0 | 37.0 | 5.6 | 0.1 | 0.1 | 35.3 |
| 비농산업기업 | 66,678 | 457,194 | 54.5 | 38.3 | 6.1 | 0.3 | 0.1 | 29.2 |

자료: 김광선 외(2023),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전략 연구.

□ (새로운 농촌관광) 관광형태의 변화와 생활인구(관계인구) 증가에 따른 농촌관광의 범위와 시장 확대

- 코로나 팬데믹으로 농촌관광 규모 급격히 감소한 이후 최근 회복 중
- 농촌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단체 농촌관광 중심에서 소규모 농촌관광 또는 나홀로 농촌관광 확대
 - 농촌관광 목적의 다양화에 대응한 적소시장 발굴과 농촌관광 상품 개발 필요
-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의 다변화, 농촌관광 시장의 급변 등에 대응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운영체계 구축 지원 필요

1.2. 전후방 산업 및 농어촌형 비즈니스(Agribiz+) 활성화로 기회의 농어촌 구현

| | | | | |
|------------------|----------|--|----------|--|
| 주요 과제 | 1 | Agribiz+확대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2 | 네트워크 기반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융복합산업 확대와 관련 기업 지원체계 구축 • Agribiz+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 농업·농촌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와 체류 기반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농촌산업의 고도화와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체계 구축 • 농촌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
| | 3 | 전환기 농촌관광의 변화 대응과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 4 | 농어촌소멸 대응 위한 지역특화발전 거점 구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 투어리즘 맞춤형 지원 확대 • 관광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농촌관광 상품 다양화 • 지역단위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운영 체계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 농어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운영 |

1.2.1. Agribiz+확대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농촌 융복합산업 확대와 관련 기업 지원체계 구축

○ 품목별, 지역별 현장 문제 해결형의 스마트 농업의 확산

- 적정기술 또는 최적화 기술의 개발·발굴과 보급 확대
- 여성 친화적, 고령자 친화적 농작업 기계화 확대

○ 가공·유통 디지털화를 통한 농업의 신산업화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푸드테크 연관산업 육성(친환경 대체식품, 식품 Bio, 식물공장 등)
- 농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시장 확대(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2027년 3조 7천억 원 규모로 육성)

○ 기업 형태의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확대 필요

- 최근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수 감소('20년 10만 4,067개소 → '22년 10만 869개소). 특히 농가 경영체(89,525개소 → 89,620)보다는 기업 형태의 법인 경영체의 감소(14,542개소 → 11,249)가 크게 작용

- 귀농·귀촌인, 농촌 융복합산업 참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경영, 시장조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기업 형태의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확대 도모 필요

○ 투입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 사업장(가공공장, 판매장, 전시장 등)의 안정적 확보, 판매·유통망의 확보와 물류 개선, 기계·설비의 개선, 인력 확보, R&D 및 상품개발, 수출 등 다양한 경영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표 4-4〉 농촌 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구분 | | 2020년 기준('22년 조사) | 2022년 기준('23년 조사) |
|--------|------|---|---|
| 참여 경영체 | | - 10만 4,067개소 * 농가 89,525(86%) * 법인 14,542(14%) - 인증사업자 1,805개소 * 귀농 22.0% | - 10만 869개소 * 농가 89,620(89%) * 법인 11,249(11%) - 인증사업자 2,204개소 * 귀농 29.6% |
| 매출액 | 전체 | - 23조 2,564억 원 * 1차 88,761억 원 * 2차 70,697억 원 * 3차 73,106억 원 - 인증사업자 26,204억 원 | - 31조 1,677억 원 * 1차 115,629억 원 * 2차 95,946억 원 * 3차 100,102억 원 - 인증사업자 36,270억 원 |
| | 경영체당 | - 2억 38백만 원 * 인증 14억 5,540만 원 * 미인증 2억 1,560만 원 | - 3억 9백만 원 * 인증 16억 4,560만 원 * 미인증 2억 791만 원 |
| 종사자 수 | 전체 | - 327,645명 * 인증경영체 총 종사자 14,192명 | - 383,525명 * 인증경영체 총 종사자 16,685명 |
| | 경영체당 | - 평균 3.1명 * 법인 7.8명, 농가 2.4명 * 인증 7.8명, 미인증 3.1명 | - 3.8명 * 법인 8.2명, 농가 3.2명 * 인증 7.6명, 미인증 3.7명 |
| 업종별 현황 | | - 1×2차 22.6% - 1×3차 47.6% - 1×2×3차 29.8% | - 1×2차 9.6% - 1×3차 19.1% - 1×2×3차 7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1.31.).

□ Agribiz+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 전국적으로 40대 이하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농어촌 중 읍부의 20대 중후반 및 40대 이하 인구는 증가

-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농어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훈련, 취업, 창업 등 분야별 지원 필요

〈표 4-5〉 지역구분(읍·면·동)별-연령대(5세 구간)별 인구수 및 증감

| 구분 | 읍부 | | 면부 | | 동부 | | 전국 | |
|--------|-----------|--------------|-----------|--------------|------------|--------------|------------|--------------|
| | '23년(명) | '15-'23년 (%) | '23년(명) | '15-'23년 (%) | '23년(명) | '15-'23년 (%) | '23년(명) | '15-'23년 (%) |
| 0-4세 | 141,204 | -39.5 | 77,973 | -45.1 | 1,142,560 | -39.3 | 1,361,737 | -39.7 |
| 5-9세 | 214,005 | -9.0 | 108,184 | -22.1 | 1,657,837 | -12.5 | 1,980,026 | -12.7 |
| 10-14세 | 251,574 | 6.1 | 127,080 | -14.2 | 1,899,009 | -7.0 | 2,277,663 | -6.2 |
| 15-19세 | 242,136 | -18.0 | 141,310 | -35.5 | 1,914,893 | -28.5 | 2,298,339 | -28.0 |
| 20-24세 | 263,028 | -7.4 | 178,797 | -33.1 | 2,473,833 | -17.0 | 2,915,658 | -17.4 |
| 25-29세 | 304,828 | 20.7 | 227,887 | -10.8 | 3,047,220 | 10.5 | 3,579,935 | 9.6 |
| 30-34세 | 314,713 | -3.5 | 232,227 | -12.0 | 3,010,930 | -6.5 | 3,557,870 | -6.7 |
| 35-39세 | 319,426 | -12.4 | 217,473 | -15.1 | 2,797,008 | -15.4 | 3,333,907 | -15.1 |
| 40-44세 | 414,466 | 4.4 | 249,923 | -12.5 | 3,418,783 | -6.5 | 4,083,172 | -5.9 |
| 45-49세 | 401,252 | 4.9 | 250,691 | -23.5 | 3,242,551 | -11.8 | 3,894,494 | -11.2 |
| 50-54세 | 446,491 | 22.7 | 328,867 | -16.3 | 3,707,103 | 5.7 | 4,482,461 | 5.1 |
| 55-59세 | 411,136 | 22.2 | 393,507 | -10.2 | 3,348,431 | 5.2 | 4,153,074 | 5.0 |
| 60-64세 | 419,180 | 70.5 | 501,404 | 37.3 | 3,326,620 | 50.5 | 4,247,204 | 50.5 |
| 65-69세 | 331,102 | 69.0 | 444,941 | 39.7 | 2,591,239 | 59.0 | 3,367,282 | 57.1 |
| 70-74세 | 225,688 | 29.9 | 325,972 | 0.8 | 1,701,265 | 33.6 | 2,252,925 | 27.2 |
| 75-79세 | 170,527 | 17.3 | 258,426 | -14.9 | 1,241,993 | 35.9 | 1,670,946 | 22.6 |
| 80-84세 | 143,974 | 60.0 | 251,853 | 25.4 | 923,903 | 76.5 | 1,319,730 | 62.1 |
| 85-89세 | 81,016 | 97.5 | 152,747 | 67.8 | 466,229 | 93.5 | 699,992 | 87.7 |
| 90-94세 | 28,669 | 108.4 | 54,138 | 78.3 | 157,074 | 94.8 | 239,881 | 92.3 |
| 95-99세 | 6,017 | 119.0 | 11,030 | 84.1 | 33,544 | 108.9 | 50,591 | 104.0 |
| 100+ | 986 | 185.8 | 1,623 | 107.3 | 5,025 | 140.5 | 7,634 | 137.3 |
| 계 | 5,131,418 | 11.1 | 4,536,053 | -5.0 | 42,107,050 | 1.0 | 51,774,521 | 1.4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청년 귀농어·귀촌인의 농어촌에서 비즈니스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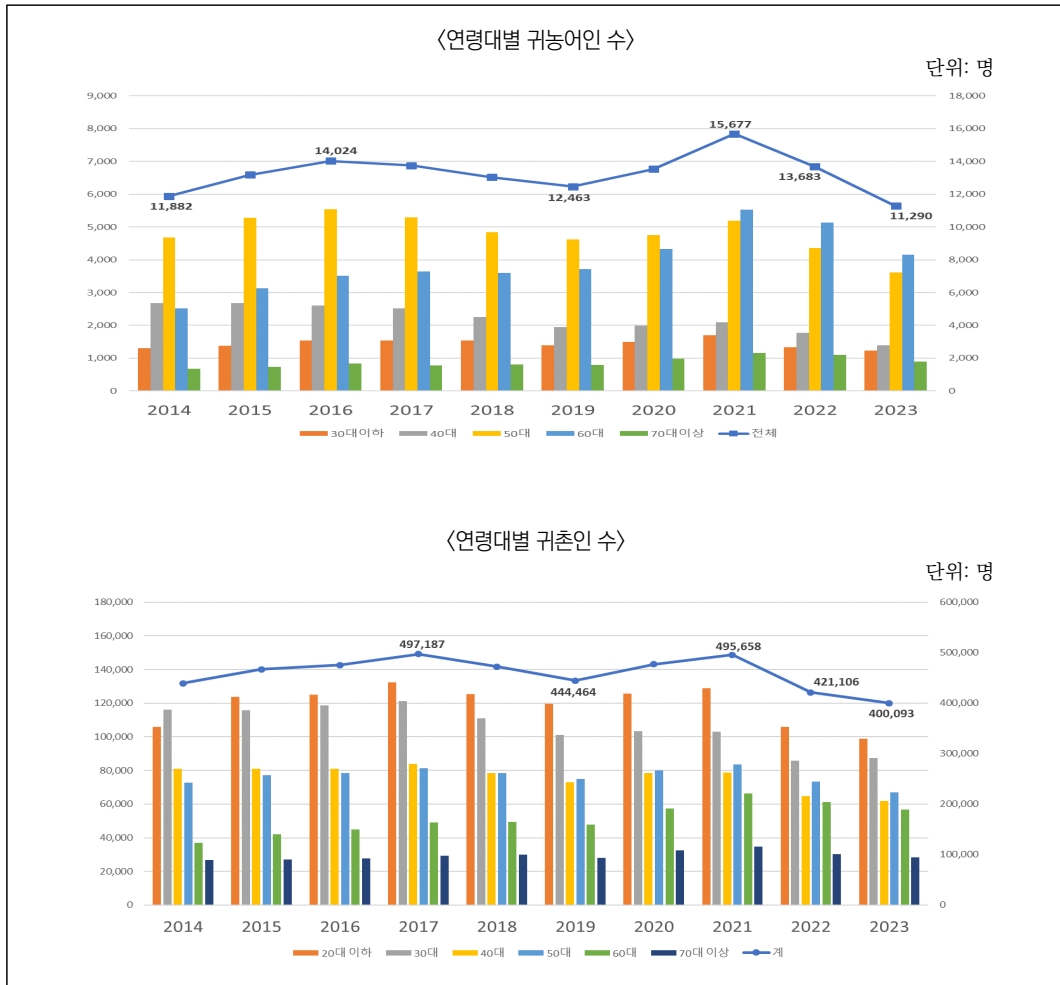
○ 귀농어·귀촌인 중 40대 이하 미래세대 및 청년층 비중이 60% 이상 차지

- 2023년 기준 30대 이하 45.6%, 40대 15.4, 50대 17.2, 60대 14.8, 70대 이상 7.1 (통계청, 2023)

○ 창농을 포함한 농촌 비즈니스(Agribiz+) 분야의 창업과 취업 지원

- 빈집 활용, 농지 임대 규제 완화, 유희공간의 안정적 장기 임대와 리모델링 지원, 농촌 기업의 청년 취업을 위한 임금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정보·교육·훈련 지원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

〈참고〉 귀농어·귀촌인 수 변화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각 연도).

□ 농업·농촌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와 체류 기반 구축

○ 농업생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 확대와 숙련도 향상 지원

- 농가 인구의 고령화, 낮은 기계화·자동화에 따른 농업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생산 분야(품목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수요 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 도모
 -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단위 농협, 주요 작목반 등의 다양한 단위로 실시

○ 지자체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확대

- 소규모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 부여·확대
- 개별 농촌 시·군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 농업생산 외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가공 및 서비스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훈련 지원(기술, 기계·장비, 품질관리, 포장 등)
- 연간 상시 고용, 계절 근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노동력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주거·체류 공간 공급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마을 빈집 활용
-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부지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운영 지원
- 체류형 쉼터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 운영 지원

〈표 4-6〉 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 연도 |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전체 | 농업(E9-3) | 어업(E9-4) | 계절근로(E8) | 농어업종사자 합계 (E9-3, E9-4, E8) |
|------|---------------------|----------|----------|----------|-------------------------------|
| 2014 | 45,814 | 7,372 | 3,216 | - | 10,588 |
| 2015 | 48,311 | 8,164 | 3,938 | - | 12,102 |
| 2016 | 50,653 | 9,407 | 4,773 | - | 14,180 |
| 2017 | 50,916 | 10,563 | 5,313 | - | 15,876 |
| 2018 | 52,463 | 11,067 | 6,055 | - | 17,122 |
| 2019 | 53,136 | 11,133 | 6,729 | - | 17,862 |
| 2020 | 46,576 | 10,344 | 6,451 | - | 16,795 |
| 2021 | 46,048 | 9,848 | 6,089 | 290 | 16,227 |
| 2022 | 53,505 | 12,092 | 8,063 | 2,148 | 22,303 |
| 2023 | 65,006 | 14,245 | 10,072 | 7,348 | 31,665 |

주 1)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 중 체류자격(비자)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를 추정하였음.

2) '농어업종사자 합계'는 비전문취업(E9)체류자 중 농업과 어업으로 분류된 외국인 및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 수의 합계.

3) 계절근로는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1년부터 집계 시작.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각 연도).

1.2.2. 네트워크 기반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 농촌산업의 고도화와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체계 구축

○ (가칭) ‘농어촌 시·군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

-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 특화산업 선정

* 전북 순창군 장류 특화산업, 경북 문경시 오미자 특화산업, 경남 하동군 야생차 특화산업 등

- (가칭) ‘농어촌 특화산업 고도화 계획’ 수립과 연관 정부 예산사업 연계 및 별도 추가 지원 추진

* 농촌형 특구(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운영,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 등과 연계

○ 낙후된 일부 농공단지의 개선·정비와 연계하여 추진

- 농어촌 특화산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전문화, 시설 정비, 각종 지원 등과 연계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가공 및 서비스 사업 창출을 넘어 기업화 이후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

○ 기업형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의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표 4-7〉 농촌기업의 경영 부문별,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 구분 | 창업초기 | 성장단계 | 성숙 및 재도약 단계 | 공통 |
|-----------------|---|--|--|--|
| 구매물류 및 조달 | •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조달 | •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 원료생산의 기계화 | •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 원료생산의 기계화 | • 안정적 계약재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 |
| 생산 | • 사업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 • 차별화 | • 제품 혁신 | • 제품의 품질관리, 안전 및 위생 관리 |
| 출하물류 및 판매 마케팅 | • 판로 확보 | • 안정적 판로 확보 • 판로 다양화 | • 다양화 • 자체브랜드 개발 |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공동 수출 • 시장정보의 공유 |
| 서비스 활동 (가치부가활동) | - | • 생산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융복합 | • 생산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융복합 | • 체험관광, 체험교육 등의 지역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
| 기업하부구조 | • 지원 • 생산시설 지원 | • 생산시설의 확대 및 고도화 | • 생산시설의 개보수 및 개선 지원 | - |
| 인적 자원 관리 | • 역량강화 | • 기술인력 육성 | • 기술인력 육성 | • 지역인재 채용 지원 |
| 기술개발 | • 및 R&D 전문기관과의 협업지원 | •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1대1 기술컨설팅 | •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1대1 기술컨설팅 | •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임상 실험 등 고비용 실험단계에 대한 지원 |
| 경쟁 및 협력환경 | • 원료 생산 단지 조성 • 공동 수출 • 업체 간 협동조합 | • 원료 생산 단지의 경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 •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의 공유 |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업체 발굴 | |

자료: 김광선 외(2018),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

□ 농촌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 2023년 기준 농촌(읍·면)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수 9,058개소

* 사회적기업 1,038개소, 마을기업 982개소, 협동조합 7,038개소

- 향후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

* ('23) 9,058개소 → ('29) 16,047개소로 증가 (매년 10% 증가 시)

○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로 농촌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

- 향후 농촌지역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수에 대한 집계 외에 창출된 일자리의 수와 고용 형태 등에 대한 세부 조사 필요

〈표 4-8〉 읍·면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개소 수(누적)

단위: 개소,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사회적기업 | 116 | 204 | 321 | 382 | 425 | 464 | 519 | 563 | 599 | 649 | 742 | 908 | 1,038 |
| 마을기업 | 77 | 104 | 153 | 217 | 268 | 318 | 376 | 449 | 527 | 637 | 759 | 877 | 982 |
| 협동조합 | - | 10 | 554 | 1,117 | 1,643 | 2,148 | 2,632 | 3,175 | 3,839 | 4,668 | 5,550 | 6,290 | 7,038 |
| 합계 | 193 | 318 | 1,028 | 1,716 | 2,336 | 2,930 | 3,527 | 4,187 | 4,965 | 5,954 | 7,051 | 8,075 | 9,058 |
| 전년 대비 증가 | - | 64.8 | 223.3 | 66.9 | 36.1 | 25.4 | 20.4 | 18.7 | 18.6 | 19.9 | 18.4 | 14.5 | 12.2 |

자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운영현황(23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home/main.do>), coop 협동조합.

1.2.3. 전환기 농촌관광의 변화 대응과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 마이크로 투어리즘 맞춤형 지원 확대

○ 마이크로 투어리즘 친화형 농촌관광 접객 인프라 구축

- 단체 숙소 중심에서 가족 여행, 모녀 여행, 연인 여행, 나 홀로 여행 등 마이크로화된 소규모 단위 농촌관광 접객기반 구축 지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시설 리모델링 지원 필요

* 객실 리모델링, 카페 공간 조성, 산책로 정비 등

- 지역 내 관광자원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소비자 수요 충족

* 지역 내 전통한옥 호텔, 전통 음식점, 힐링 프로그램, 한방 병원 등과의 연계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방안 마련

- 철도, 고속버스, 숙박, 음식점 등의 이용 할인제도 시행·확대

* 과거 청년층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KORAIL의 열차 이용비 할인제도 등 참고 가능

□ 관광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농촌관광 상품 다양화

○ 일회성 방문에서 체류형 방문 수요 확대에 따른 농촌관광 상품 다양화

- 농촌 살아보기와 농촌관광 연계, 농촌 살아보기와 워킹 홀리데이 연계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 농촌 방문객의 농촌에서의 체류-생산-소비 간 복합적인 활동 촉진

○ 개인 소비자에서 기업 소비자로 농촌관광의 고객 확대

- 기업 근로자의 복지, 업무 능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위케이션 시장 공략

- 이 밖에 숲 가꾸기, 귀농 준비, 환경 보호 등 특정 목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개인의 집단의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농촌관광 기반 구축

- 도시의 기업과 연계한 농촌 위케이션 활성화

○ 위케이션, 레크레이션, 레포츠 분야, 교육, 문화 등으로 농촌관광의 확대, 또는 연계 모색 필요

□ 지역단위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운영체계 구축

○ 급변하는 관광시장, 파편화(분절화)되는 관광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농촌관광의 지역단위 대응체계 구축

- 농촌관광 DMO 또는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육성으로 농촌관광의 개별 공급주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관광자원 연계, 지역단위 농촌관광 상품 기획 등을 담당하는 농촌관광 지역 생태계 구심점 마련

○ 지역별로 농촌관광 기획, 홍보, 마케팅, 교육·훈련 등의 체계 구축

1.2.4.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거점 구축

□ 기존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 농공단지는 농촌발전을 위한 거점개발 중 대표적인 사례로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

- 전국 480개소 농공단지에 7,528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14만3천 명에 일자리 제공

〈표 4-9〉 농공단지 주요 현황 통계(2023년 4분기 기준)

| 시도 | 농공 단지 수 (개소) | 총 산업시설구역 면적(천㎡) | 총 가동업체 수 (개) | 총 고용인원 수 (명) | 가동률 (%) | '23년 연간 총 생산액 (백만 원) | '23년 연간 총 수출액 (천 달러) |
|-----------|--------------------|-----------------------|-----------------|-----------------|-------------|----------------------------|----------------------------|
| 부산 | 1 | 189 | 35 | 1,618 | 100.0 | 613,988 | 78,040 |
| 대구 | 4 | 611 | 114 | 2,010 | 96.6 | 644,538 | 54,951 |
| 광주 | 1 | 262 | 64 | 1,602 | 100.0 | 509,764 | 121,016 |
| 울산 | 4 | 458 | 125 | 2,983 | 94.0 | 917,863 | 96,610 |
| 세종 | 4 | 439 | 23 | 1,190 | 92.0 | 444,517 | 56,472 |
| 경기 | 1 | 117 | 4 | 188 | 100.0 | 153,288 | 196 |
| 강원 | 47 | 5,302 | 1140 | 19,418 | 91.9 | 5,262,179 | 654,016 |
| 충북 | 44 | 5,060 | 416 | 12,777 | 88.5 | 7,962,181 | 2,081,415 |
| 충남 | 94 | 11,198 | 1061 | 30,463 | 93.1 | 14,220,166 | 2,133,262 |
| 전북 | 60 | 8,679 | 1014 | 15,071 | 95.6 | 6,541,934 | 487,764 |
| 전남 | 70 | 8,719 | 1359 | 13,768 | 91.5 | 4,464,728 | 391,688 |
| 경북 | 67 | 8,632 | 964 | 18,959 | 89.1 | 7,566,325 | 1,376,991 |
| 경남 | 80 | 8,727 | 1152 | 22,049 | 84.2 | 4,956,384 | 1,383,520 |
| 제주 | 3 | 240 | 57 | 735 | 96.6 | 174,590 | 741 |
| 총계 | 480 | 58,633 | 7,528 | 142,831 | 90.9 | 54,432,445 | 8,916,682 |

주: 가동률=가동업체 수/입주업체 수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24).

○ 그러나 가동 중인 농공단지 중 66.5%가 '노후단지'로 분류될 만큼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화 부족, 지역경제와의 연계 부족, 입지이점 부족 등으로 분양이 낮은 경우 발생

-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6.6%에 달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지역별로는 완료된 단지 내 미분양율이 매우 높은 곳이 존재

* 강원 인제군 귀둔단지 26.5%, 전남 함평군 학교명암축산특화단지는 9.0%, 충남 서천군 서면(감가공특화)단지 62.2%와

충천2단지 66.7%, 충남 보령시 청라단지 20.5%, 전북 정읍시 소성특화단지 22.7%와 철도산업단지 58.0%, 전북 부안군 부안제3단지 19.7%, 전남 무안군 몽탄특화단지 9.0%, 전남 진도군 군내단지 15.8%, 전남 장흥군 창흥단지 19.8%, 경북 문경시 산양제2단지 11.0%, 경북 봉화군 유곡단지 57.6%, 경북 영덕군 영덕제2단지 25.1%, 경북 울진군 죽변해양바이오단지 16.7%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2024)

○ 기존의 노후 농공단지의 전문화 복합 단지로 개선 필요

-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업유치 지원,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서비스 시설, 단지 내 종사자들의 주거시설, 보육·교육시설,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결합된 복합 단지로의 전환 필요

□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운영

○ 소멸위험 대응을 위해 농촌에 특별한 조치와 성장거점 구축 필요

○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제도적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사업을 집중해 추진할 수 있는 농촌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특구) 제도 마련 필요

○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란 농촌의 생활환경, 농업, 산업·경제, 에너지, 교육·문화, 관광, 창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저발전·낙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반 구축, 민간투자, 기업 유치, 기술개발, 정주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특정 지구·구역역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차별성 부여 필요

- ① 지구 유형 다양화: 개별 농촌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또는 지향하는 발전 목표) '맞춤형'
- ② 소규모 지구의 지정·운영: 농촌 주민의 '일상 생활권' 단위 또는 특화자원 및 관련 기업·주체 '집중지역' 중심의 '소규모'
- ③ 자율규제와 제도 혁신: 농지, 입지, 건축, 토지이용, 공공 건물·토지의 임대·위탁, 인프라 구축·정비, 연구·개발, 시험·실증, 특히, 보조금 및 정부예산사업 우선 투자, 금융, 세제감면 등 해당 지구의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운용' 강조(제도적 혁신)

- ④ 공간·부문계획과의 통합: 농촌공간재구조화(기본·시행)계획, 각종 부문계획 등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통합적·체계적 지구 운영’
* 예: 농촌공간재구조화 시행계획 및 농촌협약에 포함, 농촌특화지구와 연계
- ⑤ 예산투자 연계: 소규모 특정 지구·구역의 집중 개발(특구 개발 효율성)과 특정 문제 해소 및 특정 분야 발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특구 운영 효과성)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 예산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곳과 분야’로 제한
- ④ + ⑤ = ‘계획 통합성’ + ‘사업추진 안정성’ + ‘예산확보 용이성’

〈표 4-10〉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주요 유형과 내용(안)

| 구분 | 세부 유형 예시 및 주요 내용 | 지정·운영 범위 |
|---------------------------------|--|---------------------------------------|
| (1) 생활환경 자율규제 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유휴시설 활용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기업이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검토(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64조), 농촌 유휴시설 및 공동시설을 활용한 경제사업·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 빈집, 유휴시설 활용 관련 민관협력 계획 수립 자치단체에 대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가점 부여, 농촌위해시설 철거부지에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특례 마련을 통한 사업성 제고(마을보호지구 지정 등과 연계) - 이와 함께 도로, 가로,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정비 ■ 대중교통 확충(mass/popular transportation)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허용(실증지구 지정·운영) ■ 지능형 소매 기능 구축(농촌 생활편의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인 스마트 소매망 구축(실증지구 지정·운영). 식료품, 세탁, 생활용품, 기초생활서비스 신청, 민원처리 등 → 이용 희망자가 사전에 등록하여 관련 서비스 및 결제 자동 처리 | 개별 마을, 권역, 읍·면 단위 |
| (2) 교육·문화·관광 자율규제 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특구(예: 강원도 화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운영의 학원 운영,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진학·진로 전문 컨설팅 - 스쿨버스의 지역 내 학생 활동을 위한 추가 운영, 주민 이용과 연계 ■ 문화·관광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촉진 - 기존 농촌관광 공급 주체의 지역단위 네트워크화(다변화되는 농촌관광 수요·시장 변화에 지역단위로 집합적 대응) - 중간지원조직 운영, 방문자(도농교류) 센터 건립, 관련 자원 발굴·개발 및 연계, 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등 - 결국 농촌형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예: 고창농악, 익산 농촌관광, 인제 농촌위케이션 등 - 교육·문화·관광을 농촌 레포츠, 레크레이션 분야를 포함하도록 확대 | 복수의 읍면, 시·군 단위 (시설은 특정 읍·면의 특정 지구 집중) |

(계속)

| 구분 | 세부 유형 예시 및 주요 내용 | 지정·운영 범위 |
|-------------------------------|---|-------------------------------|
| (3) 보건·의료·사회복지·자율규제·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의료 특구(예: 경북 농촌왕진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사각지대 오지 농촌 대상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집중 시행 - 의료특수차량 지원, 왕진 진료뿐 아니라 간단한 시술의 경우 병원 외 왕진을 통해 가능하도록 허용 - 의·약 분업 규제 완화 ■ 오지면 중심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의 통합 체계 구축 촉진 | 복수 읍·면 단위 |
| (4) 환경·에너지·자율규제·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자원순환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경·축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 지역기반의 소규모 농촌형 분산에너지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열, 수력, 풍력, 지역을 이용한 소규모 에너지 생산·공급기와 지역 소비체계 구축 ■ 생태환경 개선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개발 등으로 인해 경관관리가 필요해진 농촌지역, 폐광지역 등 대상 - 농업시대 하천 복원 정비, 마을 숲 정비, 폐광지역 경관 정비(폐광지역의 재생에너지 지구, 교육·문화지구로의 전환) | 마을(에너지 자립마을), 읍·면 단위 |
| (5) 지역특화·산업육성·자율규제·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 농공단지, 신규 농공단지의 전문화·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및 곡성 자연드림파크 개발 방식 참조(특화 분야 전문생산, 연구개발, 교육·문화·관광, 유통, 주거, 복지, 교통연계 등의 복합) ■ 지역특화자원 기반의 특화발전 및 전후방연계 Agribiz+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농촌지역의 주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확장형 | 기존 농공단지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면적 규모 참조 |
| (6) 농업혁신·자율규제·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농업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IT, NT, BT 등)과 농업 자원을 융복합화하여 생산 및 가공의 스마트 관리, 기계화·자동화 및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첨단화, 생산성 향상, 농업과 환경·교육·문화·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 농업 생산 및 가공, 연구개발(R&D), 창업, 교육, 인프라(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기업과의 협력 강화 -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혁신을 통해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지원 ■ 공동영농특구(기계화·자동화 추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 중간간지역 소규모 영농, 고령 영농, 여성 영농 등에 특화된 기계화·자동화 영농 단지 조성 - 기계화·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 읍·면 단위 |
| (7) 청년혁신·자율규제·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영농(창농)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임대 규제, 체계적 영농기술 교육, 주거 지원(빈집, 체류형 쉼터 등 활용),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제한), 영농자금 지원 등 ■ 청년 취·창업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창업 촉진 - 농촌 유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장기 임대 지원 - 방치된 마을 단위 사업 경영을 위한 공공시설 재위탁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 청년 고용 사업체에 대한 임금 보조 등 청년 고용지원 | 읍·면 단위 |
| (8) 국가집중육성·농촌신산업·자율규제·혁신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단위의 농업·농촌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regional motor 개발·육성 | 국가 선정 입지 |

주: (1)~(6): 기본 유형, (7)~(8): 추가 고려 유형
 자료: 연구진 작성.

2. 주거·교통·안전·환경 부문

2.1. 여건 및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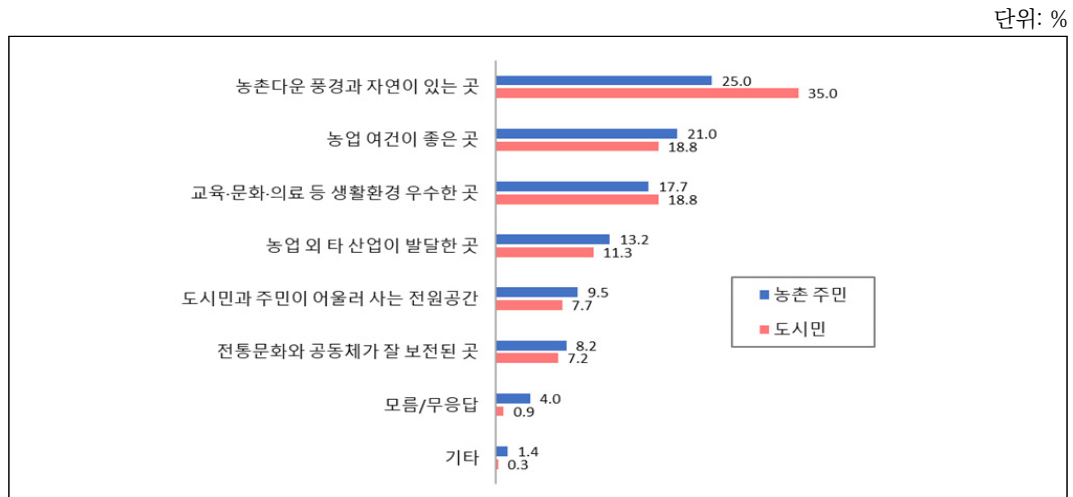
□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 필수적 서비스 여건 등 농촌의 전반적 정주 기반 취약

○ 높은 노후주택 비율, 빈집 증가, 난개발 시설분포 등 전반적으로 낮은 주거환경 수준

* 농촌 빈집 수: ('15) 49천 동 → ('20) 56 → ('22) 66 (지자체 행정조사, 각 연도)

* 국민들은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이 있는 곳을 가장 바람직한 농촌으로 인식(송미령 외, 2020)

〈그림 4-2〉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 모습



주: 2020년 도시민, 농촌 주민 3,323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 송미령 외(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 농촌의 필수적 생활서비스, 대중교통 이용 여건 취약,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

- 인구 감소에 따라 필수적 생활서비스 기능이 사라지는 읍·면들이 전국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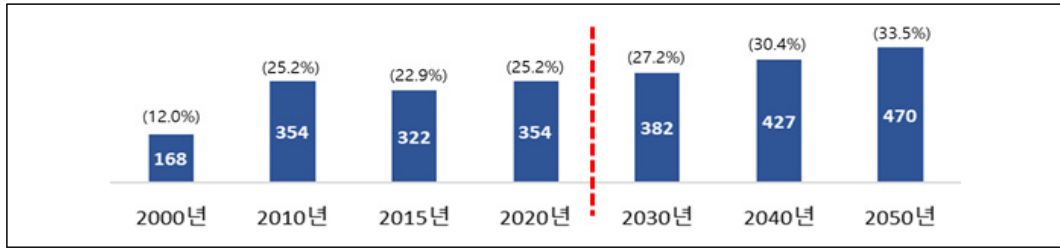
* 신선식품 소매점이 없어 '식품사막'으로 불리는 마을이 전국 농촌에 73.5%가 분포 (통계청, 2020)

- 도시 대비 농촌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며, 코로나19 이후 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농촌의 광역교통서비스 축소

*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00) 168개(12.0%) → ('20) 354(25.2%) (한이철 외, 2022)

〈그림 4-3〉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수 변화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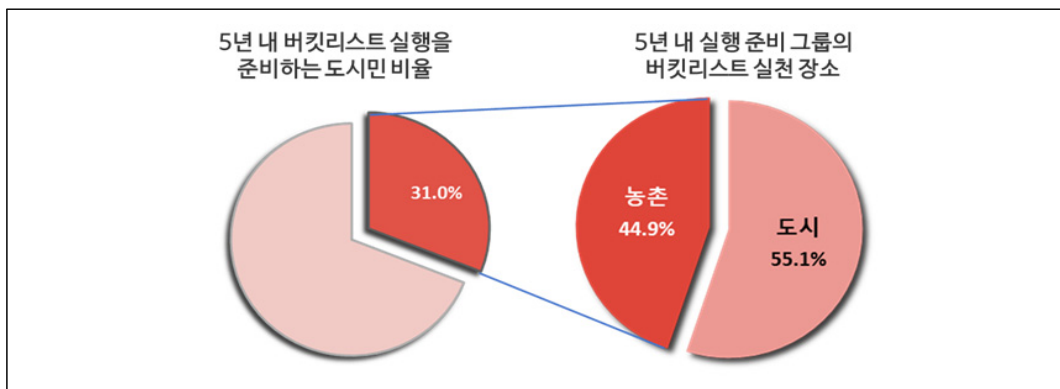
자료: 한이철 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 국민들의 거주·체류·활동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이 조명

○ 2010년대 이후 40만 명 중후반 규모로 귀농·귀촌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의 거주·여가·활동 장소로서 농촌공간 재조명

- 도시민의 14%가 5년 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관계인구 저변이 폭넓게 존재
- 관계인구의 농촌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주택, 교육, 일자리 등)과 함께 체류할 공간 조성,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 수요 증가
- 다른 한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실제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해 조사 결과,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을 조성한 지자체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밖의 시책들을 모두 10% 미만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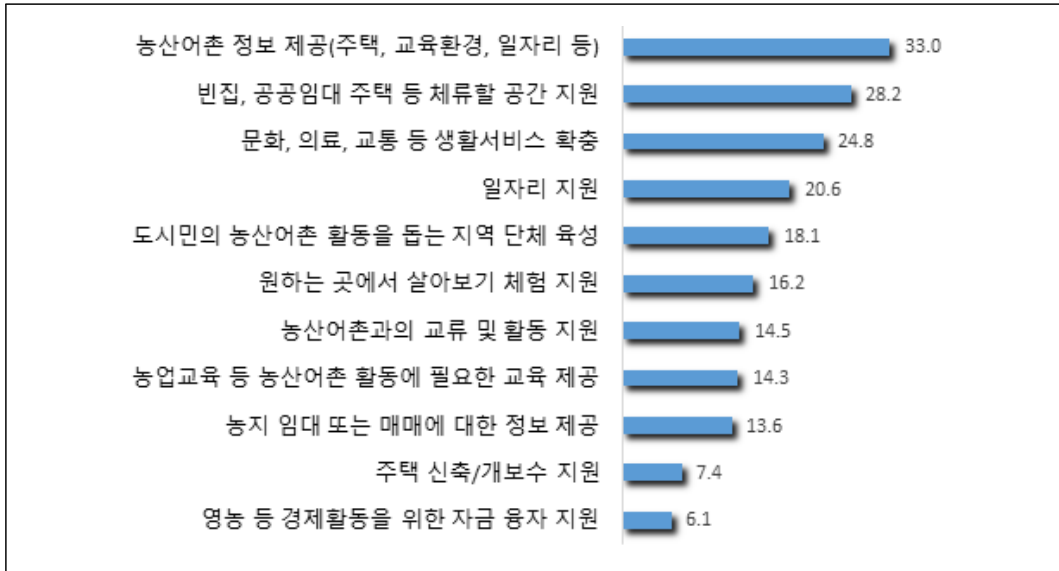
〈그림 4-4〉 5년 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도시민 현황



자료: 송미령 외(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그림 4-5〉 관계인구의 농촌 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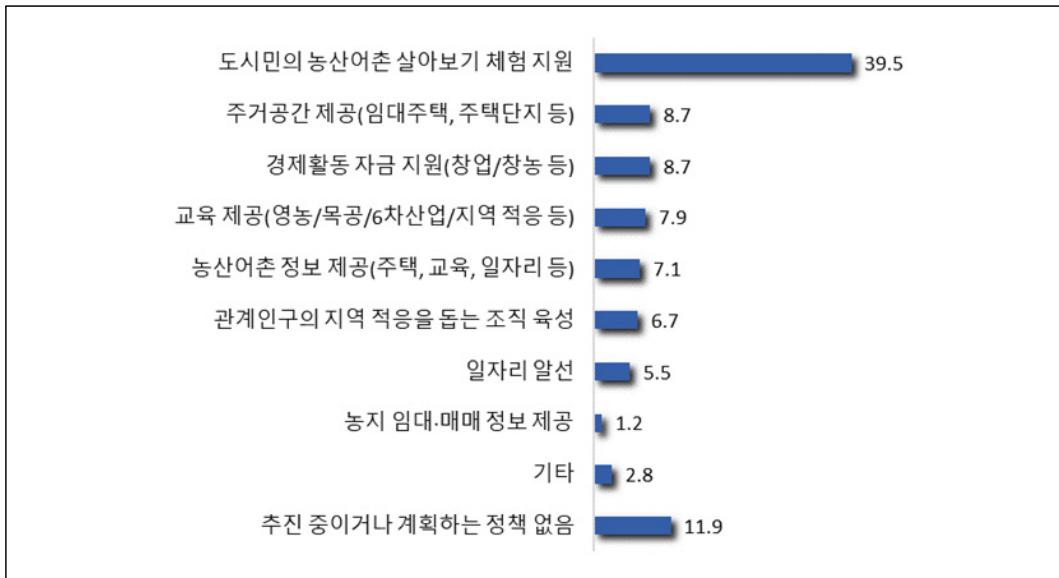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성주인 외(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그림 4-6〉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책

단위: %



자료: 성주인 외(2022),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과 과제.

□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연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공간정책 필요

○ 미래 농촌 정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방향 정립

-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읍·면 중심지 기능 약화, 과소화 마을 확산 등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농촌공간 구상 도출

○ 빈집을 포함한 유희시설의 종합적 정비 및 농촌 주거 분야 정책 다변화(에너지 절감 주택,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 등)

- 과소화 마을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한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함께 장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한 빈집·유희시설 활용 대책 추진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디지털·스마트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

- 스마트 커뮤니티센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농촌 적용 사례가 현재는 초기 단계

□ 기후 변화, 기상 이변 및 재해 위험 증가에 따라 주민 안전을 도모할 필요

○ 기상 이변이나 재해 위험에 취약한 고령자가 다수 분포하는 농촌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책 확대

- 기상청 폭염주의보 초과일수는 현재(1985~2014년) 연평균 6일 정도이지만, +2℃ 지구온난화 시기 29일까지 증가, +3℃ 지구온난화 시기 47일까지 증가하는 등 폭염의 일상화 본격화

* 폭염 주의보 초과일수는 현재 대비 +22일(2℃)에서 +41일(3℃) 까지 증가 (정휘철 외, 2022)

- 농촌 주민 다수가 고령자이고 기후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우려

*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자료 분석 결과, 폭염 사고 발생 확률은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확률이 매우 높은 저빈도-고심도 구조 양상

2.2. 미래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공간 재구조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조성

| | | | | |
|------------------|--|------------------------|---|-----------------------------|
| 주요 과제 | 1 | 미래를 위한 주거 기반 확충 | 2 |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권 기능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 • 수요자 맞춤형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 배후 농촌을 지원하는 생활권 거점 육성 • 다양한 디지털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 •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복지 확대 | |
| | 3 | 환경·경관 보전 | 4 | 기후 위기, 재해 대응, 안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환경 오염 저감 • 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경관 보전 및 활용 • 농촌의 에너지 자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활 인프라 조성 • 재해·재난 위험에 대한 예방 체계 구축 • 교통, 범죄 예방 등 생활안전 인프라 및 방범체계 구축 | |

2.2.1. 미래를 위한 주거 기반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의 주거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실정

* 2022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농어촌(읍부, 면부) 59.4%, 도시(동부) 21.7% (통계청, 2023)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도시 3.8%, 농어촌 5.4% (농촌진흥청, 2023)

*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 도시 2.6%, 농어촌 9.1%(읍부8.6%, 면부9.3%) (농촌진흥청, 2023)

○ 농촌지역일수록 난방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며, 단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주거의 질이 더욱 열악한 실정

*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85.4%, 농어촌 46.5% (읍부 72.7%, 면부 21.6%) (정문수 외, 2023)

* 월 평균 난방비: 농어촌 14.8만 원, 도시 12.9만 원 (농촌진흥청, 2023)

- 농어촌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여건도 사회문제로 대두

-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인 위생, 냉난방 기능을 갖추지 못한 시설 거주

*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통계청, 2024)

□ 정책 방향

○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주민들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형 마을관리소' 운영

○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미래형 주택 모델 확산

- 에너지 절감형 주택 보급,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는 주택 등 운영

○ 생활인구·관계인구 및 청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 대상 주거공간 조성

- 체류형 쉼터 조성, 농촌형 실버스테이, 농촌 민박 플랫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 빈집, 유휴자원 정보 제공 및 활용 프로그램이 연계된 지역 단위 빈집은행 운영
- 빈집 매입 후 모듈러주택 신축 또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후 살아가기 주택 운영

□ 추진 과제

1)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 마을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 구역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빈집 정비
-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우선 철거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철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등 연계 수단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주민 불편이 큰 농촌 마을들을 대상으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마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소득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필요

- *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 *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 *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 *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 농어촌 주택 및 창고·축사 등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확대

- 환경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현황 상세 구축 및 슬레이트 건축물이 집중 분포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철거 지원 등 강화
- 집중 보급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확대를 통해 2033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으로 석면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 * 매년 전국적으로 3.6만 동 수준 추진
- 슬레이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연간 4천동 수준으로 지속 처리 예정(~2036년)
- 농촌주택개량,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농산어촌 슬레이트 폐가, 빈집 철거 등의 정책연계를 통해 슬레이트 처리 확대 추진
 - * 지자체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등 적극 활용

○ (가칭) ‘농촌 마을 흥반장 프로젝트’ 추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마을을 중점 대상으로 주거 여건 개선 지원

- 경기도에서 2018년부터 추진한 행복마을관리소, 행안부에서 2021년 도입한 마을관리소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 마을 맞춤형 사업 추진
 - * 아파트, 빌라, 주택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마을관리소와 차별화
- 고령자와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마을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생활불편 해소, 노인 돌봄까지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지원
- 농촌 마을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흥반장’ 양성 및 활동 지원
 - * 홀더터 개념의 주택 관리(도배, 장판, 간단한 집수리, 목공기술, 수도, 전기 등)
 - * 고령자 및 환자 병원 동행
 -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마을복지사각지대 해소)
 - *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실행

〈참고〉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정안전부 마을관리소

- 경기도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추진하여 84개소(2021년 기준) 운영 중이며, 결식아동, 노인 식사 배달, 안부전화 서비스, 공유공간 방역 예방 활동, 반려식을 나눔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부터 '마을관리소' 사업 추진, 충남도에서는 2024년 마을관리소 관련 조례 제정되어 충남지역 4곳에 마을관리소 시범 운영 예정

자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검색일: 2024. 7. 16.).

2) 난방비 절감 및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

○ 농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농촌은 저밀도 분산 분포하는 단독주택 중심, 개별 난방시설, 단열 설비가 미비한 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보다 더욱 큰 실정
-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제약이 큰 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속적 추진 필요
- 에너지 농촌 주택의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 확대를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열 및 소형 풍력,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 시스템 설치 지원
- 저탄소 및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 도입 유도,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등)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빗물 활용 등 자원 재활용 및 절약 생활화를 위해 주택 내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절감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주택 보급 지원
 - * 빗물 수집 시스템, 저수량 화장실 설치 등 물 절약 시스템 도입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신축 주택 표준안을 마련, 농촌의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신축에 대한 보조 지원 또는 주택개량사업 금리 추가 인하 추진
-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친환경 기술 및 자재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

○ 빈집은행 운영

- 시·군 지자체 단위로 빈집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빈집은행 운영
 - *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정보 등을 포함한 철저한 현황 조사 및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빈집이 다수 분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 * 그린홈 리바이브 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시 보조금 또는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입주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료 할인 및 초기 이사비 지원
 - *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에게 무상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매입, 철거 후 모듈러주택 신축
-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 정착을 지원
 - * 다양한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개최 지원

○ 2지역 생활 트렌드를 지원하는 체류형 쉼터 조성

- 4도3촌, 5도2촌형 생활양식 확산을 뒷받침하도록 마을 단위로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농촌 민박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촌캉스’, ‘한달살기’ 등 농촌 체류형 여행 트렌드 부상으로 농어촌 공간에 대한 관심 증가 트렌드를 반영
 - * 촌캉스(村+바캉스)는 시골에서 보내는 휴가로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
- 농촌체험, 민박, 워크ेशन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역 내 발생하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촌형 공유별장으로 공급
 - *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공유별장 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국내에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건축회사에서 분양하는 형태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

○ 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 공무원 대상으로 민박과 함께 프로그램(음식, 마을투어, 체험) 운영(민박 외 다양한 형태의 숙소 실시간 예약 및 확인 기능도 포함)

- * 민박신청 농가에 리모델링비(5천만 원, 5년 운영) 지원, 농가에서 프로그램 개발 후 신청

-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운영·관리하는 민관협력 방식 검토
- 도시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농촌형 실버스테이 모델 개발 추진
-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여가, 문화, 숙박시설 등 고령자 공간 활용 방안 도출
- 건강, 사회참여, 지속가능한 생활의 요구를 반영한 농촌형 실버스테이 적용 타당성 분석

4) 수요자 맞춤형 농촌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공간 확충

- 청년의 농촌 정착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
 - 농식품부에서 시행해온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일자리 접근성,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이 갖추어진 곳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유도
 -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등과 같이 지역 특성을 살린 임대주택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
 -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기준을 완화
-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건립
 - 출신 국가, 근로 형태 등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등 주거시설 공급
 - *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등

2.2.2.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권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배후마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 노력 요구
 - 거점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운영 인력 미비,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 효과가 미약하며 전국적으로 유희시설 분포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이 전국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농촌다움을 살리기 위한 시책 요구

- 농어촌 마을 인근에 공장·축사·태양광 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주거환경 악화

* 농어촌 주거지와 300m 이내에 농어촌 지역 내 전체 공장의 약 58%, 축사의 약 48%, 태양광발전 용량 기준 약 38% 시설 입지

○ 농촌형 교통모델 정부 지원 확대에도 농촌 대중교통 취약지역 존재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4~'17 시범사업) 총 30개 시군 → ('18) 76개 군 → ('22) 99개 군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 2023년 기준 대중교통최소서비스 부족 지역: 농촌 30.2%, 도시 16.9%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 시내버스 10회 이상 운행 행정리: ('10) 47.8% → ('15) 46.0% → ('20) 40.9% (통계청, 2020)

○ 한편 고령화와 인구 유출, 코로나19 등 대중교통 수요 감소에 따라 농촌의 대중교통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실정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버스이용객 수가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

* 시외버스 이용객 2019년 약 199백만 명/년 → 2022년 약 97백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51.3% 감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22)

- 일부 농촌지역을 시작으로 문을 닫는 버스터미널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의 광역이동 서비스 감소 추세

-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폐업 터미널은 증가할 전망

* 터미널 폐업 증가시 농촌지역 주민의 광역 이동권이 제한되며, 이동권의 제약은 삶의 질 감소로 연결

○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농촌 주민들의 교통복지 형평성 문제 대두

- 65세 이상 도시철도가 무료인 대도시지역에 대비할 때 농촌 지역의 교통복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 대두

*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자의 교통카드 이용 비율이 낮아 대중교통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를 분석하더라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얻기 어려워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 마련 필요

□ 정책 방향

○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계획, 농촌특화지구 등 토지이용 수단, 농촌협약을 매개로 한 사업 활용
- 장래 농촌공간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 마을 정비 유도 및 마을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환경관리시설 정비 추진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의 거점 및 배후마을이 연계된 서비스 확대

- 각급 거점 간 연계 강화 및 배후지역에 대한 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디지털·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마을, 중심지 등의 거점시설 프로그램 고도화
- 기존 읍·면 소재지 외에 주변 마을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하는 '작은거점' 육성

○ 농촌 주민의 교통복지 확대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기존 농촌형 교통모델 고도화 및 운영 방식 개선(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등)
- 농촌의 지형, 도로 여건을 고려한 초소형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수단 채택 실험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통복지 형평성 해소를 위해 복지카드 발급과 연계하여 고령자 무상이동 지원
- 지역 간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연계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 추진 과제

1)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 전국 139개 시·군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여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
- 마을 토지이용 관리,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다운 자원 보전 등을 위해 7가지 유형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

-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및 실행,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주민협정 체결 등 상향식 프로세스 강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농촌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범위 확대

○ 정주계층별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추진

- 정주 여건이 양호하여 장래 주거공간의 기능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 및 관리하며 인근 과소화 마을과 연계한 공간 정비 구상 마련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다움을 보전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 추진

○ 농촌소멸 대응 전략추진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 활용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입각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을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별 사업과 농촌공간계획 간 연계 확대

○ 농촌공간계획을 지원하는 지역 통합 정보 서비스체계 구축·운영

- 지도 기반의 인터랙티브 툴을 통해 농촌계획 및 정책 서비스체계 구축
- 공간계획 관련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활용분야, 적용기술 수립
- 재생활성화지역, 농촌특화지구, 계획사례 등 지역별 농촌공간계획 정보, 일자리, 농촌정착, 생활서비스 고도화 등 농촌생활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제공

2) 배후 농촌을 지원하는 생활권 거점 육성

○ 농촌 생활권의 각급 거점 육성 및 거점 간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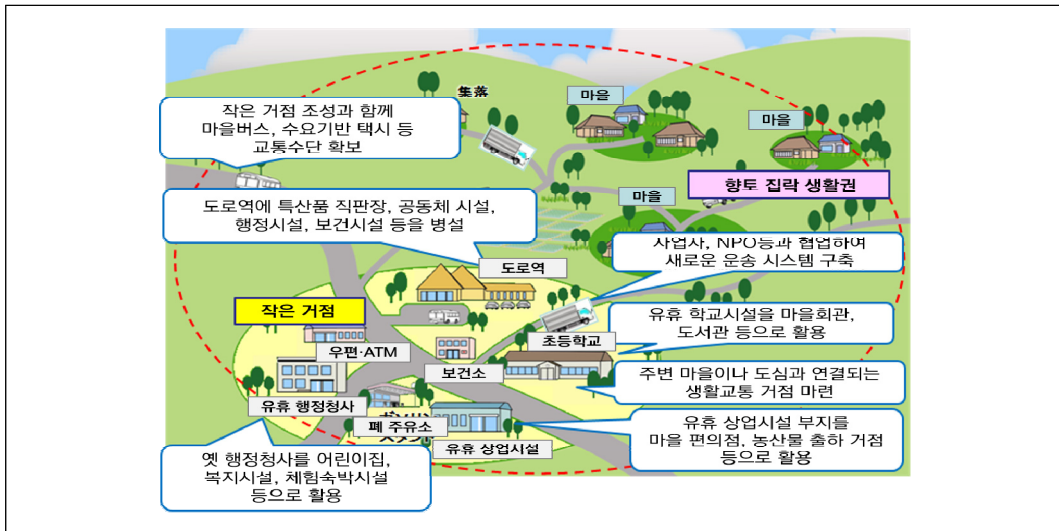
-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거점이 생활서비스, 경제, 커뮤니티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거점시설들의 복합화, 활용도 제고를 통해 플랫폼 기능 강화

- 거점시설들 간 연계 강화 및 배후 마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 * 특히 지역공동체 조직 육성, 지역농협 역할 확대 등으로 배후 마을 주민들의 물품 구매 지원 및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등 '식품사막' 확대 현상에 대응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거점시설 운영 및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촌생활권이 지속적으로 기능하도록 유도
- 기존 농촌 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이외에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작은거점' 육성

○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과 집락생활권 형성 전략을 추진, 농촌의 서비스 제공·지역 활동 거점을 육성

- 복수 마을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기능 등이 집적된 '작은 거점'을 조성하여, 다양한 지역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의 배후 지역으로서 인근 마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집락생활권 조성을 촉진
- 2024년까지 작은 거점을 1,80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운영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거점의 비율도 90%까지 높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

〈그림 4-7〉 일본의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개념도



자료: 한이철 외(2022) 및 성주인 외(2023) 내용 재구성.

○ 생필품, 신선식품에 대한 이동식 구매 서비스 제공

- 주거지 인근에서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워 ‘식품사막’으로 불리는 마을들이 농촌에 다수 분포하며, 이동에 제약이 큰 고령자들이 다수 분포
 - * 전국 행정리 37,563개 가운데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은 27,609개(73.5%)
-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기초적인 생활용품 구입 및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이동식 편의점 운영을 통해 각종 생필품 판매, 도시락 배달, 택배서비스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활용, 지역별 순회형 이동식 편의점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
- 청년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편의점 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
- 생필품 배달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행복버스’, ‘이동식 빨래방’, ‘이동식 목욕 서비스’ 등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참고〉 일본의 고령화에 대응한 이동식 편의점 사례

- 일본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동식 편의점 서비스를 확대
 - ‘세븐 안심 배송 서비스’라 불리는 이동식 편의점을 시작(2011)으로 로손, 패밀리마트, 협동조합 도쿠시마루 등에서 사업 참여(‘20년 기준 로손112대, 패밀리마트18대 운영)
 - 협동조합 도쿠시마루(2012년 시작)는 트럭 2대로 이동 슈퍼 시작(전국 27개 넘는 지역 운영)
 - 상하수도 점검, 대형 폐기물 처리, 전구 교체 등 생활서비스도 지원
 - 일본 편의점은 도시락배달, 택배, 은행, 티켓 판매, 공과금 수납, 인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고령자용 코너, 휴식 공간, 건강 검진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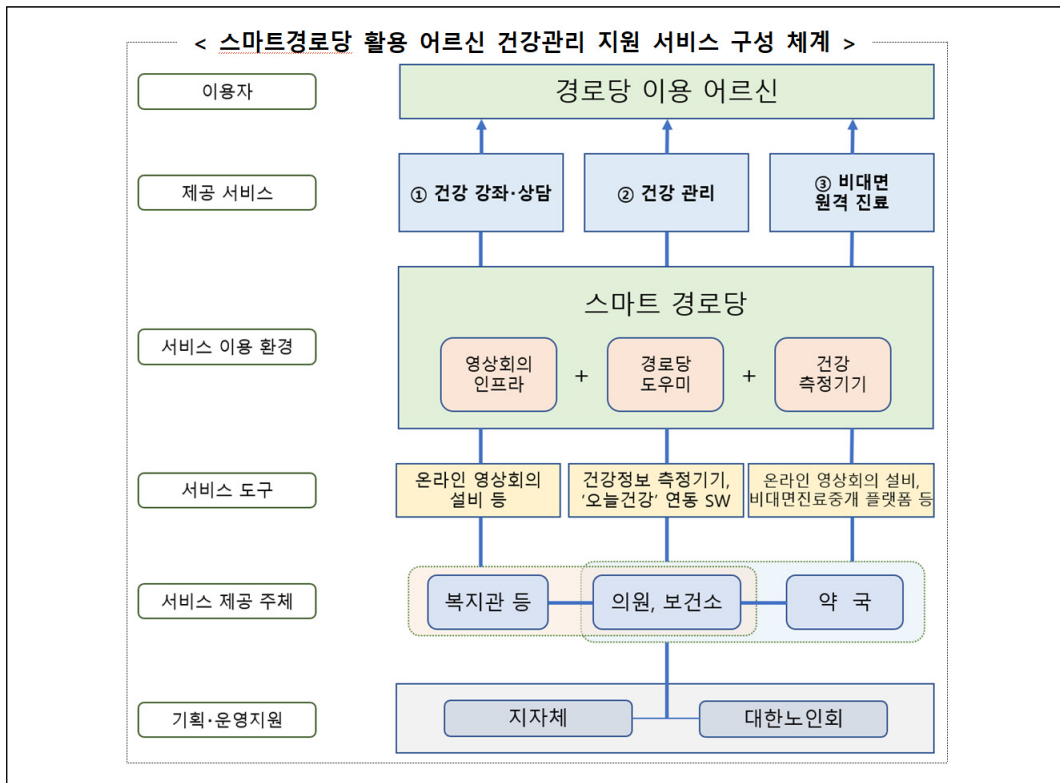


자료: 식품외식경영보도자료(2019.11.20.), “고령화시대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 이동식 편의점 주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형 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확산

- 저밀도 분산 거주하는 농촌 정주 특성을 고려, 보건·의료, 교육, 문화, 생활편의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농어촌형 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확산 지원
 - 농어촌형 비대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모델 도입(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모니터링, 원격의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노인 대상 건강관리솔루션이 연계 제공되는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확대
 - 농어촌 학교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VR·AR 콘텐츠 활용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 보급
- ※ 중심거점(읍: 스마트 백면)과 기초거점(면: 스마트 허브) 간 서비스 기능 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 마을(스마트 터미널)의 주민복지·문화·여가 교육 서비스 배달 프로그램 지원

<그림 4-9> 스마트경로당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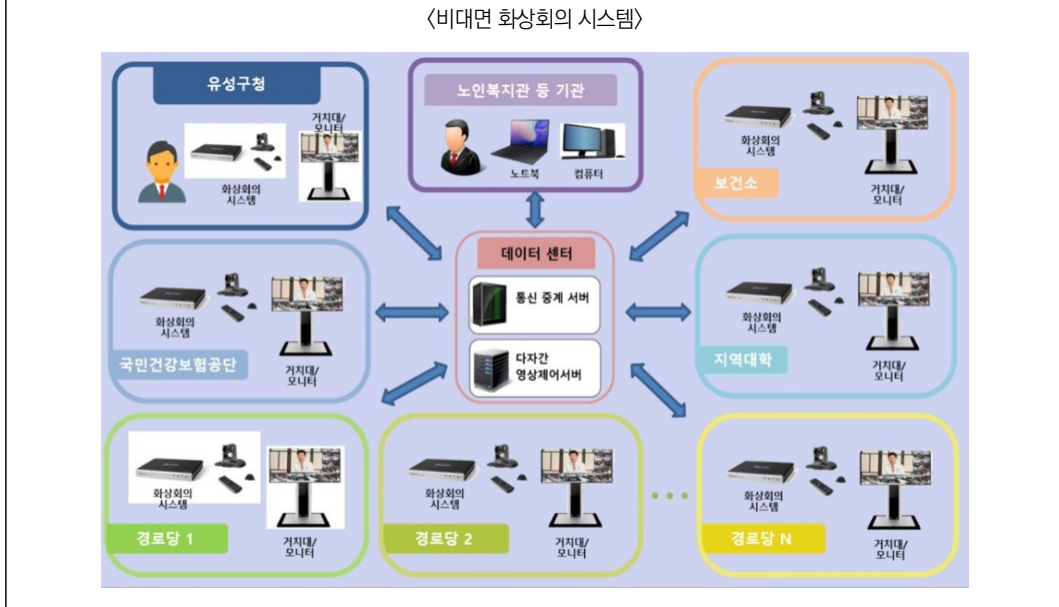
자료: 유성구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24).

○ 드론·AAM을 활용한 농촌 필수 서비스 공급

- 농촌지역의 서비스 전달 사각지역 해소,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생필품·택배 배송 확대
 - *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등
- 섬, 원격지 마을 등 치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방범 드론 활용

〈참고〉 대전시 유성구 스마트 경로당 사례

- 2016년 전국 최초 20개소 ICT 경로당 사업 추진, 2023년 8월 기준 총 65개, 2024년 현재 170개 스마트 경로당 운영 중
-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회의·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 ICT 기반 건강관리, 키오스크 활용 안내 등
-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 양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연계 통해, 경로당 이용 대상자에게 스마트한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자료: 유성구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24).

○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 정부는 2022년 79.3만 명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하고, 222개소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였고, 2023년에는 디지털 배움터 확대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1.12.)

- 버스 운행 정보는 큰 틀에서 생활정보에 포함되며, 연령별·지역별로 지능정보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을 고령자가 쉽고 편하기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IPTV를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 운행정보(기존 농어촌버스 포함) 제공시스템 구축
 - * 경기도 등 마을회관 IPTV를 통해 버스 도착 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강화군 일부 면사무소 민원실 IPTV를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

4)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 복지 확대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다수 지자체에서 노선버스 개념처럼 농촌형 교통모델이 운행되는 결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고령자들이 차량이 운행되는 마을회관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농촌형교통모델의 운행계획을 수요-대응형으로 유연하게 연계하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유인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방식 개선

- 농촌형 교통모델(택시형) 교통카드 사용을 통해 농어촌버스,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등의 차량과 무료 환승 서비스 제공 등 사업 고도화
 - *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마을 ↔ 면소재지) 후 시내 농어촌버스를 환승(면소재지 ↔ 시·군중심지)할 경우 환승할인 적용 추진
- 쿠폰 사용 및 수기 정산으로 이루어지는 택시형의 경우 복지카드 발급, 농촌형 K-PASS 등의 대중교통 요금할인·환급·무료화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카드사용 전환 유도
 - * 교통카드 사용을 통한 정산 자동화로 행정 업무량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수혜 대상지역 확대 유도

○ 농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을 위해 농업활동 및 계절변화에 대응한 유동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용 방안 모색
- 농촌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적용을 위한 제도 및 기술 개발 추진

○ 농촌 여건에 맞는 운행 차량 다변화: 그린슬로모빌리티, 초소형모빌리티 등

- 농촌의 열악한 도로 여건(도로폭 협소, 심한 종단경사)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라스트 마일(last-mile)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 문제 심각
- 농촌의 버스승무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한 교통수단의 채택이 필요, 초소형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모델 도입 실험
- 농촌지역에 그린슬로모빌리티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하고, 부처통합사업으로 자동운전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초소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농촌형 자동운전 교통모델 시범운영지구 조성 및 실증사업 추진

〈참고〉 그린슬로모빌리티(Green Slow Mobility)

- 시속 20km 미만으로 공도를 주행하는 4인승 이상의 전기자동차(경차,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등으로 분류)로 도로가 좁아 중 대형 버스 진입이 어려운 지역(올드뉴타운 주거지역, 산간지역, 낙도와 같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
- 그린 슬로모빌리티 특징
 - ① (Green) 전기자동차로 친환경적이며 충전 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CO2-free 주요 교통수단
 - ② (Slow) 최고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은 농어촌 운영 적합
 - ③ (Small) 동일 교통수단에 비해 소형, 골프카트 타입은 일반 승용차의 약 80% 정도로 도로폭이 좁은 농촌 시골길 운행 가능
 - ④ (Open) 유리창이 없어 자연과의 일체감을 즐기고, 앞 좌석과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승객과 대화를 하면서 운행할 수 있으며, 골프카트 타입은 측면에 문이 없어 타고 내리는데도 편리함. 투명 시트로 비, 바람, 눈을 피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무릎에 담요를 덮으면 운행 가능

| 경자동차 (4인승) | 소형자동차(6~7인승) | 보통자동차(10~18인승) |
|---|---|--|
|  |  |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2), 월간교통 2022년 10월호.

〈참고〉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그린슬로모빌리티 운행 사례

-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島根県 松江市)에서는 고령화율이 높은 고지대 주택단지에서 지역 생활에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그린슬로모빌리티를 운행
- 사회복지법인인 미즈우미가 2018년 실증실험 실시 후 2019년 5월부터 무상운행 개시
 - 광고와 기부로 수입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있어 일부 시간대에 100엔을 징수
-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확보, 노인 등 외출 기회 증가로 인한 건강 증진,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운전사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을 기대

| 운행차량(4인승) | 운행지역 |
|---|--|
|  |  |

〈참고〉 일본 니카타현 야마코시의 자율주행차량 시험

- 일본 니카타현(新潟県) 나가오카시(長岡市) 야마코시(山古市) 지역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자율주행차량 시험이 2019년 봄에 실시됨
- 버스 등의 공공교통기관이 쇠퇴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에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운전자가 불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은 저비용의 공공교통수단으로서 기대를 모음
- 야마코시의 경우 야마코시 부흥 교류관을 거점으로 유부지구를 지나는 약 3km 구간에서 자율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차량은 4-6인승 골프카트형으로 노면에 매설된 전자유도선을 레일처럼 따라 다니며 최고속도는 12km/h 정도임

| 주행중인 자율주행 골프카트 차량과 원격 감시실 | |
|---|--|
|  |  |

자료 1) 지방정부 TvU(2019. 1. 10.), “[일본]나가오카시, 버스 대체 자율주행차 시험”.
 2) kotra 해외시장뉴스(2024. 4. 16.), “일본 자율주행 상용화, 어디까지 왔을까?”.

- 농촌지역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할인·환급·무료화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 교통복지 카드 발급을 통해 대도시 지역과의 교통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자의 교통카드 사용률 제고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통복지서비스 차별 해소하고 농촌지역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효과

- 농어촌지역 광역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도·농 지역 간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농어촌버스↔시외버스, 농어촌버스↔철도(고속철도 포함) 등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통한 도·농간 연계 강화
 - * 함안군-창원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사례 및 진주시-사천시 간 시내버스-시외버스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사례 등 참고
 - 폐업한 터미널의 경우 공영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경우 유지·보수 등 각종 운영비용 지원

2.2.3. 환경·경관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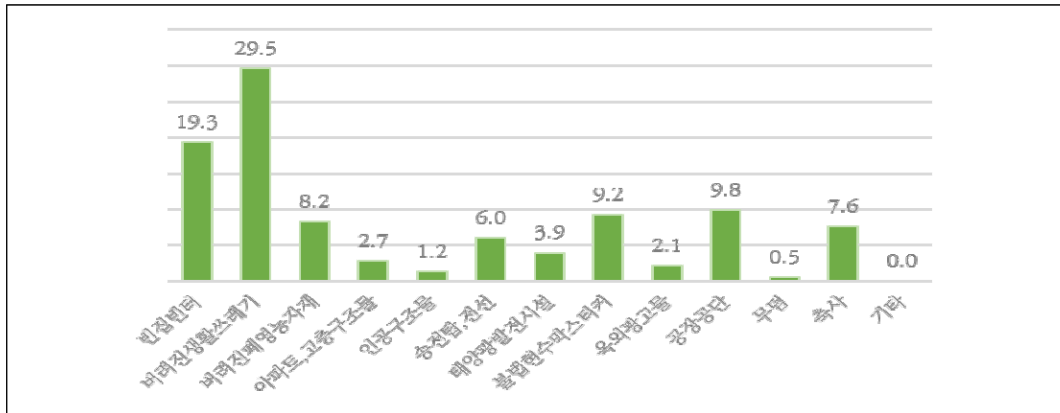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마을에 여러 가지 환경 저해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2014년 기준 전국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는 총 701,396호, 2021년까지 철거한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는 전국 기준 233,834호
 - * 이 중 농어촌 사군 지역에서 철거한 주택 수는 215,126호로, 2014년 기준 전국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의 30.7% (김용욱 외, 2022)
 - 2022년도 영농폐비닐 발생량 314,507톤으로 2021년도 발생량 319,194톤 대비 1.5%(4,687톤) 감소
 - *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 ('21) 202,791톤/196,826톤 → ('22) 203,509/180,410(환경부, 2022)

- 마을 주변의 생활쓰레기 처리, 빈집·빈터 정비 등의 필요성 제기
 - * 경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 버려진 생활쓰레기(29.5%), 빈집·빈터(19.3%) (농촌진흥청, 2022)

〈그림 4-10〉 농어촌 경관 저해요인

단위: %



자료: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2022).

○ (국내·외 정책 동향)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명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환경공존지역(OECM)을 국토면적의 30%를 확보하도록 추진 중(관계부처 합동, 2023)

- 정부는 육상 보호지역 확대와 더불어 OECM 10%를 자연휴양림, 보호지역의 완충협력 공간, 복원효과 평가를 거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 생태축을 토대로 확충할 계획
- 국가환경녹색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구축 추진

□ 정책 방향

○ 고유한 농촌경관 및 환경의 보전관리와 함께 기후위험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탄소중립 경제 및 사회 전환을 위한 농촌 공간 역할 확대 도모

- (현행) 도농 간 격차완화를 위한 정책 중심 → (목표)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가치 보전
- (현행) 생산력 중심의 기후위험 관리 → (목표) 삶의 질과 생산력을 지키는 기후위험 관리로 고도화

* 유럽 등 선진국은 농촌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

□ 추진 과제

1) 농촌의 환경 오염 저감

○ 오염시설 등이 입지한 농촌지역의 환경 복원

-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지역 위해시설(공장 등)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훼손 지역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을 창출하도록 녹색복원과 재생을 위한 농촌지역 DB 구축과 후보 목록 발굴 추진

* 김포 거물대리는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로 개선하고, 장항 토양오염지역은 인공습지로, 익산 장정마을 비료공장을 철거해 생태공간으로 복원

* 익산 왕궁면에서는 한센인 축사를 생태독지로 복원하는 기본계획 수립(~'24 하반기) (환경부, 2024)

○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 및 재활용 처리 기반 확대

- 고령자, 소규모 마을 등 생활 및 영농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지속 설치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 지속 추진 (환경부, 2022)

*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22)9,145곳 → ('26)13,000 목표 (환경부, 2023)

** 건식설비를 습식으로 공정개선 사업('22, 봉화), 재활용처리시설 1개소 신설('22~'24) 등 (환경부 보도자료, (2021. 3. 1.)

-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20원/kg으로 상향하여 모종판 등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수거에 활용토록 추진하고, 농민에게 지원하는 수거보상금 지원 물량*도 지속 확대

* 수거보상금 지원 물량: ('20) 201,000톤 → ('22) 216,500 → ('23) 225,000

- 생활 및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마을 단위 재활용 시설 확보 등 인프라 구축과 읍면 단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자원순환모델 개발 및 고도화 추진

* 사회적 기업은 도로변 제조작업, 가로수 관리 등 행정사업을 대행하고 노인 등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보

* 진안군 봉곡마을(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부녀회에서 운영), 홍성군 장곡면(분리수거 면 단위 사업 추진) 등

○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원 관리 체계화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비료 사용 처방서 준수 및 완효성 비료 사용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암모니아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도모

* 가축 사육밀도 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정결히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 (‘22) 5,000개소 → (‘24) 8,000 (축산환경관리원, 2024)

** 정부-지자체-농민이 토양-용수-경관 등을 개선하는 장기 프로그램: (‘20) 25개소 → (‘24) 4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2. 6.)

○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노인정,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집,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집중 지도점검* 실시

* 농어촌 지자체의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율을 최소 10%(‘20년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강화

-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도 30곳 이상 선정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해 저감효과 극대화
-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악취 포집장비를 ’25년까지 1,000개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2.6.)

○ 인증(유기·무농약) 농가 외 일반 농가의 생태·토양·수질 개선활동 촉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 경직불제 개선

- 現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성과평가(‘23~’24) 후 개편안 마련(‘25) (농림축산식품부, 2023)

2) 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경관 보전 및 활용

○ 농업과 자연·역사·문화가 조화된 경관의 보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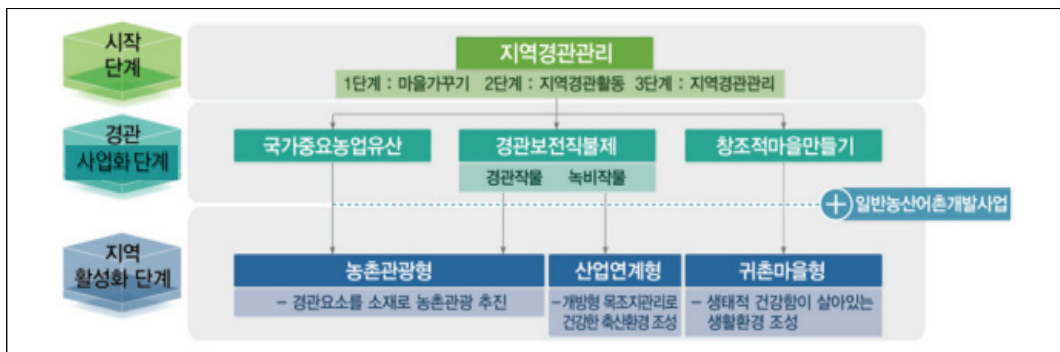
- 다랑논, 전통 과수원 등 지역 생물다양성이 높은 전통 경작지 등을 경관자원으로 보전하고 관리 강화

- 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전통적 농업 방식을 유지하여 고유의 경관을 보전·관리하는 활동 지원 확대*

* 경관작물 재배면적: ('23) 13천 ha → ('27) 21천, 국가중요농업유산: ('23) 19개소 → ('27) 23 (농림축산식품부, 2023)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농촌특화지구(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중심으로 농촌다운 고유한 자원 및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주민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자원을 매개로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작→사업화→활성화 단계로 농촌경관-사업지원 체계화

〈그림 4-11〉 경관자원을 매개로 지역활성화로 성장하는 단계별 접근



자료: 김상범 외(2019), 지역 특성별 농촌 경관 정책 실행력 향상 연구.

○ 생태관광과 연계한 농촌환경 가치 제고

- 농촌지역에서 경관 및 자연이 우수한 지역에서 체험, 체류, 다시 찾는 관광을 위해 누구나 즐기는 대표 생태관광 육성

* '24년 강원, 충청, 경상권 등 3개 지정 → '26년까지 권역별 확대, 인프라 우선지원, 운영관리 예산 차등 지원 등 추진

- 환경부의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OECM 등과 문체부의 지역 관광소재를 연계하여 농촌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협력

* 자연의 소리가 가득찬 마을(소음이 없는 마을) 등 농촌공유의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치유마을 프로그램을 개발, 도시민의 체류와 유입을 통한 치유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유마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비오톱 조성, 자연형 하천 복원 등 주민 주도 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 마을도랑과 작은 비오톱 등을 연계하여 마을형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보행로 및 휴게공간, 마을 공동시설 등과 연계하여 주민 이용 활성화
-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태환경·탄소중립형 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사업화 및 자금 지원을 돕는 '지역환경 금융제도' 도입 추진

○ 자연과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백두대간 경제벨트 구축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지역은 저개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자연자원 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휴양 및 관광 수요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 요구
-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회구역 제도 신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및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지역기반 생태바이오 산업 및 체류형 휴양기반 구축 등 추진

3) 농촌의 에너지 자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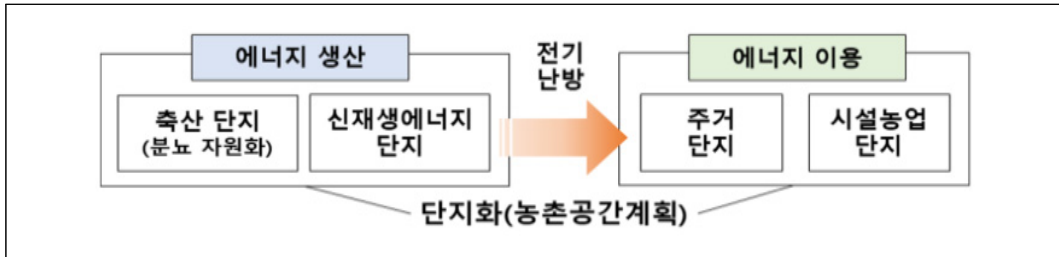
○ 마을 단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 마을별 에너지 진단·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생산-이용 Gap을 분석하고 마을 에너지 사용량에 맞는 주민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설치
- 마을회관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에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신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제로에너지건물(ZEB) 의무화 추진
- 마을 단위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외부 에너지공급을 최소화하는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한국형 PEV(positive energy village) 모델 및 솔루션 마켓 구축으로 고도화
-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등 에너지 절감형 주거 모델을 개발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태양광·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들이 전기·온수를 공급받는 순환 체계 구축

* 유럽은 61개의 PED(positive energy district) 관련 사업 추진 중, PED 프로젝트 2개는 운영 중이며, 18개는 시행 중, 8개는 계획 중임('20), '25년까지 100개 조성 추진중. (Silvia et al., 2020)

- 농촌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민제안·협정 제도를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 시설 등 집단화 유도

〈그림 4-12〉 마을 단위 에너지 생산-이용을 통한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개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안)(2021).

○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 추진

-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처리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폐열 등 에너지를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하여 추진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폐자원 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 등

- 가축분뇨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해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고체연료 이용 분야도 지속 발굴
-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확대해 정화 처리를 원칙(90% 이상, '30년)으로 운영하고, 공공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10개 이상, ~'30년)

*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현재) 1.3% → ('30) 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2. 6.)

2.2.4. 기후 위기, 재해 대응, 안전

□ 현황 및 문제점

- 폭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고령인구를 고려하여,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정비 및 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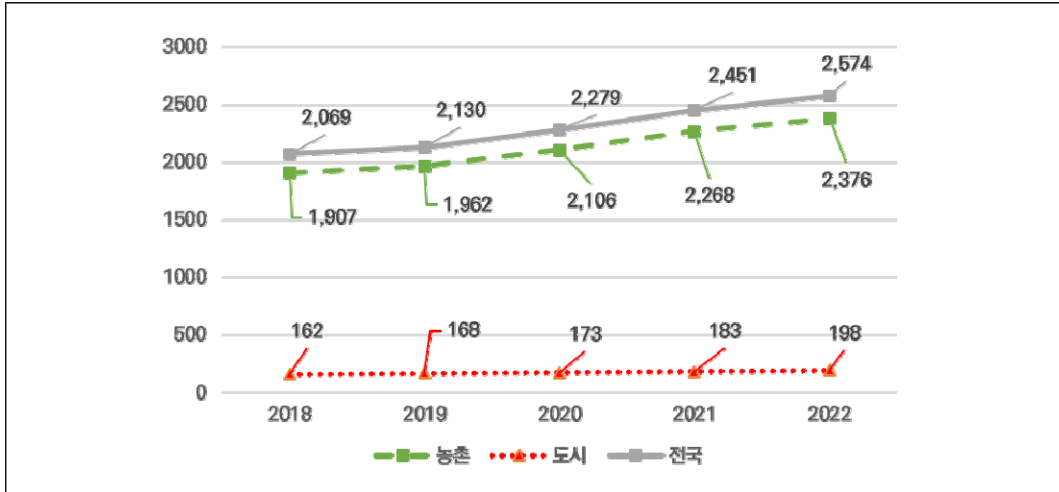
* 연평균 폭염일수: ('14) 6.6일 → ('18) 31 → ('22) 10.6 (기상청, 각 연도)

* 연평균 한파일수: ('14) 4.6일 → ('18) 12 → ('22) 8.3 (기상청, 각 연도)

○ 도시 대비 농촌지역의 자연재해·재난 위험 발생 건수 매해 증가, 빈집·노후화 주택, 고령 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도시/농촌): ('18) 162곳/1,907곳 → ('22) 198/2,376 (행정안전부, 각 연도)

〈그림 4-13〉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현황



주 1) 가 등급~다 등급(인명피해, 건축물피해, 농경지피해)으로 구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2) 도시: 특·광역시, 농촌: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계연보(2023).

○ 농촌지역의 방법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등 생활안전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개선 되었으나, 생활안전 서비스 취약지역 존재

* 방법설비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지역: ('20) 64.9% → ('22) 75.8 (김용욱 외, 2022; 권인혜 외, 2023)

* 경찰순찰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지역: ('20) 62.9% → ('22) 65.4 (김용욱 외, 2022; 권인혜 외, 2023)

* 소방출동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지역: ('20) 72.1% → ('22) 69.1 (김용욱 외, 2022; 권인혜 외, 2023)

○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과 장애인·노인보호구역이 존재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하 실버존)의 경우 스쿨존에 비해 지정 및 관리 소홀

* 보호구역 지정 현황('24): 어린이보호구역 16,555구역, 노인보호구역 1,299구역 (행정안전부, 2024)

○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 차 대 사람 사고 위험 증가

□ 정책 방향

- 기후 변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염, 한파 심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폭염, 한파 등 기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 인프라를 농촌에 구축
 - 홍수, 산불, 산사태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보호구역·구간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 안전성 제고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간 안전시설 설치 여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추진 과제

1)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활 인프라 조성

○ 농촌형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

-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형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
 - * 폭염 및 한파 대응 농경지 및 마을 쉼터(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설 취약지 개선 등
- 농촌 맞춤형 모델 발굴: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과 연계하여 폭염, 한파, 폭우 등에 대응하는 모델 개발
- 농업 중심의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을 일상생활까지 확대하여 보여주는 농업·농촌 기후지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 폭염 등 기후위험에 대응한 기후탄력마을 조성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기반으로 농어업인(개인), 농축산업(산업), 읍면(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집단 세분화 추진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건강 민감 계층 공용시설을 폭염과 혹한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후탄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로 반영하여 모니터링 추진

* 충남의 경우 폭염과 폭화에 대응, 쿨루프 시공,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창문 차열 필름 시공 등을 추진하는 기후위기 안심마을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충청남도 홈페이지, 검색일: 2024. 8. 12.)

-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 및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폭염, 한파, 폭우 등에 대응하는 농촌 맞춤형 기후탄력마을 모델 개발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 재해·재난 위험에 대한 예방 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구축

- 하천범람지도, 농촌침수지도 등 홍수정보 구축·보완

* 소하천 수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3년 440개)하여 국가 지방하천 홍수예보연계(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2.2)

○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통한 안전영농기반 조성 및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기능보강을 통한 재해 예방

- 침수 위험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설치 및 용량 확충

- 물손실 절감과 호우 시 배수 용량 확대를 통해 가뭄·침수 피해 예방

* 배수개선율: ('24) 69%(208천 ha) → ('30) 100%(303천 ha) (농림축산식품부, 2024)

* 수리시설 개보수율(목표): ('23) 86.4% → ('27) 88.8 (농림축산식품부, 2024)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안전대책시설 설치 및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 계획 수립을 통한 국민 안전성 강화

-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한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

- 총저수량, 예상피해 주민 수, 안전점검 결과를 고려한 저수지별 비상대처계획 수립

* 안전대책시설: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 난간, 헨스, 가드레일, 인명구조함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해일 강도 증가에 대비한 국가 어항 시설 보강 및 어항 공간 재정비

- 정박 시설 및 방파제 확대와 더불어 노후시설 철거, 기능·편의시설 신축, 시설현대화 추진

* 어선안전수용율(목표): ('23) 86.1% → ('27) 86.9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과학적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재난으로부터 산림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

- 드론영상 실시간 전송,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고성능 진화 장비 확충

○ 산사태 예측 고도화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관리 강화

- 급경사지, 인위적 개발지 등에 대한 조사 후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의 사면 정보 연계 및 점검 강화 추진
 - * 급경사지 등에 대한 GIS 분석, 위험지 추출, 재해위험도 평가 등 실태조사 매년 5,000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024)
 - * 기초조사 1만 8천 개소/년, 실태조사 7,200개소/년 (농림축산식품부, 2024)
 - *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26년) (농림축산식품부, 2024)

3) 교통, 범죄 예방 등 생활안전 인프라 및 방법체계 구축

○ 노인보호구역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확대 지원

- 노인보호구역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확대 유도
- 스쿨존과 같이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기 설치 의무화 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노인 교통안전성 제고 및 보호구역 간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 제고

○ 농어촌 지역 범죄 예방 인프라 및 맞춤형 방법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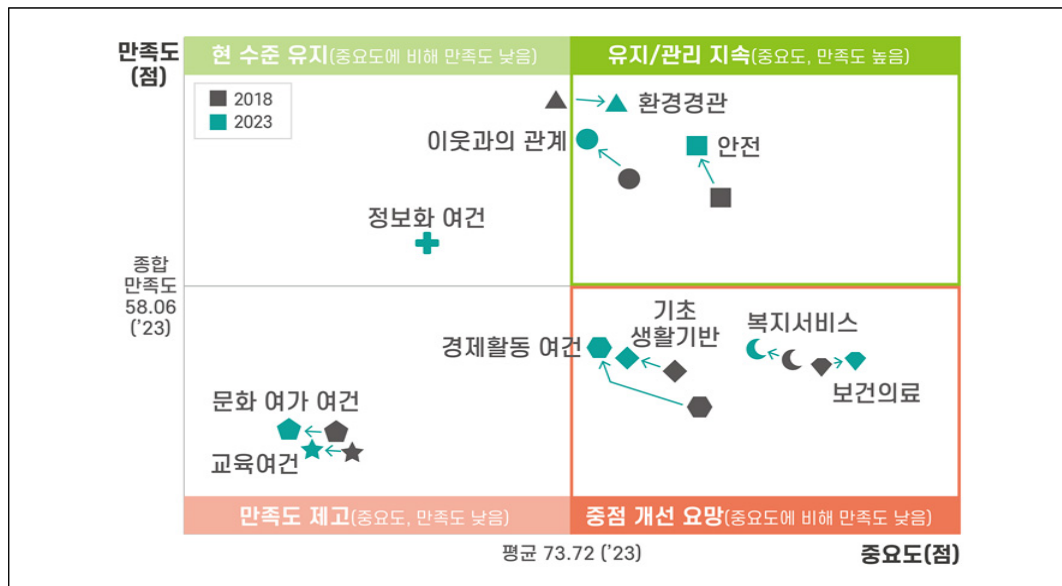
- 범죄예방진단·CPTED 활성화 및 지역·시기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 추진
 - * '주민접촉+도보순찰+문제해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순찰 방식 활성화 및 작물수확기 특성을 고려한 절도 예방 지속 추진

3. 보건·복지·돌봄 부문

3.1. 여건 및 개선 방향

- 농어촌 보건·복지 영역은 중요성과 주민 체감도 간의 격차가 가장 큼
-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에 대한 조사 결과,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아 중점 개선 필요
 - ‘2023년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만족도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하여 도시와의 격차가 약 16%p에 이르고,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미약하게 증가하였으나 도시와의 격차가 9%p 수준

〈그림 4-14〉 농어촌생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격차 분포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4. 3. 31.).

〈그림 4-15〉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도농 간 격차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4. 3. 31.).

□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의 낮은 접근성이 농어촌 삶의 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

○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보면,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

-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 중에서도 지역별로 미달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예컨대, 4대 중요 진료과목 의료시설 접근성은 전체 지표로는 달성이지만 32.4%는 미달 지역

□ 농촌소멸 대응 전략,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정책들의 공통된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

○ 관련 계획 및 정책들의 공통된 방향성은 ① 소득 안정, 사회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 확대 및 포괄 복지 제공, ② 공동체 및 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 공급혁신, ③ 의료, 보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수렴

- 농식품부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전략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동체와 기술 활용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 과제로 제시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새로운 수요 대응 및 대상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서비스 질 제고, 복지기술훈용을 통한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선정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필수 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

○ 따라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부문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계획은 ① 보건·의료 취약 지역 해소, ②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정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③ 지역 수요 반영 농어촌 영유아 보육 제도 정착, ④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농어촌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보건·의료 취약 지역 해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지역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지원 등 하드웨어 개선 중심으로 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사업,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역 지원 확대 등의 과제는 비교적 장기간 추진되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된 농어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또한 조기에 목표 달성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성과와 달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농어업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발생

- 특히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 * 지역 내 의료 이용률(22): 서울 89.5%, 충남 67.0, 경북 63.9
-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도·농 간 여전히 큰 격차 발생
 -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중 도·농 간 점수 격차(23): 전체 부문 만족도 평균 격차 0.7점 <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평균 격차 1.4점 < 분만의료서비스 만족도 격차 2.1점

-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진료·응급의료 항목의 이행실태는 목표치에 도달성하였으나, 일부 서비스 항목에서 개선 정도 미흡

* 진료 항목의 2022년 달성도는 23.1분으로 전년도보다 증가

〈표 4-11〉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도시·농촌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2023년)

단위: 점

| 구분 | 의료 서비스 접근성 | 의료 서비스 범위 | 의료 서비스 수준 | 분만 의료 서비스 |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 아동 양육 돌봄 지원 | 취약 계층 복지 지원 |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 | 전체 평균 |
|--------|------------|-----------|-----------|-----------|---------------|---------------|-------------|-------------|----------------|-------|
| 도시 지역 | 7.7 | 7.2 | 7.1 | 6.7 | 7.1 | 6.6 | 6.4 | 6.2 | 6.4 | 6.9 |
| 농어촌 지역 | 6.3 | 5.6 | 5.6 | 4.6 | 5.3 | 5.6 | 5.4 | 5.5 | 6.4 | 5.5 |
| 도·농 차이 | -1.4 | -1.6 | -1.5 | -2.1 | -1.8 | -1.0 | -1.0 | -0.7 | 0.0 | -1.4 |

주: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 값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농어작업 안전성’ 항목 제외)
 자료: 정민주·손경민(2023),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표 4-12〉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 서비스 항목 | 측정 기준 | 2020 | 2021 | 2022 | 목표 ('20 ~'24) |
|--------|---|-------|-------|-------|---------------|
| 진료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 23.3분 | 22.7분 | 23.1분 | 30분~1시간 |
|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5분 | 14.6분 | 13.8분 | 30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각 연도).

○ 한편,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방 인구의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건에도 영향

- 지역의 인구 유출로 지역의 경제, 생활, 교육환경 악화, 다시 인구유출을 유도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는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져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농촌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에 직면하여 지역사회 유지가 어렵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과소 공급되어 생활 여건과 삶의 질 지속 악화

- 농촌은 과소화·고령화로 지역 경제 침체, 농촌 지역 일자리 감소, 외부로 인구 유출, 주민 생활 관련 서비스 수요 감소 등의 악순환 구조 반복
- 과소화·고령화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는 구조 필요

○ 농촌에서 주민의 소득과 생활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주민 참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집중

- 2024년 8월, 농촌 지역에서 주민이 일자리와 소득 관련 경제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등 농촌사회가 직면한 경제와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대비하는 활동이 진행 중이며, 해당 법률을 계기로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로 추진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여성농업인, 청년 등 농촌의 특정 계층의 노동 부담으로 귀결되는 경향

- 과소화·고령화된 농촌에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유지 활동 등에 참여할 인력은 지속 감소하는 상황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고 시행하였지만, 공동체 활동 노동 부담이 특정 계층인 여성 농업인 또는 농촌 여성에게 집중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남성보다 노동시간이 농번기에는 48분, 농한기에는 1시간 18분 더 길게 일하면서 동시에 가사 일과 공동체 유지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해당 활동에 참여한 인력에게 공정한 대가 지급 필요

-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은 봉사의 개념으로 무임금으로 노동하였으나, 공동체 소속감 약화, 활동 인력 부족,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 부담이 증가하여 더 이상 기존 관습적 체계 유지에 한계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일부 사회서비스와 마을공동급식 등 공동체 활동에 인건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나, 일부 활동에 그치고 범위도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 소득안정화 및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토대 강화 필요

○ 취약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약 60% 수준(농민신문, 2023.10.16.)에 불과

○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가입률이 낮고 수급액 및 가입기간이 적어 노후 빈곤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

-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율은 2020년 전후 기준 31.7~35.6% 수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9.8%(국민연금관리공단, 2023)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

* NH투자증권의 “2020 대한민국 농촌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 2020년 3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360,661명으로 가입률은 31.7%

○ 국민연금 가입률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급액도 낮고, 가입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을 통한 충분한 노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2019년 농업인이 내는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만 1,000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22만 8,000원의 45% 수준, 향후 농업인의 노후 소득이 적정 소득 대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기준 고령 농업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37만 3,000원으로 전체 국민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인 62만 원의 약 60% 수준에 불과

-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나, 월평균 수령액이 적고, 농작업 특성상 소득 발생이 비정기적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 기간도 전체 연금 대상자의 가입 기간과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예상

〈표 4-13〉 농업인과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국민연금보험료와 연금수령액

단위: 원

| 구분 | 월평균 국민연금보험료 (2019년 기준) | |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2023년 기준) | |
|----|---------------------------|---------|----------------------------|---------|
| | 농업인 | 전체 가입자 | 농업인 | 전체 국민 |
| 금액 | 101,000 | 228,000 | 373,000 | 620,000 |

자료 1) 임소영 외(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지원방안.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5. 24.).

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각 연도).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기준 소득이 낮아 타 지원 제도와 비교해 보험료 지원 금액 불충분

- 농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준소득인 103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기준소득 초과 시 46,350원을 정액 지원
- 해당 사업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22년 6월 기준 43,334원으로 농업인이 신고하는 소득이 기준소득에 불과하여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준소득 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판단

〈표 4-1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비교

| 구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
| 지원 대상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저소득(270만 원 미만) 가사근로자 | 농어업인 |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80% | 보험료의 80% | - 기준소득 이하: 50% - 기준소득 초과: 46,350원 (기준소득: 103만 원) |
| 지원 기간 | 36개월 | 36개월 | 일몰제 |

자료: 각 제도 지침.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 영유아 보육 제도 정착 필요

○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농어촌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 관심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자녀 돌봄, 보육, 교육에 대한 농어촌 부모의 불만도 증가

〈표 4-15〉 연도별 전국 대비 농어촌 영유아 인구 비중

단위: %

| 구분 | 2011 | 2014 | 2017 | 2020 | 2022 |
|---------------|------|------|------|------|------|
| 농어촌 영유아 인구 비중 | 8.2 | 7.0 | 7.1 | 6.9 | 6.7 |

자료: 김은설 외(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표 4-16〉 농어촌 영유아 부모의 농촌에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 점

| 내용 | '불만족' 비율 | 만족도 평균(5점 척도) |
|----------------|----------|---------------|
| 농촌의 일자리 | 28.4 | 3.0 |
| 농촌에서의 일상 생활 | 25.2 | 3.1 |
| 농촌에서의 자녀 양육·교육 | 42.7 | 2.8 |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어머니의 단독 육아 비율이 높고, 가정 양육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여 긴급하게 필요시 자녀 돌봄을 맡길 대상이나 기관 부재

- 낮 시간 동안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인력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녀의 모가 45.4%인데 비해 대도시는 38.0%(김은설 외, 2021)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 대도시 6.2 > 중소도시 4.8 > 읍·면 2.9

〈표 4-17〉 도시 규모별 가족 구성 현황

| 구분 | 부 | 모 | 부모 형제 자매 | 친조부모 | 외조부모 | 비혈연 | 기관에 맡김 | 없음 | 계(수) |
|------|-----|------|----------|------|------|-----|--------|-----|--------------|
| 전체 | 0.9 | 41.4 | 0.4 | 1.6 | 3.4 | 1.2 | 51.0 | 0.1 | 100.0(3,471) |
| 대도시 | 0.9 | 38.0 | 0.6 | 2.7 | 3.5 | 1.5 | 52.7 | 0.2 | 100.0(1,565) |
| 중소도시 | 0.9 | 43.1 | 0.4 | 1.0 | 3.8 | 0.8 | 50.0 | - | 100.0(1,324) |
| 읍·면 | 1.1 | 45.4 | 0.1 | 0.5 | 2.4 | 1.2 | 49.3 | - | 100.0(582) |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농어촌에서는 부모 간 교류나 커뮤니티 형성이 도시에 비해 적어 육아에 있어서의 소외감 크고, 영농 농가의 경우 농번기 육아 부담 증가
- 농촌 지역에서의 육아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요구가 많은 부분이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라는 의견이며,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

〈표 4-18〉 농촌 영유아 부모에 대한 양육 환경 관련 의견 조사 결과

단위: 점

| 내용 | 동의 정도(5점 척도) |
|------------------------------------|--------------|
| 자녀를 돌봐줄 보육 기관이 부족하다. | 3.36 |
|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 4.12 |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 | 2.70 |
|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 3.72 |
| 어린이집/유치원의 예체능, 영어 등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 3.31 |
|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 3.66 |
|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 | 3.62 |

자료: 김은설 외(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 농어촌은 도시와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대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부재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농번기에는 오전 이른 시간에 자녀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없으며, 가정 파견 아이돌보미 또한 대기기간이 길고 지역 내에서 구하기에 제한적인 상황

*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농촌형 육아도우미 21.5%, 조기돌봄 41.2%, 시간제 보육 17.8%, 공동육아나눔터 19.5%(김은설 외, 2023)

- 도시에 비해 어린 연령부터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아 시기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정 양육을 지원해 줄 아이돌보미나 시간제보육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을 방증

* 12개월 미만 연령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 읍·면 18.2 > 중소도시 12.7 > 대도시 11.6

3.2.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한 농어촌 실현

| | | | | |
|------------------|--|--|---|--|
| 주요 과제 | 1 | 지역 의료체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 2 |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촌 필수의료체계 강화 • 수요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농촌주민의 예방적 건강서비스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민 자조·자립 기반 생활돌봄 서비스 공급 • 농촌 사회적 노동 보상 체계 확립 | |
| | 3 |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세대 소득안정 | 4 | 농어촌 맞춤형 영유아 보육 제도 정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 농어촌 이행기 청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긴급·일시 돌봄 제도 도입 • 농어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간 다양화 • 농어촌 보육 인프라 확충 | |

3.2.1. 지역 의료체계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의료기관 중 농촌에 소재한 기관·시설은 11% 내외로 의료기관의 도농 격차 극심
 - 농촌지역 의료기관 수는 지난 12년 동안 증가해왔으나 전체 기관·시설 중 농촌지역 소재 기관·시설 비율로 보았을 때 8~11% 수준, 2019년(11.5%)을 기점으로 그 비율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22년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은 전체의 11.2%에 불과

〈표 4-19〉 전국 의료기관·시설 중 농촌 소재 기관·시설의 비율

| 단위: 개소, % | | | | | | | | | | | | |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의료기관 수 | 5,034 | 5,145 | 4,511 | 4,767 | 7,387 | 7,470 | 7,687 | 7,853 | 7,962 | 8,030 | 8,090 | 8,173 |
| 농촌 소재 비율 | 8.6 | 8.6 | 7.4 | 7.5 | 11.6 | 11.4 | 11.5 | 11.5 | 11.5 | 11.4 | 11.3 | 11.2 |

자료: e-나라지표,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검색일: 2024. 9. 26).

- 의료기관의 시부와 군부의 격차가 극심하며, 병원의 경우 2022년 기준 시부는 3,539개소, 군부는 713개소로 약 5배 차이, 의원 및 조산원의 경우 8배 차이

〈표 4-20〉 도농 간 병원 및 의원 수

단위: 개소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
| 병원 | 계 | 4,020 | 4,106 | 4,192 | 4,252 |
| | 시부 | 3,316 | 3,397 | 3,472 | 3,539 |
| | 군부 | 704 | 709 | 720 | 713 |
| 의원 및 조산원 | 계 | 65,098 | 66,045 | 67,230 | 68,538 |
| | 시부 | 57,840 | 58,724 | 59,860 | 61,078 |
| | 군부 | 7,258 | 7,321 | 7,370 | 7,460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19~2022).

○ 그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응급, 분만,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노력은 계속 추진되어 왔지만,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볼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 지난 3년간의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분석 결과, 군지역 평균 28.2분, 도농복합시는 17.6분 소요되어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간 10.6분 정도 차이 발생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도 도농복합시는 80%를 웃도는 반면에 군지역은 60%에 그쳐 지역 간 격차 발생

〈표 4-21〉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지역 구분 | 기준 연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 군 지역 | 2021 | 27.9 | 21.9 | 25.9 | 32.0 | 32.3 |
| | 2022 | 28.6 | 22.1 | 26.1 | 32.8 | 33.4 |
| | 2023 | 28.1 | 21.9 | 26.1 | 32.0 | 32.3 |
| 도농복합시 | 2021 | 17.6 | 15.2 | 17.5 | 18.1 | 19.6 |
| | 2022 | 17.7 | 15.3 | 17.8 | 18.3 | 19.6 |
| | 2023 | 17.4 | 15.1 | 17.6 | 17.8 | 19.3 |
| 전체 농어촌 시·군 | 2021 | 22.7 | 18.5 | 21.6 | 24.5 | 26.0 |
| | 2022 | 23.1 | 18.6 | 21.9 | 25.4 | 26.4 |
| | 2023 | 22.7 | 18.4 | 21.8 | 24.8 | 25.7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2021~2023).

〈표 4-22〉 진료 항목의 지역별 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지역 구분 | 기준 연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 군 지역 | 2021 | 62.8 | 76.0 | 67.8 | 55.2 | 52.3 |
| | 2022 | 60.8 | 74.6 | 66.3 | 51.2 | 51.1 |
| | 2023 | 62.0 | 75.4 | 66.6 | 53.1 | 52.7 |
| 도농복합시 | 2021 | 85.8 | 89.3 | 89.0 | 83.9 | 81.3 |
| | 2022 | 84.1 | 88.6 | 85.0 | 82.3 | 80.6 |
| | 2023 | 84.7 | 88.8 | 85.4 | 83.5 | 81.1 |
| 전체 농어촌 시·군 | 2021 | 74.2 | 82.8 | 77.2 | 69.8 | 67.1 |
| | 2022 | 72.7 | 81.7 | 75.8 | 67.1 | 66.1 |
| | 2023 | 73.5 | 82.2 | 76.1 | 68.5 | 67.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2021~2023).

-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의 필수의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지난 3년의 동·읍·면부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분석 결과, 동부는 평균 5.3분, 읍부 평균 17.7분, 면부 26.3분으로 동부와 비교해서 읍부는 12.4분, 면부는 21.0분이 더 소요
- 또한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또한 동부는 99.7%로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읍부는 3개년 평균 81.4%, 면부는 70%를 밑돌아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열악

〈표 4-23〉 진료 항목의 행정구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행정구역 구분 | 기준 연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 동부 | 2021 | 5.3 | 4.4 | 5.7 | 5.0 | 6.0 |
| | 2022 | 5.3 | 4.4 | 5.7 | 5.0 | 6.0 |
| | 2023 | 5.4 | 4.5 | 5.9 | 5.1 | 6.1 |
| 읍부 | 2021 | 17.5 | 12.0 | 17.1 | 19.3 | 21.6 |
| | 2022 | 17.9 | 12.1 | 17.7 | 20.2 | 21.7 |
| | 2023 | 17.8 | 12.0 | 17.6 | 20.0 | 21.6 |
| 면부 | 2021 | 26.1 | 21.9 | 24.7 | 28.3 | 29.5 |
| | 2022 | 26.6 | 22.2 | 24.9 | 29.3 | 30.1 |
| | 2023 | 26.2 | 21.9 | 24.9 | 28.6 | 29.3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2021~2023).

〈표 4-24〉 진료 항목의 행정구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행정구역 구분 | 기준 연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 동부 | 2021 | 99.7 | 99.9 | 99.8 | 99.9 | 99.1 |
| | 2022 | 99.7 | 99.9 | 99.9 | 99.9 | 99.1 |
| | 2023 | 99.7 | 99.9 | 99.9 | 99.9 | 99.2 |
| 읍부 | 2021 | 82.1 | 91.9 | 82.8 | 78.4 | 75.1 |
| | 2022 | 80.9 | 91.3 | 81.3 | 76.2 | 74.8 |
| | 2023 | 81.1 | 91.3 | 81.2 | 76.4 | 75.3 |
| 면부 | 2021 | 69.1 | 78.2 | 73.1 | 64.0 | 61.2 |
| | 2022 | 67.3 | 76.9 | 71.5 | 60.7 | 59.9 |
| | 2023 | 68.1 | 77.5 | 71.7 | 62.4 | 60.8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2021~2023).

○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의료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의료는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감소는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
- 기초생활시설 유지에 필요한 임계인구를 측정한 한이철 외(2022)의 연구에서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

* 우리나라 1,404개 읍면 중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지역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읍면은 전체의 47.4%(한이철 외, 2022)

○ 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

- 그동안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응급, 분만, 아동청소년 분야 의료기관 지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비교해 정책의 범위가 확대, 농어촌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예상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는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필수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을 포함

* '23년 1월 31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필수医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과 10대 주요과제 제시

* (필수의료혁신 전략) '23년 10월 발표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비전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와 8가지 세부과제 제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4년 2월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현장의 핵심적 기피 요인을 해소하여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개의 정책 패키지를 핵심 과제로 설정

○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은 점차 25.2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보건복지부, 2023. 9. 21)

*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80세 이상(60.6명) > 70대(37.8명) > 50대(29.0명) > 40대(28.9명) > 60대(27.0명)

○ 한편, 농어촌의 재가 노인은 독거 혹은 노인 부부의 형태가 많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 시 동행할 보호자가 없어 미충족 의료 또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 1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 비율(%): 농어촌 40.0%, 도시 24.2% (통계청, 2023)

□ 정책 방향

○ 농어촌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을 참고하여 농어촌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과제 추진 필요, 특히 정책 체감도가 낮은 도서 및 산간 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보

- 인구유출과 의료 쇠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 기존 민간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특광역시 제외 시·군·구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 24곳('22.12월 기준)(보건복지부, 2023)

* '23. 5월 기준 공중보건조사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에 공보의 미배치(경향신문, 2023. 6. 26.)

○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 농어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 농어촌의 경우 노쇠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재가 노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와 요양 등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제고
- 농어촌 재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질환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와 복약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재가 방문을 통한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방식 다변화

- 코로나 19 이후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현재 시범사업('23. 6.)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 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 확대 등 시범사업 보완방안('23.12.) 마련
- 제5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협진, AI·IoT를 활용한 스마트건강관리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점 과제 포함 필요
 -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24): 8개 시도(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개 시군 참여
 -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24) : 전국 178개 지자체 참여

□ 추진 과제

1)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촌 필수의료체계 강화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 인력 확보

-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지자체에서는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해 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학생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추진(보건복지부, 2024)
 - *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도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보장하는 등 지역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여건 개선(보건복지부, 2024)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재정, 기술 등 지원

- 응급의료 취약지역 병원과 거점병원 응급실의 협진 네트워크 확대, 강화
- ‘우리마을119’ 양성: 의용소방대 등 시민단체 대상 응급처치 교육·훈련

○ 지역완결형 전달체계 구축

- 지역완결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수요·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구조 전환 추진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 의료체계 강화 지원(보건복지부, 2024)

2) 수요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요양 통합으로 재가 방문형 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재가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고령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환자 등에 대해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 의료기관이 적어 충분한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농어촌 재가 노인에 대한 방문의료 제공 강화 필요

* 2차 시범사업 참여 95개 의료기관 중 농어촌 참여 기관 27개(28.4%)

- 노화·질병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건강·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재택의료,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등 여러 방문형 사업들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단절이나 누락이 없도록 관리 필요

○ 방문의료, ICT 활용 의료서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 모바일보건소 시스템(MPHIS) 도입으로 찾아가는 원격협진 체계 구축

* (기존) 보건소·보건진료소 내원 원격협진 → (개선) 가정 등 찾아가는 원격협진

-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여 돌봄, 생활 서비스 등 제공하는 ‘농촌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 건강상담, 치매진단 및 예방활동, IoT 헬스케어, 오락, 복지상담 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수요 기반 건강관리사업 실시

- 지역의 인구구성과 건강문제 우선순위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 건강관리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

*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3)은 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미충족 의료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정책은 부족. 43개 실천과제 중 보건의료 과제는 '비대면 진료'만 포함

〈참고〉 지역 의료 확보를 위한 일본 사례

-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에서 각각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중 후생노동성의 '2023년 과소대책 관계예산(令和5年度 過疎対策 関係予算)'에 포함된 사업은 도서벽지 보건의료대책, 지역의료개호총합확보기금 사업 등임.
- '도서벽지 보건의료대책'에 따라 거점병원 운영, 순회진료 실시, 산부인과 등 운영, 도서벽지 환자 이송 차량(선박, 항공기) 운행 지원, 의료시설 및 장비 정비, 원격의료설비 도입, 닥터 헬기 도입 사업이 추진 중이고, 지역의료개호총합확보기금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병상, 장비 보강과 재택의료 제공, 의료인 확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지역 의료 확보를 위한 계획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대신 광역과 중앙에서는 예산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 후생노동성, 2023년 과소대책 관계예산(令和5年度 過疎対策 関係予算).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사업 중 보건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원 발굴, 활용 필요

* 지자체별 지역소멸기금 투자계획(23):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차지, 의료 관련 사업은 5%에 불과

3) 농촌주민의 예방적 건강서비스 확대

○ 농촌 주민의 마음건강사업 강화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 사업 모델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등으로 운영

- 마을 단위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지자체별 선도모형 구축

- 경로당 등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으로 고립감 예방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연계하여 심리안정 물품지원, 우울 측정 및 환류,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고도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 * 사업 대상 인원 : ('24, 예비본사업) 30천 명/ 50개 시·군 → ('25~, 본사업) 151천 명
- 건강검진으로 그치지 않고 종합적 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교육, 평가, 검진 결과DB 구축 및 활용, 예방사업 운영 등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고도화
 - * 검진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검진대상자 관리, 의료진 교육·질 관리 및 평가, 검진결과 DB 구축 및 운영, 사업수행 평가 및 홍보, 검진 대상·항목 등 적절성 검토
 - * 검진의료기관: 시·군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검진의료기관 지정 절차 수행, 검진 시행
 - * 농촌진흥청: 검진결과DB 활용, 농업인 취약질환 도출, 농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치료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방안 연구 수행
- 검사 후 확진검사 및 진료,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활성화 등 검진 사후관리 사업 실시
- 관내 병원이 없는 시·군의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이동검진 확대 추진

3.2.2.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의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주도성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정책이 2022년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본격화되었고, 2023년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으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 정착 추진 중
 - 법률에 따른 향후 시행과제는 1)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정 제도 운영, 2)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등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체계 필요
 - 농촌인구의 고령화, 과소화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 불균형은 돌봄 자원의 부족 현상 초래

-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민 참여 돌봄, 노노케어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유지 활동에 필요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방식이지만 보상은 적고 노동 부담은 가중시켜 적절한 대응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
- 특히 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농촌 사회서비스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들에서 사회서비스는 노동이 아니라 농촌주민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설계되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 농촌여성들의 참여를 유인할 동력 부재
 - * 취약농가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인 농식품부의 '행복나눔이 사업'은 서비스 인력을 '행복나눔이 봉사단'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여 자격조건, 업무 범위, 필요 기술과 태도, 부당대우 대응 등 업무 지침이 부재하고 고용 계약 혹은 서비스 제공 계약 관계가 불투명하여 행복나눔이의 업무상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이순미 외, 2023)
 - * 농식품부의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은 면단위 여성단체와 여성주민의 가용한 봉사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지 않으면서 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
- 따라서 농촌의 사회서비스 노동 제공 및 대가 지급 체계와 함께 절대적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하향식 체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근거로 하여 활동하는 인력에게 지원하는 상향식 체계 필요

- 법률이나 지침 등에 따라 공동체 활동 제공 인력의 자격, 명시된 활동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체계 탈피 필요
- 하향식 지침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수요를 대상으로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필요

□ 정책 방향

○ 농어촌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소득이 아닌 수요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
- 농어촌 복합서비스 거점(생활SOC)을 기반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대

○ 농어촌 지역사회 주도 경제·사회서비스 제도의 안착

-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기관 지정·운영, 농촌서비스협약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른 각종 제도적 기반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농어촌 돌봄 자원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및 인력 확보

- 공동체 유지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활동을 일반적인 노동 관점에서 화폐가치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동가치 자산화가 필요
- 공동체 노동의 대가의 일회성 지원, 일반 경제적 관점의 노동 가치 산출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분리, 공익적 활동의 상품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존재
- 공동체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한 대가가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경비 필요

□ 추진 과제

1) 농어촌 생활돌봄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복합서비스 거점(생활SOC) 기반 생활돌봄 서비스 확대

- (스마트 건강 지킴이) 보건기관과 배후마을을 연결하여 주민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콘텐츠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ICT 기반 화상플랫폼 서비스 전달
 - * 식단 조정 등 건강상담, AI 활용 치매진단 및 예방활동, 오락(실버로빅, 웃음치료, 노래자랑, 퀴즈대회 등), 회의/교육(범죄예방, 자살예방 등), 복지 상담 등
- (스마트 돌봄센터) ICT 기반 화상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읍면 소재지 간 청소년 돌봄 센터를 상호 연결, 청소년의 지역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
 - * 온라인 학습·도서 콘텐츠, MR(가상현실) 기반 체육활동 콘텐츠 제공 등
- (찾아가는 5일장) 읍면 소재지 하나로마트 등에서 생필품 구입 취약지역 대상을 순회하면서 필요 물품을 주문·배송 또는 이동판매
- (찾아가는 생활고충 해결) 배후마을 주민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을 상담원이 접수하여 전문가 및 봉사단체 연결을 통해 생활고충 해결
 - * 전기, 수도, 보일러, 문고리, 세면대 등 간단 집수리, 병원/은행 등 동행서비스 등

- (찾아가는 빨래방) 배후마을 주민 대상으로 이불 등 대형 빨래의 수거부터 배달까지 서비스 제공

○ 농어촌 청년 직·주·락(職·住·樂) 결합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청년(귀농, 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직·주·락(職·住·樂)이 결합된 청년친화적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노인돌발사고 대응시스템 구축(돌발사고 대응 사전탐지 예방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상시적으로 케어하고 안전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 가정 내에 매일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움직임 상황을 보건소·의료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
- 사전탐지 예방시스템 구축(갑작스런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돌봄 AI 로봇, 집집 안전 체크벨 설치 등)
- AI 기반 모니터링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 활용
 - * AI 스피커나 IoT 기기를 통한 독거 노인들의 일상생활 모니터링, AI 보이스봇을 활용한 어르신 상태 점검, 자동 개폐 비데 설치(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 서비스 구축) 등 추진

〈참고〉 서울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 독거 노인들을 위해 IoT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운영
 - 실시간으로 노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시 자동으로 알람을 보냄
 -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습도·조도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 및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대응 운영

자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검색일: 2024. 8. 23.).

2) 지역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등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 육성·확대

-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제도 설계 및 운영

- 농촌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서비스 필요(needs) 식별 및 계획 역량 형성
- 주민공동체를 통한 부족한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지원 강화
 - * 농촌 생활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기관 지정·운영

○ 농촌서비스협약제도 설계 및 운영

-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 수립 및 협약
- 협약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보상금을 지급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률적 근거를 둘 수 있음. 성과평가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연계

〈참고〉 농촌서비스협약제도에서 참고할만한 면 지역 사회서비스 연대·협력체계 사례

- 고창군 '다:드림 사업'
 - 농촌협약사업('24~'28)의 일환으로 고창읍에 '다:드림누리터'를 조성하고 13개 읍면에 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
 - 이 사업의 핵심 구성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별도 실행조직을 구성하거나 행복나눔이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활동을 해 왔던 읍면 내 유관기관/단체(보육시설, 교육청,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등 단체)와 서비스 MOU를 체결하고 총괄조직(중간지원조직)에서 각 MOU 조직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서비스 전달을 실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자료: 전북도민일보(2024. 5. 3.), "고창군, 농촌협약 437억원·13개 사업 본격화"

- 남원시 산내면의 '가치살래'(거버넌스 조직)
 - 기초생활거점 시설(생활SOC)을 서비스 플랫폼으로 하여 주민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협의하고 역할분담하는 산내면의 자치 조직
 - 구성: 면의 복지계, 기초생활거점 시설 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생활지원사, 면 발전위원회, 주요 단체장 및 활동가
 - 운영: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구성원 중 담당을 배정. 가치살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가 위탁 운영 중인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바로 사업화. 이런 식으로 논의 기구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 거버넌스 성공 요인임.

자료: 이순미 외(2024),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보상체계 확립

○ 사회서비스 활동 인력 육성 및 활동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직무훈련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인력을 육성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
- 이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정 요건으로 포함
- 사회서비스 활동 및 보상 등에 대해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동 인력의 역량 및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

○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주민 참여 조직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결정하고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 확립

- 사회적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반적인 경제적 대가로 할 경우 노동 제공자와 수요자의 갈등, 제공자 간 갈등, 기존 농촌 문화와 충돌 등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 유지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자산화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
- * 타임뱅크, 기후화폐, 공동체화폐와 같이 일반 경제적 노동 대가 지급 방식이 아닌, 공정한 노동 대가 지급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유지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필요

〈참고〉 타임뱅크(Time Bank)

- 타임뱅크(Time Bank)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제도
 - 남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립하고, 이 시간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사용하는 원리임.
 - 서비스를 제공한 1시간을 1타임크레딧으로 적립하고, 향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계좌에서 차감
 - 모든 서비스는 종류와 관계없이 시간당 동등한 가치를 가져 평등하게 평가되고 교환
-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총량을 증대하고, 공공복지의 경직성과 자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 유대 관계를 통한 경제활동 가치를 공평하게 평하여 시장경제가 훼손하는 비시장경제의 영역 강화 가능
 - 시장경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도움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복지를 “시혜”가 아닌 “참여”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

자료: 김정훈·이다겸(2018),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참고〉 구미시 사랑고리

- 구미시 사랑고리는 복지수혜자를 복지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하여 공공복지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운영
 - 다른 사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된 1시간의 봉사는 1고리로 사랑고리은행에 적립되며,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 가능
 - 자체 프로그램인 '지역사랑고리'와 구미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아사업)에서 수행하는 '시니어사랑고리' 운영
-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총량을 증대하고, 공공복지의 경직성과 자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 시니어사랑고리에는 고령층 간의 정서교류 및 소통을 위한 '노노케어사랑방'과 전 연령층이 노인 및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노소사랑방'이 있음.
 - 복지급여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수혜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고자 노인일자리아사업인 '노노케어' 참가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시니어사랑고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노케어를 통해 지원받는 독거노인도 사랑고리 활동을 통해 상호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자료: 구미시니어클럽(검색일: 2024. 8. 23.).

3.2.3.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세대 소득 안정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업인·농어촌 주민의 사회 안전망은 전달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고 비농어업인·도시 주민과 비교해 불평등하여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보편적 복지 서비스 불충분
 - 여러 사회 안전망 중에서 농어촌의 의료시설 접근성과 노후 소득 부족 문제는 고령화·과소화 심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
 - 특히 농어업 및 농어촌 미래세대는 경제적 문제로 소득 안전망에 편입되기에 제한적인 상황
- 부족한 의료 접근성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용이 많고,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농후
 - 최소한의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 불평등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료 안전망 수준은 낮은 상태로 수십 년간 유지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 2021년 기준 71.8%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농어업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도 낮아 향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기대 불가

- 2021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28.2%이며, 미가입자의 62.1%가 '경제적 문제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
- 농업인이 내는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만 1,134원으로, 전체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인 22만 7,757원의 45% 수준

○ 청년 창업농, 귀농 청년 등 농업·농촌 미래세대의 소득 안전망 및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청년 창업농, 귀농 청년 등은 정착 초기 농업 경영 기술과 경험 부족, 부채 증가 등으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에 한계
- 비농업 청년과 비교하여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고 가입 금액도 적어 향후 노후 소득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
- 현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하는 형태로 농업·농촌 미래세대를 특정 불가
- 청년농 대상 소득 안정망과 경제적 웰빙 지원은 농촌의 미래세대가 농촌 공동체 유지, 식량 주권 확보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고려 필요

○ 농어업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 비농어업 산업재해율보다 높아 농작업 재해에 따른 건강과 소득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농후

-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2018년 기준 0.54%이지만, 농산업체 재해율은 0.48%로 1.4배 높으며, 사망만인율은 1.12 대비 1.68
- 우리나라 농가는 가족 중심으로 일하는 가족농이 대부분이며, 경지 규모 1.0ha 미만의 영세농이 많아 농작업 중 다양한 유해 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 인지도가 낮고 업무상 재해나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부족한 실정

□ 정책 방향

○ 지역사회 기반의 미래세대 소득안전망 강화

- 농업에 신규 진입하여 소득이 없거나 충분한 소득이 없는 청년농에게 공적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임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지원체계 필요
- 공적 연금과 함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안전망 다양성 측면에서 청년농을 위한 사적 연금 가입과 납부를 지원하는 방안 고려

○ 농어촌의 소득 및 복지 취약성 해소를 위한 농어촌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확대

- 농어촌 지역 내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저소득 가구 소득지원 확대
- 농어촌의 사회보장 특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농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정망 내실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통한 보험 가입 확대 및 보험 혜택 확산

□ 추진 과제

1) 농어촌 미래세대의 소득안정 지원

○ 청년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현 제도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금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지연되고, 다른 농업인과 비교하여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입액과 향후 수령액이 낮을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보험료 지원 비율과 규모를 확대한 '청년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업인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과 수령액을 늘려 가입 기간 확대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지원

* 대만의 농업인연금에서는 청년농의 연금가입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이 납입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연금 계좌에 입금 청년농이 다른 직업군과 동일한 생활 수준과 안정성 유지

○ 예비청년농업인 대상 ‘청년농업인크레딧’ 제도 실시

- 국민연금료 지원 제도 외에 소득이 없는 초기 진입 단계나 훈련 단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크레딧 제도를 실시하여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전략 필요
- 소득이 부족한 초기 진입 청년농에게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과 같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거나, 농업인 연금보험료 보조에 차등을 두어 청년 세대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

○ 청년농업인의 자산 형성 지원

- 국민연금 외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대상 저축 지원과 사적 연금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청년농업인은 소득 수준 증명이 쉽지 않아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금 계좌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보험료 납입 시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추가 입금하는 제도를 도입
- 또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부문에 특화된 재무관리사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업인의 자산 축적, 재무 설계, 노후 소득 축적 등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을 지원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임.
- 지원 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함.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함.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함.
 -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함.

자료: 복지포(검색일: 2024. 8. 23.).

〈참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이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후생활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기대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늘어나는 수명에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개인과 사회에 모두 고통이 되므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높아짐.
 - 이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개개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함.
- 노후준비서비스는 현재 노후 준비 정도를 파악한 후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실천사항 제안, 다른 기관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양한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종합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무 상담을 통해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공함.

자료: 국민연금공단(검색일: 2024. 8. 23.).

○ 농어촌 거주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 현재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I·II(기준중위소득 30%, 50%),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100%)의 농어촌 청년 특례 적용(선정 우선순위 부여, 납입유예 기간 허용 등 통장유지 조건 완화,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
- 만기 시 자산 운용에 필요한 재무관리 교육, 가입기간 중 긴급자금 필요시 통장 유지 조건으로 필요자금 대부 지원, 가입기간 및 만기 이후 필요한 복지자원 연계(마음건강 바우처 등 우선 연계 등)
- 농업기업, 농업경영주 등 농어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직 농어촌 청년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형식의 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
- 농어촌 거주 금융취약 채무 청년 대상 채무조정 상담지원, 신속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 거버넌스 구축

2) 농어촌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농어촌형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농어촌 특례 확대 방안

- 농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낮으므로 사회보장 특별지원 사업이 필요한 지역

*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업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지원(동법 시행령 제25조)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 기회 제고 가능
- 또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인구감소지역, 성장축진지역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 가능
- 동 사업의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거점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균형있게 공급 가능
- 따라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선정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및 사회서비스 수준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 필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농어민 특례 적용 확대

- 소득산정시 농업 관련 보조금, 농업소득 직접직불금, 보육시설이용료, 농지연금 등 제외
- 재산산정시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이자비용의 50%) 인정, 재산 추가 차감 등

○ 귀농·귀촌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대상범위 및 공제액 확대)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범위 상향(30세 →34세)
- 귀농·귀촌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확대(40만원+35%에서 일정 수준 상향)
- * 적용 대상 청년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24) 및 40만원+30% 추가공제 적용

○ 농어촌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

-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취약청년 유형(신규 귀농·귀촌 청년, 농림어업 종사 관련 금융취약 청년 등)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부 사업을 설계
- 현재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이 추진 중(24~25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통한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

○ 농어촌 지역 교육급여 특례 적용

- 현재 최저교육비에 교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리적 여건 상 원격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이 크므로 교통비 추가 지급
- '23년부터 도입된 교육급여 바우처의 농어촌 지역 사용 현황 검토(도시지역에 비해 사용처 제한)를 통해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금급여 적용 검토

3)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고, 월평균 수급액도 증가하는 추세
-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월평균 약 30만 명이며, 연간 지원 금액도 1,700억 원을 유지 중
- 기준소득 월액이 2017년 91만 원에서 2024년 현재 103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급액은 2020년 305,000원에서 2022년 346,000원까지 증가
- 그러나 타 보험료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지원이 적고, 제도가 일몰제로 운영('24년 말 일몰 예정)되어 향후 농어업인의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수준까지 지원 금액 및 기준소득 월액 인상을 추진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정책 안정성 확보 필요
- 국민연금 미가입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검토 필요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수혜 농가가 증가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이 감소한 효과가 있으며, 해당 제도 외에 다양한 제도를 통한 의료 접근성 격차 해결 필요
-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농어촌 지역 거주자 보험료 감면을 동시 수혜가 가능하여 건강보험료 부담 일부 해소

- 2019년을 기준으로 1회 방문당 의료비의 도·농 격차가 주요 질환에서는 1.7만 원, 치료 가능 사망 질병에서는 7만 원 가까이 발생(안석 외, 2019) 하는 등 실질적 의료 격차 지원에는 부족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 필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보장 강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국가 산재보험이나 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과 미래 소득 안정에 기여
- 2022년 가입 인원이 약 9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약 5만 명의 농업인에게 8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
- 또한 2021년 가입자 90만 명 중 86%인 77만 명이 2022년에 재가입함으로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
- 그러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임의 가입 방식으로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농업인, 여성 농업인, 소농 등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가입 농업인의 가입 확대 노력 필요
- 또한 보장성 및 수급권 보호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목적인 정책 보험료 일부 보조 등도 추진 필요

3.2.4. 농어촌 맞춤형 영유아 보육 제도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보육 여건 악화

-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비율이 2010년 31.3%에서 2021년 35.5%로 증가하였고, 2023년 영유아 보육·교육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미충족 지역은 2021년 13.3%에서 2021년 14.1%로 증가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확대

〈표 4-25〉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연도 (자료 기준) | 지역 구분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 | |
|---------------|------------|-----------------|------|------|
| | | | 어린이집 | 유치원 |
| 2021년 | 군 지역 | 86.7 | 97.7 | 75.6 |
| | 도농복합시 | 94.4 | 89.0 | 89.8 |
| | 전체 농어촌 시·군 | 90.4 | 81.7 | 82.8 |
| 2022년 | 군 | 85.9 | 97.7 | 74.1 |
| | 도농복합시 | 93.9 | 98.8 | 88.9 |
| | 전체 농어촌 시·군 | 89.9 | 98.1 | 81.6 |
| 2023년 | 군 | 85.9 | 97.5 | 74.2 |
| | 도농복합시 | 93.7 | 98.5 | 88.9 |
| | 전체 농어촌 시·군 | 89.9 | 98.1 | 81.6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2021~2023).

○ 보육시설 확충 및 공보육 전환 등 시설 보육 중심의 정책에서 보육 사각지대 지원으로 전환 필요

- 농어촌 영유아 인구의 감소로 인해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육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긴급/일시돌봄 수요 미충족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 국공립 시설과 영아 보육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농어촌 소재 비율이 매우 낮아 보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

〈표 4-26〉 전국 및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현황(2020년말 기준)

단위: 개소, %

| 구분 | 계 | 설립주체별 | | | | | | |
|-----------------|-------------------|-----------------|----------------|--------------|------------------|------------------|--------------|----------------|
| |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전국 (비율) | 35,352 (100.0) | 4,958 (14.0) | 1,316 (3.7) | 671 (1.9) | 11,510 (32.6) | 15,529 (43.9) | 152 (0.4) | 1,216 (3.4) |
| 농어촌 (비율) | 7,111 (100.0) | 918 (12.9) | 697 (9.8) | 312 (4.4) | 2,692 (37.9) | 2,230 (31.6) | 26 (0.4) | 236 (3.3) |
| 전국대비 농어촌 점유율 | 20.1 | 18.5 | 53.0 | 46.5 | 23.4 | 14.4 | 17.1 | 19.4 |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통계.

- 농어촌에서 육아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항목은 일시적 부재·긴급 상황에서 부모 대신 돌보아 줄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표 4-27〉 농촌지역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구분 | 평균(5점 척도) |
|--------------------------------------|-----------|
| 1) 영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 3.36 |
| 2)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 3.36 |
| 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 3.85 |
| 4)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 4.12 |
| 5)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 | 2.70 |
| 6)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 등을 구하기 어렵다 | 3.72 |
| 7) 어린이집/유치원의 예체능, 영어 등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 3.31 |
| 8)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 3.78 |
| 9)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 3.62 |

자료: 김은설 외(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 농어촌의 경우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일시적·긴급 상황 돌봄이 더 부족한 상황

* 보건복지부 사업인 시간제 보육은 36개월 미만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중인 아동이 시간제로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로, 정부는 비용의 3/4를 지원

○ 가정 파견형 돌봄서비스 이용 요구 대비 공급의 부족

- 농촌은 영유아 인구가 적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정부의 아이돌봄사업과 같은 개별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이에 대응한 공급은 부족한 실정

* '아이돌봄사업'은 초등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의 육아지원 수요에 적절한 가정양육 지원 모델이나 현실적으로 지리적 여건과 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농어촌에서 아이돌보미 활용은 한계가 존재

- 영농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양육지원으로 가정 파견 방식 육아도우미를 선택

* 영농가구의 선호 육아지원서비스(%): 가정방문 육아도우미 33.1, 이른 아침 보육 31.6(육아정책연구소, 2023)

○ 기존 보육의 서비스 제공 시간 불충분

- 농어촌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해 이용자 부족으로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오전 9시 이전 보육 및 오후 5시 이후) 제공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 이른 아

침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농가구의 경우 최소 연 4~5개월간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미운영

- 현재 '농번기아이돌봄방'은 지역내 호응이 좋은 보육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제도상 주말에만 영유아 및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시간 한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연장보육시간이 필요한 주중이나 초등생을 위한 돌봄서비스에의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

□ 정책 방향

○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농촌형 보육 모델의 개발, 적용

- 농어업인 직업 특성상 자녀에 대한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고, 특히 농번기나 특수작물 재배 지역의 경우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돌봄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연장보육을 현실화하여 이에 대응
- 가정 양육이 비교적 많은 영아의 경우 부모의 병원 진료, 행정업무 등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필요가 발생하였으나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아이돌보미 등)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 필요
- 농촌의 환경 특성상 지역 간 이동보다는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요시 적정 인력의 가정 방문을 통한 보육 서비스 운영 개발 추구

○ 가정양육의 소외감 해소를 통한 행복한 육아 지향

- 농어촌 상황에 따라 영유아 양육이 모(母) 중심 육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가정내 육아 과정에서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나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부족
-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다른 육아 가정과 함께 교류하고 육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단독 양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공동 관심사로써 육아가 지원되고 있음을 체감하도록 유도

○ 농어촌 지역사회 공동체 내 육아지원 인력 양성 및 활용

- 육아지원, 보육·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인력(아이돌보미 등)이 해당 수요 지역 외부로부터 양성되고 투입되는 시스템에서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 농어촌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제도 활용에 한계 존재
- 기존의 돌봄 인력 양성 체계와는 차이가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농어촌 내에서 인력 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하며, 지역 내 인적 자원 즉, 육아 가정간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등 공동체 내부적으로 서비스 공급과 이용 연계를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원활한 환류가 가능한 보육 지원 방식 고려

□ 추진 과제

1) 농어촌 긴급·일시 돌봄 제도 도입

○ 농촌형 육아파트너 가정 제도의 도입

- 육아파트너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의사가 있는 지역 내 가정 중 신상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자체가 ‘육아파트너 가정’ 자격을 부여하고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 이수 필수 필요 교육의 내용으로는 기본적 돌봄 원리, 놀이 방법,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 *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방안으로, 일본은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파트너 가정으로 일부 희망 가정을 지정해 두고, 영유아 부모가 필요 시 자녀를 데려다 주어 일정 시간만큼 돌봄(자원봉사)을 받는 방식
- 등록된 육아파트너 가정은 비슷한 연령 자녀를 가진 가정 간의 품앗이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봉사료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
- 이용 비용은 수익자(이용자)와 정부가 공동 부담 가능

○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농어촌형 육아도우미 양성 및 활용

- 농어촌 육아도우미는 아이돌보미 이용이 곤란한 농어촌에서 별도의 지역 자체 육아도우미를 양성하여 일시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
 - * 지역 자체 아이돌보미 사례: 서초형 아이돌보미

- 기존의 아이돌보미 대비 농촌 자체 인력 활용에 초점을 둔 인력 양성으로 차별화하고 지역 파견에서 거리상 이점이 있으며, 지역 여성 일자리 개발 효과 기대
-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농촌여성 대상, 양성 필수 교육기간과 기존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인건비 수준에 대한 조정 고려

2) 농어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간 다양화

○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양질의 아침/저녁 연장보육 제공

- 영유아 인구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연장보육과 영농가정의 특징적 돌봄 시간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 또는 돌봄방을 지정하고 오전 8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거점형 연장보육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 거점형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질 개선, 서비스 다양화, 시간 맞춤형 보육 요구 대응 효과 기대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 기존의 어린이집 빈 공간 등을 이용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의 시간제 보육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별도 시간제 보육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초기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이 있고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한정하여 소규모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보육의 편리한 이용은 농어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하고 일시적 상황에서 의 보육 지원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 가능

3) 농어촌 보육 인프라 확충

○ 가정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형 육아나눔터(공공 키즈카페) 확충

- 농어촌에서 영유아 자녀의 독박육아와 육아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내 육아를 지원하고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제공

- 지리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이 어려운 농어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한 공간에서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 소통을 이웃 육아 가정과 함께 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일종의 육아 나눔 카페와 놀이방(일시돌봄서비스 제공)을 연결한 방식으로 운영

○ 농촌 보육시설 확보를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에 집중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협력 사업을 맺은 지자체 우대
 - * 현원 기준 3~10인, 사회복지 어린이집 지원 제한 해제, 3인 미만의 경우 어린이집 지원 가능
 - *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선정 또는 농촌협약을 맺은 지역 우선 선발

○ 농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확대

- 농번기 주말 보육수요를 고려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에 지자체 참여 및 지원 개소 수 확대
 - * 사업방식 변경: ('23) 민간보조 → 지자체 보조(지방비 포함, 전체예산 확대)
 - * 지원 개소 수 확대: ('23) 76개소 → ('24) 100 예정

○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질 개선

- 보육시설이 부재한 마을(2024년 13개소)에 이동식 놀이 차량을 운영하여 장난감 대여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의 영유아가 한자리에서 유아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방문 방식으로 확대 운영
- 장난감 대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보육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적 활동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4. 교육·문화 부문

4.1. 여건 및 개선 방향

□ 교육·문화 분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농촌의 청소년 및 청년세대 감소 대응 필요

○ 농촌 지역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급격한 감소

-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2010년 18.8% → 2023년 18.5%)이나 읍지역 인구비율이 소폭 상승(2010년 8.8% → 2023년 9.8%)하고 면지역 비율이 감소(10.0% → 8.7%)
-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은 증가, (40~50대 2010년 이후 연평균 0.1% 증가, 60대 이상은 3.3% 증가), 40대 이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 폭 증가(10대 이하 연평균 2.8%, 20~30대 2.4% 감소)
- 특히 면지역은 읍지역보다 청소년 세대(10대 이하) 및 청년 세대(20~30대)의 감소 증가(10대 이하 연평균 4.5%, 20~30대 4.0% 감소)

〈표 4-28〉 세대별 농촌의 인구변화

단위: %

| 구분 | 연령대 | 연도별 전체 인구대비 연령대별 구성비율 | | | | | | 연평균 인구 변화율 | |
|----|--------|-----------------------|------|------|------|------|------|------------|---------|
|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3 | '00~'23 | '10~'23 |
| 농촌 | 10대 이하 | 18.4 | 16.7 | 16.4 | 16.3 | 16.7 | 16.3 | -2.8 | -2.8 |
| | 20~30대 | 18.1 | 16.3 | 15.7 | 15.0 | 14.5 | 13.7 | -2.5 | -2.4 |
| | 40~50대 | 20.4 | 18.5 | 18.1 | 17.8 | 17.9 | 17.5 | 0.9 | 0.1 |
| | 60대 이상 | 36.8 | 33.0 | 29.9 | 27.5 | 26.0 | 25.3 | 2.8 | 3.3 |
| | 합 | 20.8 | 19.2 | 18.8 | 18.6 | 18.7 | 18.5 | -0.2 | 0.0 |
| 읍 | 10대 이하 | 8.2 | 8.7 | 9.3 | 9.8 | 10.7 | 10.7 | -1.2 | -1.8 |
| | 20~30대 | 7.7 | 7.9 | 8.3 | 8.3 | 8.8 | 8.5 | -0.8 | -1.1 |
| | 40~50대 | 7.4 | 7.8 | 8.4 | 8.9 | 9.9 | 10.0 | 2.9 | 1.7 |
| | 60대 이상 | 9.8 | 9.8 | 9.9 | 9.8 | 10.2 | 10.3 | 4.7 | 4.9 |
| | 합 | 8.0 | 8.3 | 8.8 | 9.1 | 9.8 | 9.8 | 1.2 | 1.0 |
| 면 | 10대 이하 | 10.2 | 8.0 | 7.1 | 6.5 | 6.0 | 5.6 | -4.8 | -4.5 |
| | 20~30대 | 10.4 | 8.4 | 7.4 | 6.7 | 5.8 | 5.2 | -4.2 | -4.0 |
| | 40~50대 | 13.0 | 10.7 | 9.7 | 9.0 | 8.0 | 7.4 | -0.9 | -1.7 |
| | 60대 이상 | 27.0 | 23.2 | 20.0 | 17.8 | 15.7 | 15.0 | 1.8 | 2.3 |
| | 합 | 12.8 | 10.9 | 10.0 | 9.5 | 8.9 | 8.7 | -1.3 | -1.0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각 연도).

- 농촌의 인구 순유입에 주거환경 여건과 더불어 교육 문화가 중요한 요인. 20대의 경우 직업, 교육 요인으로 순유출, 30대의 경우 순유입 상황이지만, 주거, 교육 요인으로 순유출 발생

〈표 4-29〉 농촌 인구 순유입 요인

단위: 명

| 구분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 환경 | 자연 환경 | 기타 | 계 |
|--------|---------|--------|--------|---------|---------|--------|-------|---------|
| 12세이하 | -245 | -1,174 | -1,904 | -2,153 | -1,071 | 927 | -151 | -5,771 |
| 13~19세 | -474 | -4,062 | -715 | 2,760 | -427 | 574 | -369 | -2,713 |
| 20대 | -14,315 | 7,118 | 147 | -10,504 | -4,633 | 1,601 | -338 | -20,924 |
| 30대 | 1,811 | 2,428 | 485 | -1,107 | -2,675 | 2,116 | 561 | 3,619 |
| 40대 | 4,921 | -203 | 1,026 | -741 | -1,326 | 3,043 | 620 | 7,340 |
| 50대 | 8,800 | 961 | 7,735 | -312 | -279 | 6,209 | 2,043 | 25,157 |
| 60대 | 5,852 | 844 | 7,334 | -26 | 244 | 6,951 | 2,047 | 23,246 |
| 70세 이상 | 1,168 | -2,684 | 1,151 | -7 | -297 | 2,958 | -234 | 2,055 |
| 전체 | 7,518 | 3,228 | 15,259 | -12,090 | -10,464 | 24,379 | 4,179 | 32,009 |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2023).

□ 농촌 사회 세대 및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자본 약화 대응 필요

○ 농촌 내 외국인 증가가 두드러짐

- 도시에 비해 농촌의 외국인 비율이 높고, 면지역 청년세대의 경우 2022년 기준 21%가 외국인

〈표 4-30〉 외국인 비율 변화

단위: %

| 구분 | 연령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도시 | 10대 이하 | 0.7 | 0.9 | 0.9 | 1.1 | 1.4 | 1.2 | 1.3 | 1.5 |
| | 20~30대 | 3.8 | 4.0 | 4.3 | 4.9 | 5.2 | 4.9 | 4.8 | 5.2 |
| | 40~50대 | 2.5 | 2.5 | 2.6 | 2.8 | 3.0 | 2.9 | 2.9 | 3.0 |
| | 60대 이상 | 1.4 | 1.4 | 1.5 | 1.5 | 1.6 | 1.6 | 1.5 | 1.6 |
| | 전체 | 2.4 | 2.4 | 2.6 | 2.8 | 3.0 | 2.9 | 2.9 | 3.0 |
| 농촌 | 10대 이하 | 0.5 | 0.7 | 0.7 | 1.0 | 1.3 | 1.1 | 1.3 | 1.6 |
| | 20~30대 | 11.3 | 11.7 | 12.0 | 13.6 | 14.6 | 13.8 | 13.2 | 14.8 |
| | 40~50대 | 3.4 | 3.4 | 3.5 | 3.8 | 4.2 | 4.0 | 4.2 | 4.5 |
| | 60대 이상 | 0.6 | 0.6 | 0.7 | 0.7 | 0.7 | 0.7 | 0.7 | 0.8 |
| | 전체 | 4.0 | 4.2 | 4.3 | 4.8 | 5.1 | 4.8 | 4.6 | 5.0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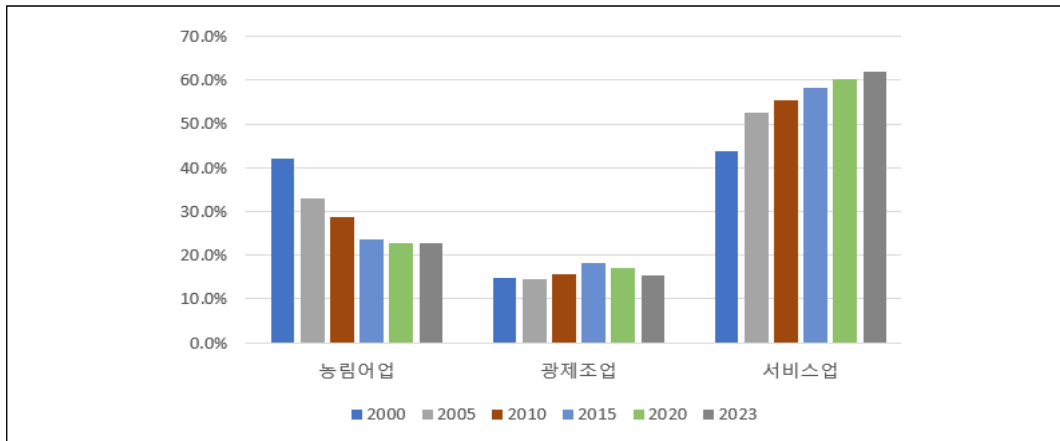
| 구분 | 연령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읍 | 10대 이하 | 0.5 | 0.6 | 0.7 | 0.9 | 1.3 | 1.1 | 1.3 | 1.5 |
| | 20~30대 | 7.6 | 8.0 | 8.3 | 9.5 | 10.4 | 9.8 | 9.4 | 10.4 |
| | 40~50대 | 2.9 | 3.0 | 3.1 | 3.3 | 3.7 | 3.6 | 3.7 | 3.9 |
| | 60대 이상 | 0.8 | 0.9 | 0.9 | 0.9 | 1.0 | 1.0 | 1.0 | 1.1 |
| | 전체 | 3.2 | 3.4 | 3.5 | 3.9 | 4.3 | 4.1 | 4.0 | 4.3 |
| 면 | 10대이하 | 0.6 | 0.7 | 0.8 | 1.1 | 1.3 | 1.1 | 1.3 | 1.8 |
| | 20~30대 | 15.5 | 16.1 | 16.4 | 18.8 | 20.1 | 19.2 | 18.8 | 21.0 |
| | 40~50대 | 3.8 | 3.9 | 3.9 | 4.3 | 4.8 | 4.6 | 4.9 | 5.3 |
| | 60대이상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0.6 |
| | 전체 | 4.8 | 4.9 | 5.0 | 5.6 | 6.0 | 5.5 | 5.3 | 5.8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농촌 내 농림어업 외 다양한 산업 종사자 증가

- 농림어업 비중 감소(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00년 42.0% → 2010년 28.8% → 2023년 22.9%)하고 서비스업 비중 증가(동일기간 43.9% → 55.5% → 61.9%)

<그림 4-16>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변화(2000~20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 농촌의 사회적 자본 약화 심화

-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사회단체 참여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특히 종교단체, 지역단체, 친목단체 참여율 저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2020)의 지역사회단체 모임 참여율을 보면 도시, 농촌 모두 불참자 증가
- 종교단체, 지역단체, 친목단체 참여 감소, 사회단체, 문화단체 참여 증가

〈표 4-31〉 지역사회단체 모임 참여율

단위: %

| 구분 | 년도 | 지역사회단체 참여율 | | | | | | | 불참률 |
|----|------|------------|------|------|-------|------|-------|------|-------|
| | | 사회 | 경제 | 문화 | 종교 | 지역단 | 친목 | 교육 | |
| 도시 | 2010 | 2.64 | 2.34 | 6.09 | 10.85 | 1.54 | 17.35 | 2.38 | 66.41 |
| | 2015 | 3.96 | 1.28 | 9.61 | 7.71 | 1.55 | 16.65 | 2.35 | 69.01 |
| | 2020 | 3.36 | 1.51 | 9.59 | 7.44 | 1.48 | 12.91 | 1.65 | 70.40 |
| 읍 | 2010 | 3.33 | 2.24 | 5.71 | 9.54 | 2.66 | 19.66 | 1.96 | 65.45 |
| | 2015 | 4.80 | 1.44 | 8.76 | 6.42 | 2.05 | 17.76 | 2.06 | 68.85 |
| | 2020 | 4.01 | 1.68 | 9.06 | 6.47 | 1.78 | 14.56 | 1.61 | 69.81 |
| 면 | 2010 | 3.09 | 1.51 | 3.88 | 9.11 | 3.62 | 21.14 | 1.39 | 66.18 |
| | 2015 | 4.76 | 1.44 | 6.04 | 6.49 | 2.84 | 19.72 | 1.49 | 68.51 |
| | 2020 | 4.25 | 1.60 | 6.83 | 6.36 | 2.44 | 17.06 | 1.22 | 69.39 |

주: 빈도가 적은 정치단체, 기타단체는 표에서 생략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의향자는 농촌이 도시보다 적은 편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결과, 자원봉사 활동 경험자와 의향자 모두 도시 농촌 점차 감소하는 추세
- 한편 도농 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2011~2023 격년 평균 도시 15.8%, 농촌 16.1%), 자원봉사 활동 의향자는 농촌(31.0%)이 도시(36.2%)보다 적은 편

〈표 4-32〉 자원봉사 경험 및 활동 의향

단위: %

| 구분 |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 | 자원봉사활동 의향자 | |
|---------------|------------|------|------------|------|
|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 2011 | 19.9 | 19.4 | 47.1 | 38.9 |
| 2013 | 19.9 | 19.8 | 44.4 | 37.8 |
| 2015 | 18.3 | 17.7 | 38.3 | 32.3 |
| 2017 | 17.9 | 17.6 | 37.8 | 33.4 |
| 2019 | 15.8 | 17.3 | 34.1 | 30.3 |
| 2021 | 8.3 | 8.8 | 26.2 | 21.7 |
| 2023 | 10.4 | 11.9 | 25.5 | 22.8 |
| 평균(2011~2023) | 15.8 | 16.1 | 36.2 | 31.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어려운 시기에 소통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에 따르면 신체적·금전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도시보다 농촌이 더 많은 상황
-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도시 23.5%, 농촌 25.5%,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빌릴 수 없는 경우’는 도시 49.4%, 농촌 53.8%,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도시 17.9%, 농촌 21.3%

〈표 4-33〉 도시와 농촌의 한계적 소통 실태

단위: %

| 구분 |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사람이 없는 경우 |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없는 경우 | |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경우 | |
|---------------|----------------------------|------|-----------------------------|------|-----------------------------|------|
| | 도시 | 농어촌 | 도시 | 농어촌 | 도시 | 농어촌 |
| 2009 | 22.6 | 27.3 | 50.5 | 55.5 | 17.8 | 22.7 |
| 2011 | 23.4 | 27.3 | 50.7 | 54.6 | 18.3 | 22.2 |
| 2013 | 24.4 | 29.3 | 52.1 | 57.6 | 18.2 | 22.5 |
| 2015 | 22.9 | 24.5 | 49.2 | 53.4 | 17.0 | 20.8 |
| 2017 | 21.4 | 22.5 | 47.7 | 49.7 | 16.0 | 18.4 |
| 2019 | 20.3 | 20.8 | 47.6 | 52.9 | 16.0 | 19.7 |
| 2021 | 27.2 | 27.1 | 48.9 | 54.7 | 20.1 | 21.7 |
| 2023 | 26.1 | 25.5 | 48.3 | 52.2 | 19.7 | 22.5 |
| 평균(2009~2023) | 23.5 | 25.5 | 49.4 | 53.8 | 17.9 | 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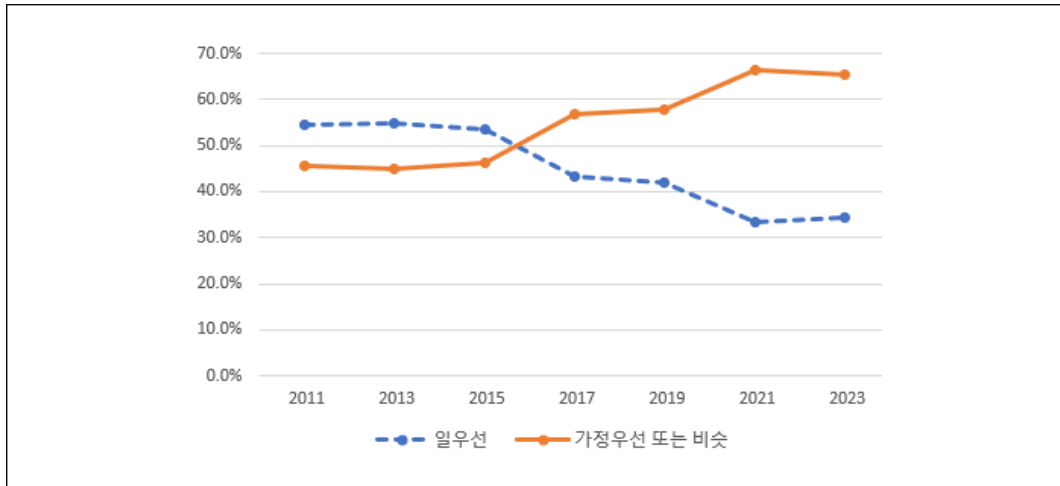
주: 한계적 소통: 신체적·금전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 국민들의 워라벨 추구 및 농촌 교육 및 문화·여가 수요 증가 대응 필요

○ 국민들의 일보다는 가정,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 증가

〈그림 4-17〉 일 가정생활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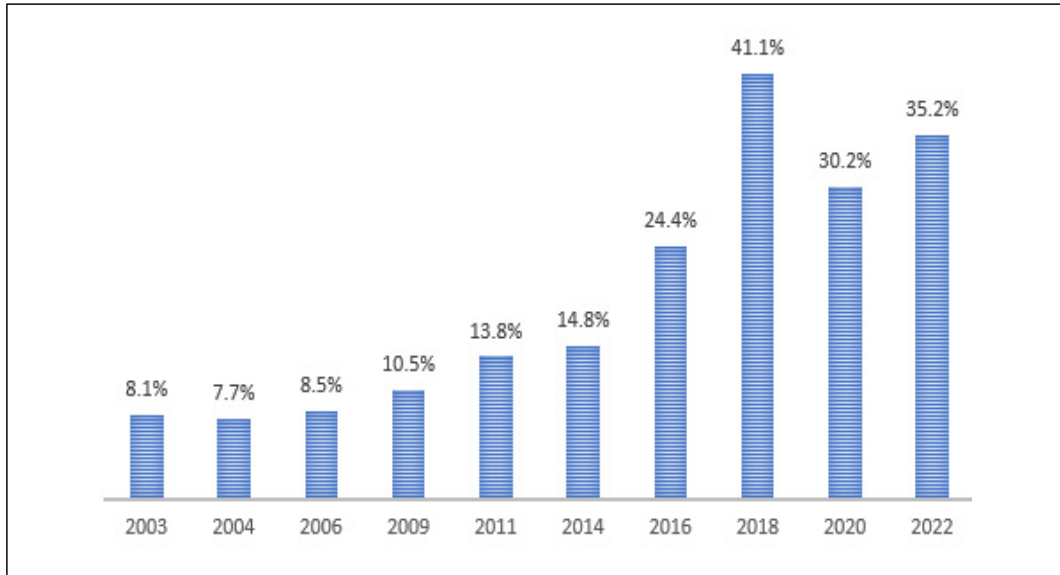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 농촌관광 수요 증가

- 농촌진흥청의 농촌관광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농촌관광(맛집 방문, 둘레길 걷기, 농특산물 현지 거래, 농촌 체험, 농촌 캠핑, 농촌 숙박) 경험률은 35.2%, 광의의 농촌관광(농촌 지인방문, 농촌 관광지 방문 등)을 포함하면 54.8%로 나타났으며, 농촌관광 지출액 총량은 34,24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농촌관광 횟수 및 농촌관광 지출액 총량이 모두 증가

〈그림 4-18〉 농촌관광 경험률 변화(2003~2022)

단위: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관광실태조사(각 연도).

○ 대안적 교육(농촌 유학 수요 증가) 수요

- 농촌유학은 도시 거주 초등학생(또는 중학생)이 6개월 이상 시골 학교로 전학하여 농촌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며 생태와 농촌 공동체에 대해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2003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역별 농촌유학센터를 선정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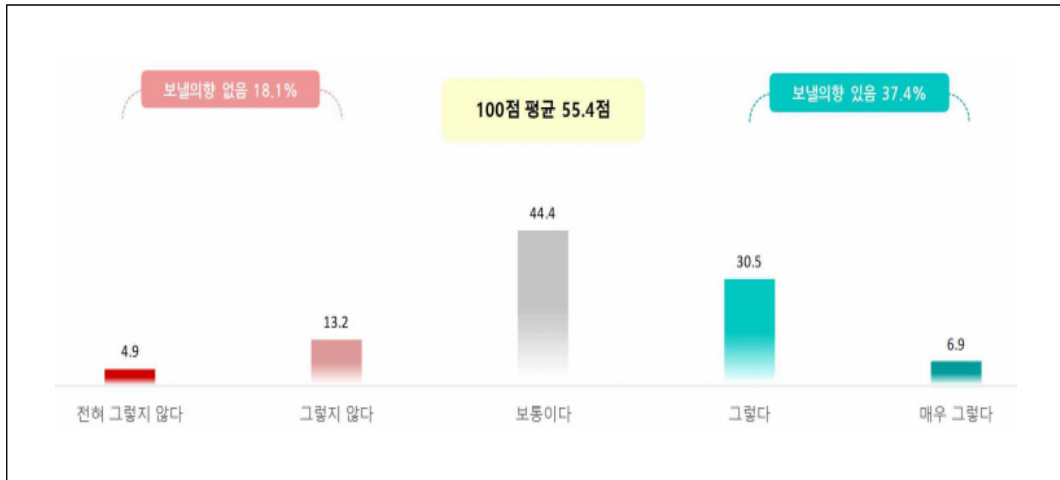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2021)에 따르면, 2010년부터 3곳의 농촌유학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29개의 센터를 지원 중이고, 농촌유학 참여 학생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전국 농촌유학생 현황: ('12) 103명 → ('17) 216 → ('21) 320

- 또한 수도권 거주 초·중·고등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농촌유학에 보낼 의향이 있는 학부모(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37.4%, 보통은 44.4%, 보낼 의향이 없는 학부모(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18.1%

- 자녀를 농촌유학에 보내고 싶은 이유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식생활'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교육' 27.2%, '부모와 떨어져 생활함으로 자립심 향상' 23.0%,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사회성 발달' 10.2% 순

〈그림 4-19〉 수도권 초중생 학부모의 농촌유학 수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2021).

□ 청소년, 청년 세대의 농업·농촌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 부족 대응

○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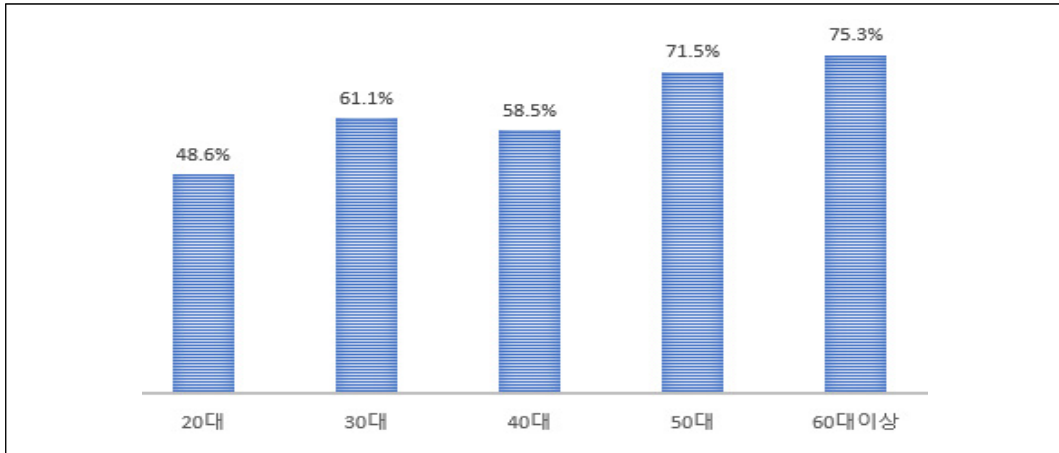
- 농업·농촌에 대한 평소 관심이 낮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낮게 인식하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인정 비율이 저조(김동훈·박혜진, 2022)

* 농업·농촌 관심 비율 : 관심 있다(30.8%), 관심 없다(32.8%)

** 자신과의 관련성 인식 비율 : 관련 있다(27.5%), 관련 없다(34.0%)

***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인정 비율 : 20대(48.6%), 50대(71.5%), 60대 이상(75.3%)

〈그림 4-20〉 연령대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지율



자료: 김동훈·박혜진(2022),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 학교 교육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제한적
-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군의 '통합' 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를 통해 계절 동식물에 대한 기본 경험을 하고, 5~6학년 군의 '실과' 교과를 통해 식물 가꾸기, 동물 돌보기, 생활 속의 농업 체험 일부 운영
- 그나마 일부 농업 관련 교육이 동식물 체험위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이후 단계에서는 거의 전무
- 고등학교에서 '농업생명과학'이란 교과가 선택교과로 제공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이 교과를 제공하는 학교는 극소수
- 정규교육과정 외에 민간단체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학교텃밭(도시농업), 농어촌인성 학교, 농촌교육농장, 4H교육, 농촌유학, 학교숲 등의 활동이 진행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은 매우 제한적

4.2.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농어촌 특화 환경 조성

| | | | | |
|------------------|---|----------------------------|--|--------------------------------------|
| 주요 과제 | 1 | 농촌형 교육·문화 사업 확대 | 2 | 교육·문화 주체 육성 및 신 공동체 문화 조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국가농촌교육계획 수립 • 저출생시대 미래 학교 모형 운영 • 읍면단위별 K-농촌문화 브랜드 육성 • 농촌 성인 평생학습 문화예술 프로그램 내실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교사 육성 • 농촌 문화 활동가 육성 • 문화 다양성 시대 신 문화 공동체 조성 | |
| | 3 | 농촌 교육문화 공간 및 서비스 확충 | 4 | 미래형 문화·여가 생태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학교를 세대 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 • 농촌 청년 학교 및 교류 센터 운영 • 농촌 스마트허브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문화·여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 농촌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업 추진 • 농촌문화·여가 정보 통합 서비스 조성 | |

4.2.1. 농촌형 교육·문화 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지역 과소 학교 및 폐교 증가

- 도시의 경우 대부분(92.8%) 학교가 학년당 20명 학급 운영이 가능한 학생 규모였지만, 농촌의 경우 27.4%만이 가능
- 면 지역의 경우 학년당 10명 미만의 과소 학교가 71.1%

〈표 4-34〉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과소화 현황

단위: %

| 구분 | 학생수 | 2010 | 2015 | 2020 | 2023 |
|----|---------|-------|-------|-------|-------|
| 도시 | 30명 이하 | 0.6 | 0.8 | 0.4 | 0.6 |
| | 31~60명 | 1.5 | 1.8 | 2.1 | 2.3 |
| | 61~120명 | 3.4 | 3.7 | 3.9 | 4.4 |
| | 121명 이상 | 94.5 | 93.7 | 93.6 | 92.8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 농촌 | 30명 이하 | 11.0 | 21.3 | 23.4 | 26.5 |
| | 31~60명 | 28.5 | 28.9 | 29.8 | 29.7 |
| | 61~120명 | 26.7 | 22.6 | 19.0 | 16.4 |
| | 121명 이상 | 33.8 | 27.2 | 27.8 | 27.4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계속)

| 구분 | 학생수 | 2010 | 2015 | 2020 | 2023 |
|----|---------|-------|-------|-------|-------|
| 읍 | 30명 이하 | 4.6 | 9.2 | 6.9 | 7.1 |
| | 31~60명 | 13.6 | 13.0 | 15.6 | 16.0 |
| | 61~120명 | 17.9 | 18.6 | 15.8 | 16.0 |
| | 121명 이상 | 64.0 | 59.1 | 61.8 | 60.9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 면 | 30명 이하 | 13.7 | 26.3 | 30.7 | 35.2 |
| | 31~60명 | 34.9 | 35.6 | 36.1 | 35.9 |
| | 61~120명 | 30.5 | 24.3 | 20.4 | 16.6 |
| | 121명 이상 | 20.9 | 13.8 | 12.8 | 12.3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교육부, 학교알리미(각 연도).

○ 학교가 없는 농촌 지역은 폐교 이후 40대 이하 청년 인구의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세대 인구의 감소가 더 심하였고, 그에 따라 고령화가 더 심각한 수준

- 전국 농촌 읍면(1,404개) 중에 초등학교(분교 포함)가 없는 지역 11곳
- 모두 면 지역, 대구·경북 6개 지역(의성군 사곡면·단북면·안사면, 청도군 운문면, 성주군 금수면, 군위군 상성면), 경남 2개 지역(진주시 대평면, 하동군 양보면), 전남(보성군 웅치면), 강원(삼척시 노곡면), 전북(임실군 신덕면)이 1개 지역 분포
- 학교 없는 면 11개교 중 2023년 폐교된 1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의 인구는 평균 1252.4명으로 면 평균(1424.2명)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인구 구성에서 차이 존재(통계청, 2023)
- 학교 없는 면의 경우 60대 이상이 64.7%로 전체 면 평균(38.2%)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

〈표 4-35〉 농촌 면 전체와 학교 없는 면의 인구 구성(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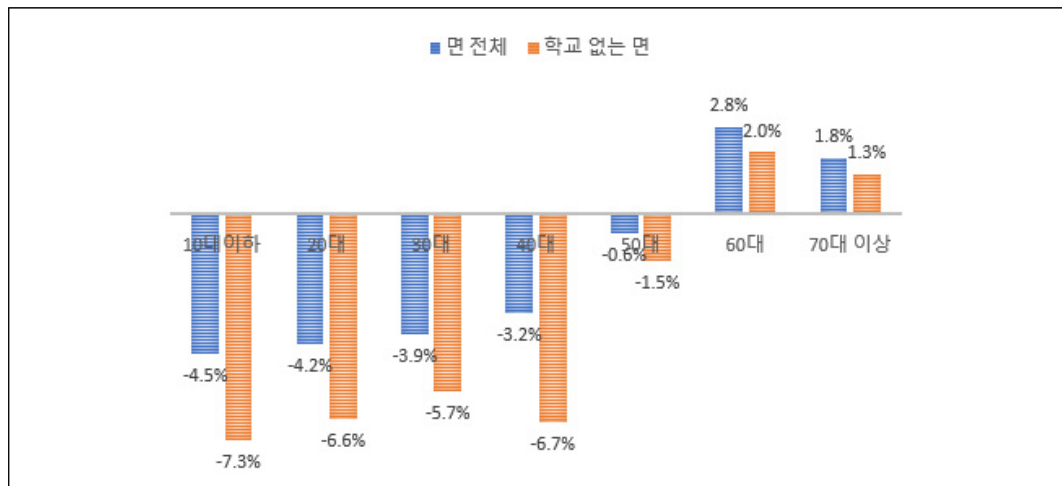
단위: 명, %, %p

| 구분 | 면 전체(A) | | 학교없는 면(B) | | 차이(B-A) | |
|--------|---------|--------|-----------|--------|---------|--------|
|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 10대 이하 | 93.3 | 6.6% | 51.7 | 4.1% | -41.6 | -2.4%p |
| 20대 | 131.7 | 9.2% | 52.0 | 4.2% | -79.7 | -5.1%p |
| 30대 | 144.4 | 10.1% | 51.4 | 4.1% | -93 | -6.0%p |
| 40대 | 199.7 | 14.0% | 77.5 | 6.2% | -122.2 | -7.8%p |
| 50대 | 312.1 | 21.9% | 210.1 | 16.8% | -102 | -5.1%p |
| 60대 | 412.4 | 29.0% | 337.8 | 27.0% | -74.6 | -2.0%p |
| 70대 이상 | 130.6 | 9.2% | 471.9 | 37.7% | 341.3 | 28.5%p |
| 전체 | 1424.2 | 100.0% | 1252.4 | 100.0% | -171.8 | -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3).

- 인구변화율(2010~2023)을 학교 없는 면과 면 평균을 비교해 보면 60대 이상 인구는 모두 증가하였지만, 50대 이하는 모두 감소
- 다만 연령대별 변화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 없는 면에서 특히 40대 이하의 인구 감소 폭이 면 평균에 비해 큰 편

〈그림 4-21〉 농촌 면 전체와 학교 없는 면의 인구변화율(2010~2023)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0~2023).

- 학교 없는 면 지역의 경우 폐교 전과 비교하여 폐교 후에 전입자 수가 평균 27.6명 감소, 50대 이상 전입자가 소폭 증가(50대 1.7명, 60대 6.6명, 70대 이상 0.3명), 40대 이하 전입자는 감소(10대 이하 10.8명, 20대 8.3명, 30대 9.3명, 40대 7.8명 감소)

〈표 4-36〉 학교 없는 면 지역 농촌의 폐교 전후 전입자 수 변화

단위: %

| 구분 | | 폐교 전(A) | 폐교 후(B) | 차이(B-A) |
|--------------------|--------|---------|---------|---------|
| 연령대별 연평균 전입자 | 10대이하 | 21.5 | 10.7 | -10.8 |
| | 20대 | 22.9 | 14.6 | -8.3 |
| | 30대 | 21.2 | 12.0 | -9.3 |
| | 40대 | 23.1 | 15.3 | -7.8 |
| | 50대 | 23.6 | 25.3 | 1.7 |
| | 60대 | 14.6 | 21.2 | 6.6 |
| | 70대 이상 | 12.9 | 13.2 | 0.3 |
| 전체 | | 139.9 | 112.3 | -27.6 |

주: 2001~2023년 전입자를 각 학교의 폐교시점 전과 후로 나누어 평균한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2001~2023).

○ 고령화 및 농어촌 공동체 붕괴 등으로 인해 농촌 전통·향토 문화 기회 제한

- 도시보다 문화공동체 활동이 저조하고, 농촌에서 지역 향토문화를 접할 기회가 도시보다 부족
- 문화 공동체 활성화 관련하여 도시(5.7)보다 농촌(5.0)이 낮았고,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기회 역시 도시(5.9)보다 농촌(5.3)이 낮은 편

〈표 4-37〉 문화공동체, 향토문화 접근성 관련 도·농간 비교

| 조사 연도 | 문화 공동체 활성화 정도 ^a | | 향토문화 접할 기회 충분성 ^b | |
|-------|----------------------------|-----|-----------------------------|-----|
|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 2019 | 5.3 | 5.1 | 5.9 | 5.6 |
| 2020 | 5.7 | 4.7 | 5.7 | 4.6 |
| 2021 | 5.9 | 5.2 | - | - |
| 2022 | 5.8 | 4.8 | 6 | 5.3 |
| 2023 | 5.6 | 5.3 | 5.9 | 5.7 |
| 평균 | 5.7 | 5.0 | 5.9 | 5.3 |

주 1) a: 동호회, 소모임 등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2) b: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3) 0: 그렇지 않다, 1~5: 보통, 6~10: 그렇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전통문화산업진흥법」(2023년 제정) 시행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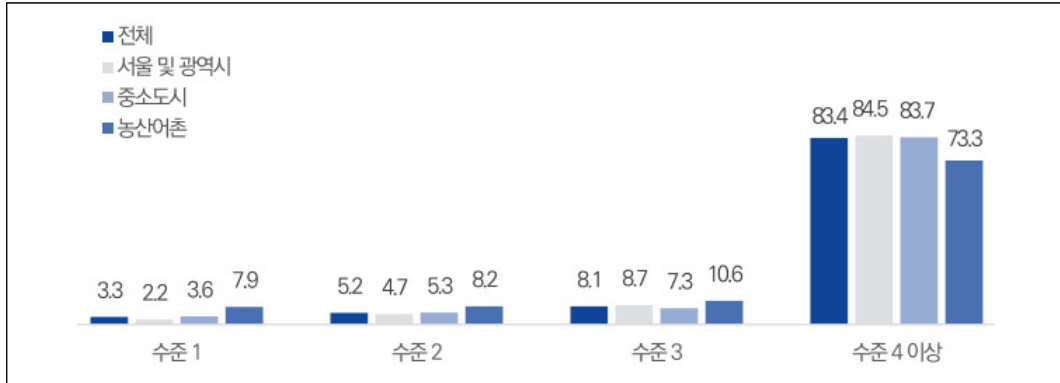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촌의 문해 교육 필요 인구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

- 농산어촌 거주자 중에 비문해 인구(7.9%)가 서울 및 광역시(2.2%), 중소도시(3.6%) 대비 높았고, 농산어촌의 비문해 인구는 226천 명으로 추정
- 중학교 수준의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수준1~3)는 농산어촌의 경우 26.7%(763천 명)으로 중소도시 16.3%, 서울 및 광역시 15.5%에 비해 많은 편

〈그림 4-22〉 지역별 문해능력 수준

단위: %



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2024).

□ 정책 방향

- ‘도시와의 교육 격차 극복’ 또는 ‘도시 학교 따라잡기’가 아닌 농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의 농촌 학교 교육 수요에 대응
- 인구 성장시대에 적정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 모형에서 탈피하여 저출생시대에 대비한 소규모 학교 교육 모형을 농촌에서 실험적으로 추진
- 농촌의 고유성·정체성·특성화를 강화하며 농촌의 매력을 발산할 문화사업 추진
- 성인 대상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교육을 지역사회 참여로 연계

□ 추진 과제

- 중장기 국가농촌교육계획 수립
 -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 설치 운영 중

- 2024년 국가교육발전계획(10년 장기계획)(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의 발표 예정
-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 농촌교육계획 수립: 농촌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환경, 문화, 경제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면서도 디지털 교육 지원, 맞춤형 진학 지원, 교육비 지원, 학교 내 입시 프로그램 강화, 진학 이후 적응 지원 등 대학진학에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
- 다양한 농촌 소규모 학교 유지 및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저출생시대 미래 학교 모형 실험
- 초등학교의 경우 면 단위 1개 학교가 붕괴될 위험에 있는 지역은 재활성화 추진을 위해 폐교보다는 연계형 학교를 통하여 농촌 지역의 학교가 더이상 폐교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적 기반 마련(예: 별도의 특별법(농촌학교 유지법) 또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농촌 교육 관련한 조항 마련)
- 이를 통해 일정 인구 미만의 농촌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할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 포함
- 소멸위기 농촌 기초 지자체의 경우 교육장의 인사·재정권을 부여하고 임기를 늘려 농촌 교육 혁신을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 동력 부여
- 복식학급 수업 및 초중고 통합 학교 모형 활성화(초중등 교사 및 프로그램 연계 운영)를 시도하고, 농어촌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 육성(특히 군 단위 중·고) 등 추진
-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1군 1농촌유학센터 운영, 우수 농촌유학 인증제 도입 및 농촌유학과 폐교 위기의 농촌 초등학교 활성화 활동과 연계

○ 농촌 향토 및 농경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읍면단위별 K-농촌 문화 브랜드 육성

- 지역의 인물, 설화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생활문화(지명 유래, 지역 대표 음식 등), 역사유산(지역 변천 역사 등) 등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읍면별) 문화 브랜드 육성
- 청년 농촌 문화 활동가 및 농촌 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과 연계
- 국제 농촌 문화 교류 프로그램: 농촌 지역 주민들이 세계 각지의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 예를 들어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고, 외국의 전통 농업 및 문화와의 교류 촉진

○ 농촌 노인대상 문해 교육을 포함한 평생 학습과 문화예술 교육을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 문자해득, 기능문해를 위한 문해 교육을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체제로 연계하고, 농촌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참여 연계
-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생활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K-농촌 문화 브랜드 육성 사업과 연계)을 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참고> 미국 라이프타임 아트(Lifetime Arts)

미국의 ‘라이프타임 아트(Lifetime Arts)’는 주 정부 기관인 전미주예술진흥기관연합회(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y’s, NASAA)와 협력하여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생활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노인을 예술가이자 학습자로 설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전역의 박물관, 공공도서관, 문화기관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예술가가 강사가 되어 일주일에 1회, 90분 이상의 수업을 8회차 이상 진행하고, 수업의 결과를 가족, 친구 공동체에 공유하는 전시나 공연을 진행하여 서로의 작품을 축하하는 활동을 진행.

자료: arte365(검색일: 2024. 7. 16.).

4.2.2. 농촌 교육·문화 주체 육성 및 신 공동체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어업 이외 다양한 직업 종사자, 외국인 유입 확대 등으로 농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융합 어려움과 지역 교육·문화의 구심점 및 역량 부족
- 농촌 청년 다수가 농촌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
 - 사회적 지속가능성 5개 요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다양성, 형평성, 민주적 협치 등의 요인에 대해 ‘관심있다(관심 있음+매우 많음)’는 농촌 청년(삶의 질 66.6%, 다양성 54.6%, 민주적 협치 50.1%)이 ‘관심 없다(전혀 없음+거의 없음)’는 청년(33.5%, 45.4%, 46.6%, 49.8%)보다 많은 편
 - 상호연계와 관련한 관심은 있다는 청년(49.2%)이 없다는 청년(50.8%)보다 적었지만 큰 차이가 없는 편

〈표 4-38〉 농촌 청년의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단위: %, 점

| 지속가능성 요인 |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정도(%) | | | | 전체 | 4점 척도 |
|-------------|------------------------|-------|-------|-------|-------|-------|
| | 전혀 없음 | 거의 없음 | 관심 있음 | 매우 많음 | | |
| 형평성 | 11.4 | 35.2 | 49.1 | 4.3 | 100.0 | 2.46 |
| 다양성 | 12.1 | 33.3 | 46.2 | 8.4 | 100.0 | 2.51 |
| 상호연계 | 13.3 | 37.5 | 42.4 | 6.8 | 100.0 | 2.43 |
| 삶의 질 | 8.8 | 24.7 | 51.1 | 15.5 | 100.0 | 2.73 |
| 지역 민주주의, 협치 | 13.2 | 36.6 | 43.7 | 6.4 | 100.0 | 2.43 |

주: 4점 척도(전혀 없음 1~매우 많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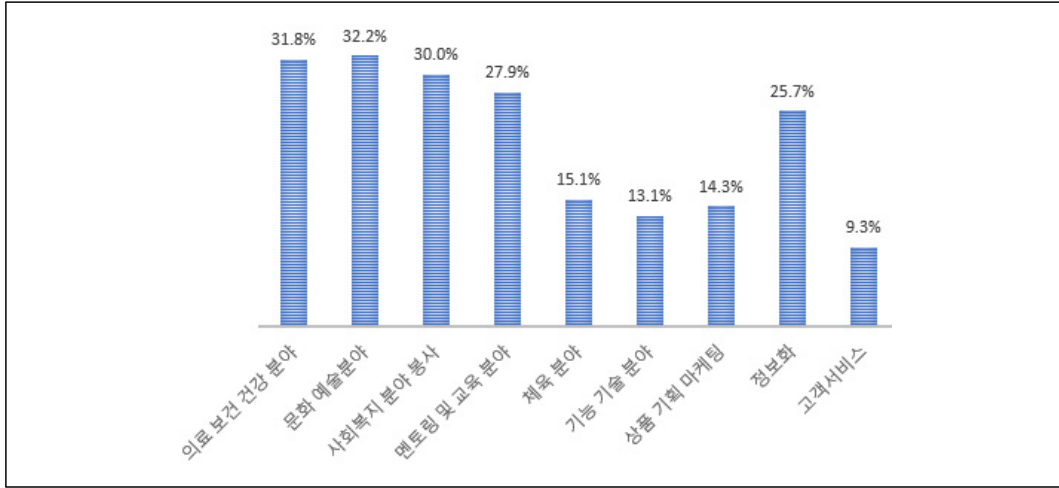
자료: 마상진 외(2023),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2차년도).

○ 청년들의 높은 지역사회 기여 욕구 및 문화 분야 기여 희망

- 농촌 청년 중에 지역 기여하고 싶다는 비율은 82.4%로 현재 지역 기여 활동 수준보다 높았는데, 이는 청년들의 지역 기여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청년들이 지역 기여하고 싶은 분야로는 문화예술 분야(32.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의료 보건·건강 분야(31.8%), 사회복지 분야(30.0%), 교육 분야(27.9%), 정보화 분야(25.7%) 등 순

〈그림 4-23〉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기여 희망 분야

단위: %



자료: 마상진 외(2023),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2차년도).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 새로 시행(2021년)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21년 발표된 1차 계획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 과제 제시

〈그림 4-24〉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

| | | | | |
|---------------|--|------------------------|-------------------------|---------------------|
| 비전 |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 | | | |
| 목표 및 가치 |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생태계 조성 | | | |
| | 차별 시정과 인식 제고 정체성 존중 | 문화 참여와 접근성 접근성, 포용성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창의성, 반독점 | 상호문화 교류 개방성, 상호성 |
|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 | | |
| | 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②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 | | |
| | 2.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 | | |
| | ③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권 보장 ④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 | | |
|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 | | |
| | ⑤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⑥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⑦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 | |
|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

□ 정책 방향

- 도시 및 외국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문화를 중시하는 청년 세대를 농촌 교육·문화 재활성화의 구심적 역할 주체화 육성 및 지원
- 이주 여성농업인,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를 포괄하는 신 농촌 문화 공동체 육성

□ 추진 과제

- 농촌 시·군전담 교사 육성 및 재교육 강화
 -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가 가장 중요
 - 지역 애착과 농촌 교육에 열정이 있는 교사를 시군 지자체 주도로 채용하고 해당 시군에서 일정 기간 근무(기초자치단체 내 교사의 10~15% 정도를 지역트랙으로 선발)

- 인구소멸지역 대응 기금 및 지방비를 매칭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농어촌 지역)의 교원 채용 제도를 재정적으로 지원
- 그리고 이들 교사의 승진이나 수석교사, 연수(대학원 지원 포함) 등의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사(교장·교감) 연수에 농촌 교육 전문성 강화

〈참고〉 호주의 원격지 교육 전략

호주의 New South Wales주 교육부는 농촌과 원격지 교육 전략(Rural and Remote Education Strategy)을 추진(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농촌 청소년들에게 도시만큼의 양질의 교육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 교사 육성 전략을 추진. 양질의 농촌 교사 유치를 위해 농촌 및 원격지 학교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교사 교육단계 학생과 농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행정가들에게 장학금과 인센티브(기본수당)를 부여. 농촌 경험 프로그램(Rural Experience Program)을 통해 정규 교사가 지역 시골 환경에서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 농촌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교장은 한 학년도에 최소 1~4학기 동안 임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료: 마상진 외(2023),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2차년도).

〈국내 사례〉 경기도교육청 지역트랙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농촌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사를 별도 트랙으로 선발하는 지역트랙제를 운영. 초등은 포천과 연천, 중등은 포천 지역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교사는 임용 후 8년간 자신이 뽑힌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교원 수급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료: 중부일보(검색일: 2024. 7. 16.).

○ 농촌 문화 주체(활동가) 육성

- 농촌의 지역자원(자연, 물적, 인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면서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는 소위 농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내부의 내생적 역량 및 혁신 주체 확보 중요
- 중앙과 광역단위로 농촌 문화 활성화 및 공동체 내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하고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문화공동체 매개인력(Communicator)’을 양성하고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구축
- 농촌 지역 기반 문화 인력에게 현장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인력 플랫폼인 ‘지역문화 인재은행’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문화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 지원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PD',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행정안전부의 '지역 활동가 지원사업' 등 유관사업 연계

○ 농촌에서 선제적으로 문화 다양성 시대에 대응한 신 문화 공동체 조성

- 문화 다양성 정책은 지역의 특색을 문화적 가치로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실제로 본인들의 생활로 만드느냐가 중요
-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들의 새로운 농촌문화의 자원으로 활용
- 다문화 농촌문화 축제: 이주 여성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문화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음식, 전통 의상, 음악, 춤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문화 예술 워크숍: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공동의 문화 창작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전통 공예나 음악을 활용한 워크숍 진행 등)
- 문화 교류 교육프로그램: 농촌 지역 학교와 지역 사회 교육 기관에서 다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 자녀와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기회 제공
- 언어 교육 및 지원: 이주 여성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리더 양성: 이주민 중에서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다문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가족센터' 모델 개발 및 지정·운영하고 이주 여성농업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상담·교육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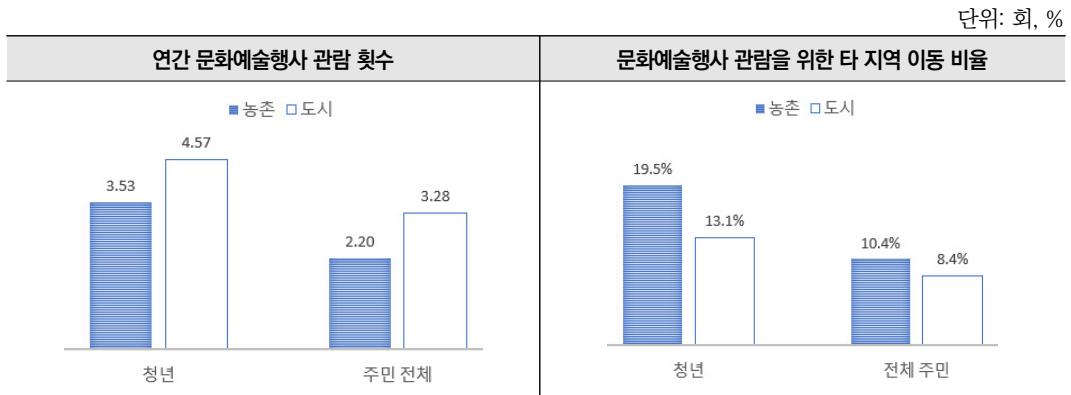
4.2.3. 농촌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의 문화 접근성 여전히 미흡

- 농촌이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빈도가 적은 편
-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²⁾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연간 문화예술행사³⁾ 직접 관람 횟수는 2.20회로 도시(3.28회)보다 적었는데, 청년 세대도 3.53회로 도시 청년(4.57회)에 비해서는 적은 편
- 농촌 청년 중 한 번도 직접 관람 경험이 없는 비율은 33.1%로 도시(20.4%)에 비해 많은 편(문화체육관광부, 2020)
- 농촌은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도시보다 많은 편
- 농촌 주민 중에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타 광역시·도로 이동하여 하는 비율은 10.4%로 도시(8.4%)보다 조금 많았는데, 농촌 청년은 그 비율이 19.5%로 도시 청년(13.1%)과의 격차도 더 큰 상황

〈그림 4-25〉 농촌과 도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및 타 지역 이동 관람 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0).

2) 이 조사에서도 연령 구분이 10세 단위로 되어있어 청년은 20~39세를 의미함.

3)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오페라, 서양 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영화,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 등을 포함함.

- 이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행사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농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낮은 편
 - 농촌 주민의 여가생활 만족도(7점 만점에 4.38점)는 도시(4.53)보다 낮음, 청년의 경우 여가생활 만족 비율이 46.1%로, 도시(57.9%)보다 낮은 편
- * 여가 만족도 7점 척도 기준: 농촌 청년 4.42점, 도시 청년 4.59점

〈표 4-39〉 농촌과 도시의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 | 청년 | | | 전체 주민 | | |
|-------|-----|-------|-------|-------|-------|-------|-------|
| | | 농촌 | 도시 | 청년 전체 | 농촌 | 도시 | 전체 |
| 만족 수준 | 불만족 | 16.7 | 15.3 | 15.5 | 19.0 | 16.7 | 17.1 |
| | 보통 | 37.2 | 26.8 | 28.3 | 36.3 | 29.0 | 30.4 |
| | 만족 | 46.1 | 57.9 | 56.3 | 44.7 | 54.3 | 52.5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 4.42 | 4.59 | 4.58 | 4.38 | 4.53 | 4.50 |

주: 불만족은 7점 척도에서 1~3 응답자, 보통은 4 응답자, 만족은 5~7 응답자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20).

○ 저출생으로 인해 농촌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이후 총 431개의 초등학교 폐교가 발생하였는데, 최근 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 2010~2014년 58개교, 2015~2019년 152개교이던 것이 2020~2024년 기간에 221개교가 문을 닫았으며, 2010년 이후 발생한 폐교 중에 85.6%가 농촌에서 발생하였고, 농촌 내에서도 면 지역(70.8%)에 집중

〈표 4-40〉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폐교 발생 현황

단위: 개, %

| 지역 | 기간 | | | 합계 | 비율 |
|-----|-----------|-----------|-----------|-----|--------|
| | 2010~2014 | 2015~2019 | 2020~2024 | | |
| 동지역 | 4 | 33 | 25 | 62 | 14.4% |
| 읍지역 | 12 | 20 | 32 | 64 | 14.8% |
| 면지역 | 42 | 99 | 164 | 305 | 70.8% |
| 전체 | 58 | 152 | 221 | 431 | 100.0% |

자료: 교육부, 학교알리미(각 연도).

○ 농촌 폐교의 활용 현황

- 폐교 중에 매각 이외 지역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 중에 아직 미활용인 비율은 26.8%

〈표 4-41〉 폐교 활용 현황

단위: 개

| 시도 교육청 | 폐교 학교수 (A=B+C) | 매각 완료 (B) | 보유 | | | |
|-----------|-------------------|--------------|---------------|--------|------|------------|
| | | | 보유 (C=D+E) | 활용 (D) | | 미활용 (E) |
| | | | | 임대 | 자체활용 | |
| 서울 | 4 | 1 | 3 | 0 | 0 | 3 |
| 부산 | 48 | 20 | 28 | 2 | 24 | 2 |
| 대구 | 37 | 20 | 17 | 2 | 15 | - |
| 인천 | 59 | 40 | 19 | 4 | 8 | 7 |
| 광주 | 14 | 8 | 6 | 3 | 3 | - |
| 대전 | 8 | 5 | 3 | 1 | 1 | 1 |
| 울산 | 27 | 10 | 17 | 2 | 11 | 4 |
| 세종 | 13 | 12 | 1 | 0 | 1 | - |
| 경기 | 179 | 58 | 121 | 62 | 42 | 17 |
| 강원 | 479 | 276 | 203 | 121 | 27 | 55 |
| 충북 | 260 | 131 | 129 | 80 | 28 | 21 |
| 충남 | 271 | 216 | 55 | 13 | 24 | 18 |
| 전북 | 327 | 272 | 55 | 9 | 39 | 7 |
| 전남 | 839 | 658 | 181 | 37 | 61 | 83 |
| 경북 | 737 | 496 | 241 | 120 | 67 | 54 |
| 경남 | 585 | 360 | 225 | 94 | 56 | 75 |
| 제주 | 35 | 4 | 31 | 16 | 4 | 11 |
| 계 | 3,922 | 2,587 | 1,335 | 566 | 411 | 358 |

자료: 교육부, 폐교활용현황(2023).

□ 정책 방향

○ 지리적으로 농촌 지역의 요지에 위치하고 교실과 운동장이라는 넉넉한 공간을 갖춘 농촌 학교 및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

- 농촌 학교를 예술시설(영화, 연극, 콘서트 등), 체육시설(테니스, 수영, 실내골프 등), 복지시설(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상업시설(카페, 지역특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 보건의료시설(재택 의료, 방문 간호, 일차 의료, 방문 건강 관리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설), 교육시설(학원, 평생교육, 예체능 교육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있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학교 시설 복합화의 방향

- 물리적 복합화: 학교의 동일 부지 또는 동일 건물 내에 다양한 생활 SOC를 함께 설치하여 토지와 건물을 효율적 활용
- 시간적 복합화: 학생과 주민의 이용 시간대를 분리하여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복합시설 기반의 각종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연계 또는 결합
- 재정적 복합화: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원으로 공동 투자

□ 추진 과제

○ 농촌 학교를 세대 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

- 농촌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게 여건 마련
- 작은 도서관,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 등 문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농촌 학교(폐교)에 우선 설치
- 이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농촌 어르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 마당, 세대 간의 공동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

〈참고〉 상주 '청년이그린협동조합'

상주의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연합하여 만든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이 청년 소통과 마을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 귀농·귀촌 청년 지원 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도자기 공방, 공유부엌, 사무실, 곤충체험전시실, 웹툰 공방, 마을동아리 방, 목공방, 카페식 쉼터, 조합원 주거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

자료: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2019), 지역맞춤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그램 조사.

〈참고〉 울산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울산 상북면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땡땡마을: 상북면에 3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2016년에 상북초로 통합. 폐교된 공근정초등학교는 학생을 위한 체험 중심 예술교육 공간 '다담은갤러리'로 활용. 마을 기반의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 공간과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공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건립 결정. 2019년 교육전문가, 예술인, 교사와 함께 기존 행정 중심이 아닌 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의 학부모, 주민, 마을교육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설립 T/F팀을 구성하여 3월에 기본계획 수립하여 공근정초등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리모델링 함.

자료: 교육부(2022), 행복한 교육 2022년 5월호.

○ 농촌 폐교를 청년 학교 및 교류 센터로 활용

- 도시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한 비빌 언덕 및 청년 교육 문화 활동가 육성의 거점으로 농촌 폐교 활용
- 아직 청년센터가 없는 군지역 지자체 청년들의 교류 센터 및 청년세대 중심의 교육 및 문화를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작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조성 등도 연계

〈참고〉 서천 '삶기술학교'

서천 '삶기술학교'는 도시에서 축제나 공연 등 문화콘텐츠 기획을 하던 청년들이 마을 행사 기획을 하면서 마을이 가진 고유한 매력에 빠진 후 마을에 정착하고 이후 더 많은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와 혁신적인 일들을 벌이며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음. 빈집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농촌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도시청년들을 모집하여 마을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학교를 만든 것임. '삶기술학교'를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시골 마을에 모여 대안적 삶을 추구하며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는 '삶기술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취향 있는 삶(살다), 배움이 있는 일(알다), 혁신이 있는 풀(팔다)을 추구하며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돕는 '청년 성장 지원 코칭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농촌 폐교를 스마트농촌 구현을 위한 스마트허브로 활용

- 스마트 농촌 구현을 위해 읍면 단위별 지역의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원격 의료, 교육 및 문화,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주민 공동 작업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농촌 디지털 허브(Rural Digital Hub)' 구축
- '농촌 디지털 허브(Rural Digital Hub)'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
 - ① (원격근무) 디지털 허브를 통한 스마트 워크 타운
 - ② (의료) 전자의료(원격의료 적용) 센터

- ③ (문화) 다기능 공공미디어 및 비디오와 시네마 센터
 - ④ (교육) 미디어 테크 및 학습 공간(다기능 디지털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학급별 특수 수요 반영, 고령인구에 대한 디지털 교육 실시)
 - ⑤ (농산업) 지역의 소비자, 농민을 위한 유통 및 수집 중심 및 식품 가공
 - ⑥ (농촌관광 및 산업) 농촌관광 및 지역 상품을 위한 전자정부 제공 등
- 그리고 읍면 단위 농촌 디지털 허브 운영에 있어 디지털 기술 사용이 일상화된 청년들의 역할 강화 필요
 - 스마트 농촌 실현과 관련한 소정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스마트 농촌 운영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생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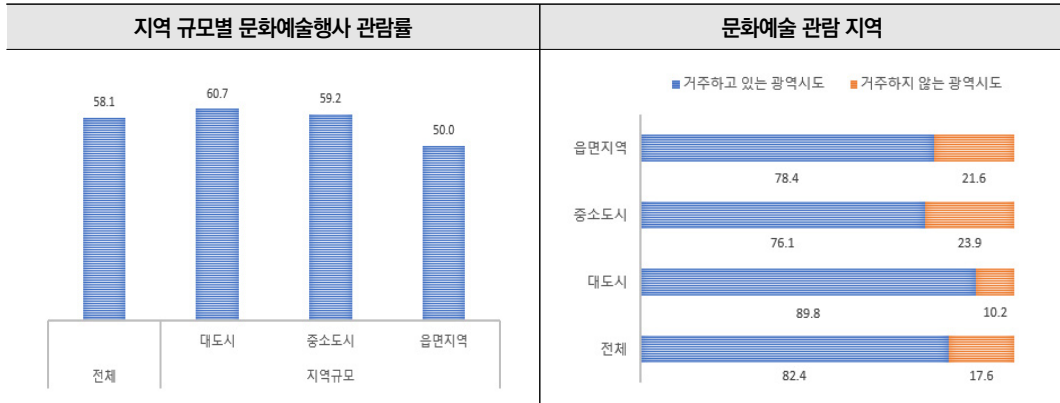
4.2.4. 미래형 문화·여가 생태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2019년 말 기준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 2023년도 기준 문화기반시설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문화체육관광부, 2023)
 - 수도권 3개 시도에 전체 문화시설의 36.5% 분포
- 2022년 기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8.1%이고,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60.7%) 및 중소도시(59.2%)에 비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50.0%)은 낮은 편(문화체육관광부, 2022)
 - 2023년 기준 문화예술행사 관람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관람한 비율이 82.4%이고,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에서 관람한 비율이 17.6%(문화체육관광부, 2023)
 -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 문화예술행사 관람자는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이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높은 편(문화체육관광부, 2023)

〈그림 4-26〉 지역 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지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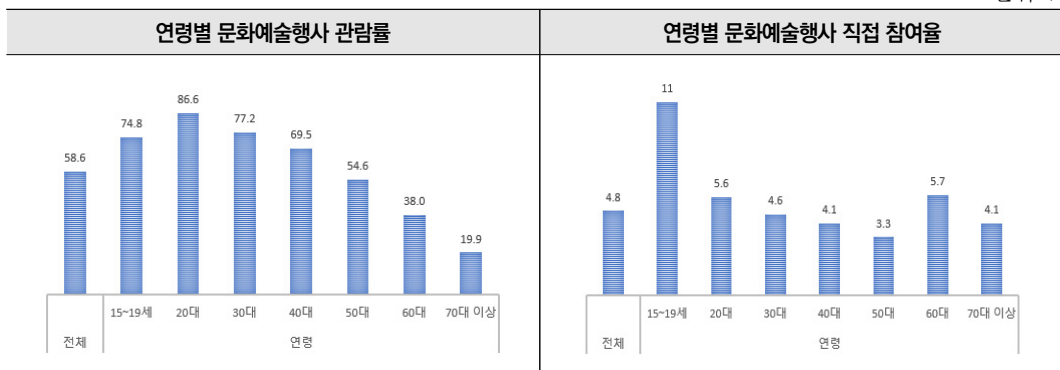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2(좌), 2023(우)).

○ 한편, 문화예술관람은 10~30대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참여 활동은 10~20대 및 60대가 높은 편

- 10~20대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삶의 질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 문화 활동에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 60대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세대로, 문화예술참여 활동에도 적극적

〈그림 4-27〉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직접 참여율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3).

- 여전히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다양한 계층 간 격차 존재
 - 장애인의 문화누림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콘텐츠, 정보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

-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메타버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비대면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시, 공연 및 온라인 콘텐츠 확산 추세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 누림 확대
 - 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 증가에도 비대면 방식이 대면 방식과 공존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창작도 기술과의 융합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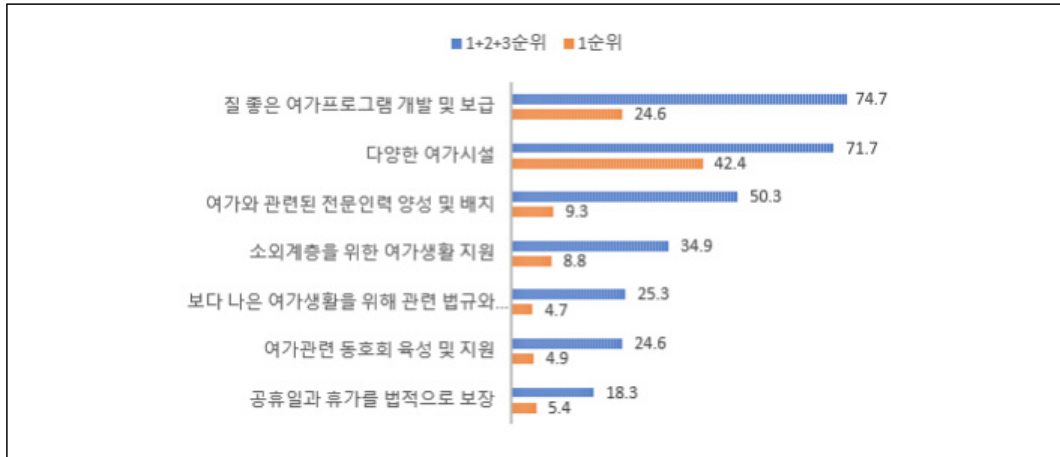
- 비대면·야외 여가 활동 관심 및 참여 증대
 - 2022 여가백서에 따르면 실내보다는 야외·자연에서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책, 걷기와 같이 야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 관찰(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 여가시설 충족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시기 공공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상황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
 - 생활권 주변 문화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대도시 등)과 밀집도가 낮은 지역(중소도시·농어촌 등) 간 공공 여가시설 이용 기회 양극화

-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1순위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다양한 여가시설(42.4%)’,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24.6%)’,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9.3%) 순
 -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1~3순위 기준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여가시설(71.7%)’,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50.3%)’ 등 순

〈그림 4-28〉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인식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23).

□ 정책방향

-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및 인근 도시와 연계·네트워크 강화
- 농촌 유희공간 및 주요 문화·여가 기반시설에 무장애 시설 구축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콘텐츠 제공
- 맞춤형 문화·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농촌문화·여가 활동 지원 및 다양한 현장 정보 조합 제공 및 예약 시스템 조성

□ 추진과제

- 미래 문화·여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활력이 낮은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유희공간 및 문화기반시설을 활용 및 확장하여 권역별 문화지구 등 지정

- 권역별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인력 지원 등 문화활력 패키지 지원
-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기관 주도로 지역 특성(문화자원, 인구구성 등)에 기반한 지역민 및 인근 도시민 간 문화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원
- 농촌 유희시설·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농촌문화·여가시설 확충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콘텐츠를 제공
- 장애인과 노약자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문화·여가 기반시설에 배리어프리 시설 구축 및 수어통역·점자번역 서비스 제공 확대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연장·전시장 등 복합공간 조성

○ 농촌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업 추진

-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은퇴 전문직(교육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자유로운 농촌 문화·여가 경험을 위해 주요 시설에 투어케어인력 배치 및 장애인 전용 투어 운영
 - * 투어케어인력: 관광취약계층의 여행을 돕는 여행동행자 및 무장애 상품 기획 전문인력
- 지역사회의 다양한 농촌문화·여가 자원들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프로그램 운영, 농촌공동체 가치를 통한 사회적 연결 및 관계 회복 제고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농촌의 문화·여가 자원들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대상 문화예술 및 여가 관련 교육 및 활동 지원

○ 농촌문화·여가 정보 통합서비스 조성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농촌문화·여가 콘텐츠 및 현장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AI 기반 데이터 큐레이션 등 사용자 맞춤형 문화·여가 정보제공
- 지역의 문화·여가 관련 데이터 통합 아카이빙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을 통해 '농촌체험 여행상품(위케이션, 촌캉스 등)' 개발부터 홍보, 예약, 운영,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5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 확충

1.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연계성 강화

○ 지자체가 지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 정합성 제고

- 지자체가 농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에 삶의 질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삶의 질 계획 수립 간주
-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통합·포괄 지원으로 지자체 계획의 실행력 확보

○ 지자체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 제도에 기반한 범부처 정책·사업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삶의 질 계획과 농촌공간계획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 농촌소멸 대응·삶의 질 취약지역 해소 우선 지원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촌협약 사업에 범부처 삶의 질 시행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이후 정책지원 시 반영

□ 농촌공간계획제도와 연계 운영을 통한 정책환류 기능 강화

- 삶의 질 계획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시군 현장에서 계획이 작동하도록 연동되어야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를 농촌공간계획과 연계·운영
 - 농촌협약을 정책환류 수단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식품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외 영역에 대해서는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정책협의 가능성을 확대
-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서비스기준 달성도를 일정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해 사업 시작시점(baseline)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이후 정책지원 시 반영(인센티브, 페널티 등)
 - *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 현황과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행실태, 달성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표 5-1〉 농촌협약 대상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 구분 | 사업명 | 지원단가(국비) | 비고 |
|--------------|--------------------------------|-------------------------------|---------------|
| 공간정비 | 농촌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농촌공간정비사업) | 5,000~18,000 (2,500~9,000) | |
| | 축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 3,000(2,100) | |
| | 축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 43,000(30,100) | |
| | 축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악취측정CT기계장비) | 20(10) | |
|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 농촌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 | 15,000(10,500) | |
| | 농촌 일반농산어촌개발(기초생활거점조성) | 4,000(2,800) | |
| | 농촌 취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1,500(1,500) | 연계지원 (가점) |
| | 농정 귀농귀촌활성화지원(귀농귀촌유치지원) | 400(200) | 별도공모 |
|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농촌 농촌휴식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 450(225) | 시도예산 편성 필요 |
| | 동물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영농형태양광자배모델실증지원) | 200(140) | |
| | 농촌 농업관광활성화지원(지역단위농촌관광사업) | 360(180) | 연계지원 (가점) |
| | 농정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 70~90 (35~45) | 별도공모 |
| | 농정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경영실습임대농장) | 429(300) | 별도공모 |
| | 유통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10,000(7,000) | 연계지원 (가점) |
| | 유통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1,080~14,855 (324~8,819) | 연계지원 (가점) |
| | 유통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직매장지원) | 3,000(600) | 별도공모 |
| 사회서비스 확대 | 농촌 농촌형교통모델 | 100~700 (50~350) | 시도예산 편성 필요 |
| | 농촌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 60(42) | 별도공모 |
| | 농촌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마을배움나눔) | 5~20(5~20) | |
| | 농촌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축제) | 10~20(5~10) | |
| | 농촌 농촌보육여건개선(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13(6.5) | 별도공모 |

주: 음영 표시는 2023년 신규 추가된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3년 농촌협약 추진계획(안)”.

2.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및 제도적 지원 강화

2.1.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지정·관리

□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지정 및 지원

○ 지역 소멸 위험이 크고 농어촌서비스 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읍·면을 '삶의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사업들을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 하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촌소멸위험지역 등을 기준으로 농어촌 삶의 질 취약지역 지정

○ (삶의 질 취약지역 지원) 삶의 질 취약지역 대책을 포함하도록 농촌공간계획 수립 유도

- (체계적 지원) 취약지역에 정부 정책사업 우선 지원, 행정·재정적 특례 발굴
- (농촌공간계획 연계) 삶의 질 취약지역 해소 대책을 포함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이 경우 농촌협약 선정시 반영 여부 확인
- (계획-사업 연계)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제도에 기반하여 삶의 질 취약지역 해소 계획과 범부처 삶의 질 사업 간 지원체계 구축

□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상시 협의회 구성

○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에서 확대하여 농어촌영향평가 협의회 기능 등을 포괄하여 상시적 의견 수렴, 자문·심의 등을 담당하는 (가칭)삶의질협의회 구성·운영

- 주요 사안별로 신속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직된 위원회 수준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형태의 열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주요 업무의 실무적 추진 관련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기구로 운영

3.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내실화

3.1. 시행계획 점검·평가 내실화 및 사전협의 연계 추진

□ 시행계획 핵심과제 관리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각 부문 주요 과제의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과제를 구성하고, 별도의 중점 관리체계 마련

○ 핵심과제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과제 중 각 부문을 대표하는 과제를 정책군별 균등하게 안배하여 선정

* (예) 4개 부문 정책군별 1개 과제 선정 시 총 16개 핵심과제로 구성

○ 전체 시행계획 과제와 핵심과제의 평가 방식을 이원화하여 삶의 질 정책 실적 평가를 효율화 하고, 핵심과제의 성과 평가는 정책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심층적으로 수행

- (전체과제) 예산 집행 실적 및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수행

- (핵심과제) 추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와 사례 조사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 병행

* 핵심과제는 연간 추진 실적에 대해 제4차 기본계획의 서면 평가를 발전시킨 심층 평가를 수행

* 핵심과제 중 연차별 동일한 수의 과제를 선정하여 현장 사례 평가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 수행

* 결과적으로 1개의 핵심과제는 매년 심층평가를 치르며,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25~'29) 중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기준과 수행방식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지역평가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점검·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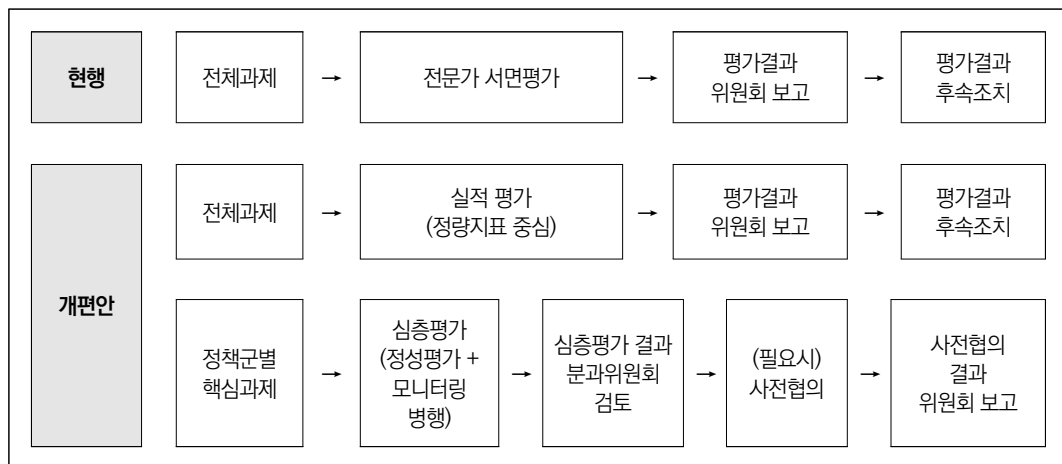
- 핵심과제는 부문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성과를 관리·개선하도록 유도

□ 시행계획 핵심과제 평가 결과와 사전협의 연계 추진

○ 핵심과제 심층평가 결과에 기반한 사전협의 추진

-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 결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정책 성과를 제고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전협의 대상 과제로 선정
-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은 사전협의 선정 과제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조정의 근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
- 사전협의 대상 과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차년도 상반기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그림 5-1〉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편(안)



자료: 연구진 작성.

3.2. 농어촌 영향평가 개편

□ 농어촌 영향평가 목적 및 대상 범위 확대

○ 농어촌영향평가의 목적을 정책 효과의 차별적 발생 개선 및 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명확화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평가

- 현행 농어촌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은 대상 정책·사업의 효과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진단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
- 개편된 농어촌영향평가 수행 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발굴된 후보 과제 중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이를 위해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제1항에 농어촌영향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 필요

〈표 5-2〉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 현행 | 수정(안) |
|--|---|
|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미칠 영향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료: 연구진 작성.

○ 농어촌영향평가의 대상 과제를 한정하는 지침을 삭제하고, 다양한 발생 이슈 및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기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사업 20개 후보과제(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 중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키는 정책·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검토 필요
- 발굴된 후보과제가 다수인 경우,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과 밀접한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결과에 기반한 환류 체계 마련

- 농어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정책 효과가 농어촌 지역에 불리하게 나타날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평가로 수행

〈표 5-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개정(안)

| 현행 | 수정(안) |
|--|---|
| <p>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p> <p>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p> <p>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p> | <p>제4조(대상)</p> <p>-----</p> <p>-----</p> <p>-----</p> <p>1. <삭제></p> <p><신설> 1. 농어촌 서비스기준항목과 관련된 계획·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p> <p><신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서 정한 시행계획 과제 중 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p> <p><수정>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p> <p><신설> 4.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농어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가 여러개인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밀접한 과제를 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우선하여 선정</p> |

자료: 연구진 작성.

□ 수행방식 및 평가내용 개편

○ 농어촌영향평가 심의 기구(가칭 '삶의질협의회')를 통해 대상 과제 선정

- 하반기에 중앙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수요를 조사하여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지자체의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
 - * 수요조사 시, '농어촌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중앙 및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가 해당 여부를 작성토록 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대상과제 발굴

○ 전문연구방식으로 수행되는 현행 영향평가를 체크리스트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절차 구축

- 정책효과의 불리성 파악에 용이한 문항을 개발하여 농촌의 불리한 영향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담당 부처의 협의·조정 내용 중심의 효율화된 평가체계로 재편
- 담당 부처의 후속조치에 관한 협의와 이행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영향평가 결과가 정책 추진과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
 - *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 항목과 점검 포인트에 대응하는 체크리스트와 체크 근거 및 기타 평가 내용을 작성하여, 대상 과제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정책 효과의 차이 또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개발 필요 (<표5-4> 참고, 예시보다 구체화 된 내용으로 재검토 필요)
- 지자체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항목에 기반한 영향평가를 수행
 - * 이 경우 정책사업의 지역 내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에 대해 평가

<표 5-4>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방식 개편 내용

| 단계 | 대상 | 내용 | 방식 | 활용 |
|-------------------|--------------------|-----------------|------------------------|--------------------|
| 대상과제 발굴 (수요조사) | 중앙 및 지자체 사업 담당자 | 대상선정기준 적부 여부 | 체크리스트 | 대상과제 발굴 |
| 농어촌 영향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 | 영향평가 항목 | 체크리스트, 근거 및 기타의견 작성 | 부처 협의 및 후속조치 이행 |

〈표 5-5〉 농어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예시)

| 평가 항목 | | 체크리스트(예시) |
|---------------------|-----------|--|
| 정책 목표 및 수단 | 목표 적절성 | 정책 목표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거 및 의견 기술 |
| | 수단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거 및 의견 기술 |
| 사업 추진 | 예산 투입 | 농어촌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우선추가지원이 포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거 및 의견 기술 |
| | 사업 실적 | 수혜자의 도·농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실적이 추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 대상 인구비와 수혜자 인구비가 형평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거 및 의견 기술 |
| | 정책 성과 |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과 지표가 농어촌 지역에도 유의한 지표로 구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서비스기준 관련 항목인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거 및 의견 기술 |
| 성과 모니터링 | 사업 관리 | 정책 시행 후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거 및 의견 기술 |
| 기타의견 | | 평가자 의견 작성 (ex: 평가한 항목 중 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 등) |

□ 추진 일정 변경

○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앙 및 지자체 사업 등은 통상 1년 단위로 추진되므로, 영향평가 수행 및 후속조치 이행 과정을 이에 맞춘 일정으로 조율

- (현행) 하반기 영향평가 수행 → 차년도 상반기 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 보고 → 차년도 하반기에 후속조치 내용 협의 → 영향평가 결과 반영

- (개편안) 상반기 영향평가 수행 → 상반기 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 보고 → 하반기에 후속조치 내용 협의 → 차년도 영향평가 결과 반영(예산의 경우 상반기에 결정되므로 그 다음 해에 반영 가능)

* 상반기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과제는 전년도 하반기 심의기구를 통해 선정 필요

* 성별영향평가(사업 대상): (해당부처)2월 대상사업 선정 → (해당부처)3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여가부)9월까지 검토의견 통보 → 개선사항 없는 경우 절차 종료, 개선의견 있는 경우 10월까지 반영계획 제출 → 10월~12월 반영계획 관리 → 내후년 성인지예산 반영

〈표 5-6〉 농어촌 영향평가 추진 일정 변경(안)

| 현행 | 시기 및 일정 | 개편(안) |
|---------------|---------------|---------------------------------------|
| - | 전년도 하반기 | 1. 수요조사 및 후보과제 발굴 |
| | 전년도 하반기 심의회 |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3. 시행계획 심의·의결 |
| 1. 후보과제 발굴 | 1차년도 상반기 | 4. 영향평가 수행 |
|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 1차년도 상반기 위원회 | 5. 평가결과 심의·의결 |
| 3. 시행계획 심의·의결 | | |
| 4. 영향평가 수행 | 1차년도 하반기 | 6. 부처 협의 및 후속조치 이행 (+ 차년도 후보과제 발굴) |
| - | 1차년도 하반기 심의회* | 6-1. 후속조치 이행·보고 (+ 차년도 대상 과제 선정) |
| - | 2차년도 상반기 | 7. 후속조치 내용 반영 |
| 5. 평가결과 심의·의결 | 2차년도 상반기 위원회 | - |
| 6. 후속조치 이행·보고 | 2차년도 하반기 | |
| 7. 후속조치 내용 반영 | 3차년도 상반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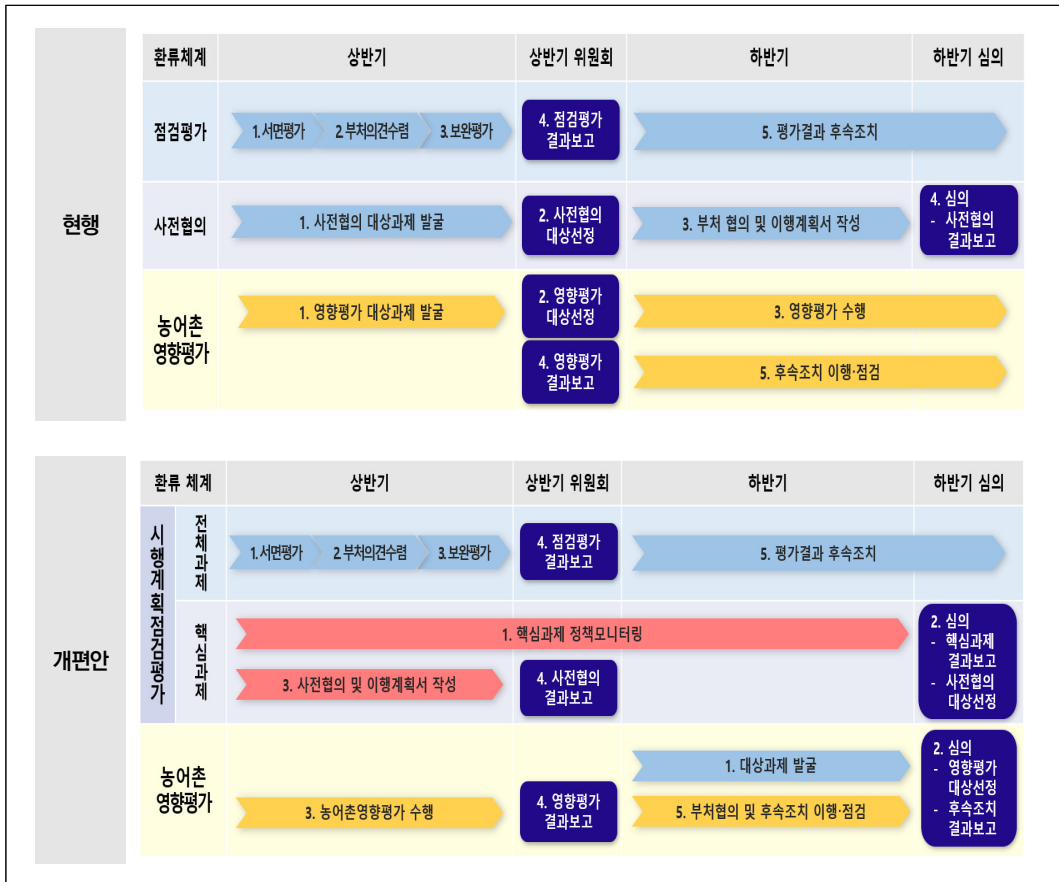
주: 개편(안)의 일정은 하반기 심의기구 구성을 전제로 함.

○ 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하반기 별도 위원회 개최

- 상반기 본위원회에서 차년도 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한다면 비교적 시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하반기에 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상반기 영향평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 별도 심의 기구* 구성

* 영향평가협의회(가칭) 또는 서비스기준협의회와 통합한 삶의질협의회(가칭) 등의 심의기구 운영 필요

〈그림 5-2〉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추진체계 개편(안)



자료: 연구진 작성.

4. 삶의 질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지원 강화

- (가칭) 농어촌 삶의 질 정보관리 센터 운영
- 농어촌 삶의 질 계획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부처 내 정보체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관련 농어촌 삶의 질 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 농어촌 삶의 질 정보관리센터는 개별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자료의 재구축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군의 열악한 재정과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정보체계로 운영
 - 시·군은 농촌 기초자료와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받아 정책에 반영
- 농어촌 삶의 질 정보관리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삶의 질 성과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함
 - 정보관리센터를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삶의 질 계획의 평가와 향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 수행
 - 시·군은 농어촌 삶의 질 자료 및 사업 추진 실적을 제공하며, 정보관리센터는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주민·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역할 수행
- 지자체 삶의 질 계획 이행실태 분석 및 정보 제공 강화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달성 수준을 기준으로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보다는 평균적으로 달성이 되었더라도 지역 내에서 달성되지 못한 취약지역 등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참고문헌

- 경찰청(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202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____(202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운영지침.
-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____(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____(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____(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____(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환경부.
- 교육부(각 연도), 학교알리미.
____(2022), 교육기본통계.
____(2022), “폐교의 무한변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탄생”, 행복한 교육, 2022년 5월호.
____(2023), 폐교활용현황.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4),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보험통계.
- 국토교통부(각 연도), 도로현황.
국토교통부(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____(2023), 대중교통 현황조사.
- 권인혜·나현수·손경민(2022),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인혜·나현수·손경민·이진·오한솔(2023),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범 외(2019), 지역 특성별 농촌 경관 정책 실행력 향상 연구, 농촌진흥청.
- 기상청(각 연도), 기후통계분석.
- 김광선·김남훈·서형주(2019),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성주인·정학성(2023),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전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허주녕·유은영(2018),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남훈·김태완·나현수(2020),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훈·박혜진(2022),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민석(2019),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민석·김태완(2020),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욱·나현수·손경민(2021),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은설·유해미·김재운·박유경(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김정훈·이다겸(2018).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경기연구원.
 김태완(2021),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____ (2022),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____ (202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____ (20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____ (2023),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____ (2023), 2023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촌관광실태조사.
 ____ (각 연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마상진·김연중·김용렬·최재현·김문길·조성은·조성호·우선희·김남훈(2023),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____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____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____ (202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____ (2022), 2022 여가백서.
 ____ (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____ (2023),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
 ____ (2024), 2023 국민여가생활조사.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2021), 농촌유학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민경찬·김민석·유서영(202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 연도).
 ____ (202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____ (2023),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____ (2023), 2023~202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____ (2023),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____ (202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____ (2024),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성주인·김광선·심재현·한이철·서형주·정확성(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송미령·한이철·권인혜·정확성·구자춘(2022),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도채·서형주(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심재현·정문수·한이철·민경찬·정확성(2021),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심재현·한이철·서형주·민경찬(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정문수·김용욱·김민석·민경찬·구본아(2020), 202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성구노인복지관(2024), 내부자료.
- 유은영(2018),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박지숙(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기·성주인·심재현·한이철·유찬희·임준혁(근간 예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 실태분석 및 적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순미·박형호·정확성·정서희·이재경(2024),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김남훈·하인혜(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각 연도), 버스타게편람.
- 정도채·심재현·유은영(2015),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김용욱·김태완·민경찬·유은영·김민석·나현수·손경민·구본아(2021),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 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김민석·민경찬·이진(2022),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정민주·이진. (2023),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민주·손경민(2023), 2023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휘철·신지영·박진한·유인상·신용희(2022), 중장기적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 체계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2019), 지역맞춤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그램 조사.
-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각 연도), 귀농어·귀촌인통계.
- _____(각 연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 _____(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 _____(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 _____(각 연도), 사회조사.
- _____(각 연도), 인구이동통계.
- _____(각 연도), 인구총조사.

____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____ (2024),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기본통계.
 한국교통연구원(2022), 월간교통 2022년 10월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2024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4), 사회적협동조합설립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202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환경공단(2023), 영농폐기물통계조사.
 한이철·이순미·정학성·박대식·안규미(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정문수·권인혜·정민주·민경찬·김민석·나현수·손경민·유서영·이진·오한솔(2023), 제4차 농어
 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____ (2023), 마을기업 운영현황.
 ____ (2023), 재난안전통계연보.
 ____ (2024), 보호구역 지정 현황.
 환경부(각 연도), 상수도통계.
 ____ (각 연도), 하수도통계.
 ____ (2022), 자원순환 분야 투자계획 및 성과 자료.
 ____ (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____ (2024),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후생노동성(2023), 2023년 과소대책 관계예산(令和5年度 過疎対策関係予算).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2020), 2020 대한민국 농촌경제 보고서, NH투자증권.

Bossi, S., Gollner, C., & Theierling, S. (2020). Towards 100 positive energy districts in Europe: Preliminary data analysis of 61 European cases. *Energies*, 13(22), 6083.

<온라인자료>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검색일: 2024. 9. 26.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호, 2025. 1.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호, 2025. 1. 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7. 1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https://www.gggongik.or.kr/>),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검색일: 2024. 7. 20.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https://21erick.org/column/399/>), 2030년 바람직한 미래학교 구상(2): 교육의 목적과 새로운 학교의 설계 원칙, 검색일: 2024. 7. 16.

구미시니어클럽(<http://gumisenior.or.kr/>), 검색일: 2024. 8. 23.
 국민연금관리공단(<https://nsp.nanet.go.kr/>). 국민연금 공표 통계(2023년 12월 기준), 검색일: 2024. 8. 23.
 나라경제(<https://eiec.kdi.re.kr/>), 지역소멸 위기를 기회로! 청년의 삶기술 통해 한산의 DNA 이어간다, 검색일: 2024. 7.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9호, 2024. 12.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7.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 2024. 3. 29.,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7. 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문화다양성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7. 16.
 북지로(<https://www.bokjiro.go.kr/>), 검색일: 2024. 8. 23.
 빈집실태조사(빈집애(愛) 누리집)(<https://binzibe.kr/>), 검색일: 2024. 7. 16.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home/main.do>), 주요현황, 검색일:2024.9.26.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https://saswc.or.kr/biz_05_02), 검색일: 2024. 8. 23.
 아르떼365(<https://arte365.kr/?p=103473>), 변화하는 노인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검색일: 2024. 7. 16.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5호, 2023. 9. 14., 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7. 16.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lemi.or.kr>), 검색일: 2024. 8. 12.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 검색일: 2024. 8. 12.

〈보도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4. 4. 16.), “일본 자율주행 상용화, 어디까지 왔을까?”.
 경향신문(2023. 6. 26), “보건지소 4곳 중 1곳은 ‘공보의 없다’…취약지 의료공백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 6. 1), “디지털을 품은 경로당,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1.12.), “디지털역량교육과 함께라면 배움에 늦음도, 차별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2. 6.),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 6. 30),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군, 신안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1. 31.), “농촌융복합산업 연 매출 31조원, 종사자 38만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5. 24.), “2023년 평균 농가소득, 5천만원 첫 돌파”.
 농민신문(2023.10.16.), “도농 소득격차 심화, 올해 쌀 생산량 감소 전망. 농협경제연구소의 월요브리핑”.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4.3.31.),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식품외식경영(2019.11.20.), “[지금일본은]고령화시대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 이동식 편의점 주목”.

전북도민일보(2024. 5. 3.), “고창군, 농촌협약 437억원·13개 사업 본격화”.

중부일보(2019. 10. 10.), “포천·연천 지역구분 교사 임용제도 개선 필요”.

지방정부 TvU(2019. 1. 10.), “[일본]나가오카시, 버스 대체 자율주행차 시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 2. 2),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2021. 3. 1),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